

녹색연합 15주년 기념 녹색생명 이야기 터

이제, 녹색주의를 이야기 하자

- 일시 : 2006년 6월 27일 (화) 14:00
- 장소 : 명동 청어람 빌딩

녹색생명위원회 · 15주년기념사업위원회



토론회 순서

사회 : 정규호(녹색사회연구소 운영위원,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 녹색생명위원회 취지 및 활동방향 : 박영신(녹색연합 상임대표)

● 주제 발제

· 발제 1 : 한국 저항담론의 변화와 분화 분석 -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 발제 2 : 시민주의, 그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한다. - 임운택(계명대 교수)

· 발제 3 : 녹색으로의 진보, 무엇을 담아야 하나? -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장)

● 지정 토론

· 지정토론 1 :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 지정토론 2 : 최승국(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목 차

발제1. 한국 저항담론의 변화와 분화에 관한 연구

조희연(성공회대학교 교수)

1. 문제제기	1
2. 저항담론의 쟁점들	2
3. 서구에서의 저항담론의 전개 및 그 쟁점 변화	5
4. 한국에서의 저항담론의 전개와 분화	6
1) 80년대 이전까지의 저항담론	6
2) 80년대 이후의 저항담론--급진화의 구현과 사회주의의 부활	8
3) 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의 저항담론 분화와 시민운동의 도전	10
4) 사회주의 붕괴 이후 저항담론 분화 - 비(非)맑스주의적 급진주의 등장	13
5) 지구화의 도전과 응전	15
5. 요약 및 맺음말	20
〈보론〉 21세기형 생태평화 사회민주주의를 향하여	23

발제2. 20세기의 사민주의, 그 가능성과 한계 - 서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임운택(계명대학교 교수)

1. 서구 사민주의의 팽창기	33
2. 사회 자본주의의 건설 - 사민주의의 강화기 1	35
3. 수정주의와 자본주의의 황금시대 - 사민주의의 강화기 2	37
4. 서구사민주의의 위기 - 1960년대	38
5. 자본주의 단계에서 사민주의 프로젝트의 소멸?	40
6. 신사민주의의 실체: 신자유주의와 공동체이론의 절충으로서 제3의 길	41
1) 사회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결합	42
2) 신 사회문제와 실천적 공동체주의의 제안	44
3) 공동체주의와 “경쟁 공동체” (competition communities)의 형성	46
7. 사민주의의 전망	48

발제 3. 녹색 담론, 무엇을 답아야 하나?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소장)

1. 우리는 어떤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51
2. 그 동안 환경운동은 무엇을 했는가?	52
3. 개발동맹과 녹색연대: 담론 구성체	53
1) 개발동맹과 녹색연대	53
2) 개발동맹/녹색연대 정치지형의 변화	56
3) 담론분석의 결과	58
4. 녹색 담론구성체	59
1) 환경담론의 유형: 이념형 연구	60
2) 환경담론의 실제	63
5. 생태 민주주의를 통한 생태적 근대화의 급진화	71
6. 녹색 대안을 찾아서	74
토론문 1.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79
토론문 2. 최승국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83

한국 저항담론의 변화와 분화에 관한 연구

조희연(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 NGO대학원 교수, 사회학)

“혁명은 반혁명을 혁명화한다(Revolution revolutionizes anti-revolution)”

드 브레이

〈순서〉

1. 문제제기
2. 저항담론의 쟁점들
3. 서구에서의 저항담론의 전개 및 그 쟁점 변화
4. 한국에서의 저항담론의 전개와 분화
 - 1)80년대 이전까지의 저항담론
 - 2)80년대 이후의 저항담론--급진화의 구현과 사회주의의 부활
 - 3)87년 이후 민주주의이행과정에서의 저항담론의 분화와 시민운동의 도전
 - 4)사회주의 붕괴 이후의 저항담론의 분화--비(非)맑스주의적 급진주의의 등장
 - 5)지구화의 도전과 응전

〈보론〉21세기형 생태평화 사회민주주의를 향하여

1. 문제제기

인간사회의 체제적 불완전성과 결함은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여러 차원에서 기성의 질서에 대항하는 저항성과 행동주의적 역동성을 표출시키게 된다. 이것은 다양한 실천형태로 표출되게 된다. 이러한 저항성과 역동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다양한 저항성과 역동성 간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며, 이것을 실천적으로 담보할 것인가라는 쟁점이 부단하게 제기된다. 이러한 저항성과 역동성에 대하여 맑스주의를 포함한 급진주의·진보주의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 그것은 한국에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현 시기 저항론적 인식을 보다 풍부화 하고자 한다. 급진주의적 저항담론이라는 것은 각 시기의 사회적 모순에 대응하여 분출하는 저항성을 어떻게 총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역사적 시기에 따라서 이러한 저항성과 역동성의 변화에 따라 급진주의적 저항담론 즉 변혁론이 어떻게 자기 변화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의 분석대상은 급진주의적 저항담론만을 대상으로 한다. 맑스주의는 그러한

급진주의적 저항담론의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성은 이념적 성향에서 보면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저항적 성격을 갖는 다양한 (非)급진주의적인 논의 혹은 자유주의적 논의들도 존재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맑스주의를 포함한 급진적·진보적 논의에 분석을 한정하고자 한다. 80년대 식 표현으로 하면 변혁론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소재 자체가 급진적인 주제는 아니나, 예컨대 시민운동을 둘러싼 논의들은 저항담론의 하나의 소재로 간주될 수 있다. 단지이 경우에도 시민운동을 둘러싼 좌파적·급진적·진보적 진영의 논의를 대상으로 하지, 보수적 논의나 자유주의 진영 내부의 논쟁은 다루지 않는다.

마지막 보론에서 나는 21세기적인 생태평화 사회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논하게 된다.

2. 저항담론의 쟁점들

19세기 말 이후 맑스주의가 변혁론에 있어 ‘지배적인’ 이론이 된 이후, 그리고 그것이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실천적인 성공사례’로 현실화한 이후, 급진주의적 저항담론은 특정한 형태로 논리화되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노동자계급 중심형 혁명모델, 계급 적대 중심형 혁명모델, 국가 중심형 혁명모델(이하 노동자계급-계급적대-국가 중심형 혁명모델이라고 표현한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계급적대의 현실체제로서의 자본주의 타파, 그러한 계급적대체제의 정치적 재생산기구인 국가를 혁명적으로 전복하는 것, 그러한 혁명적 전복의 중심주체로서의 노동자계급이라는 인식이 맑스주의적 혁명론의 중심내용이 되었다. 이러한 모델은 스탈린주의에 의해 교조적¹⁾으로 해석된 후 소비에트 국가권력이 강제적으로 보증하는 논리로 독점화된 이후, 여타의 사고를 배제하는 폐쇄형 모델로 고착화되어 갔다. 볼셰비키 혁명을 포함하여 일체의 혁명이 특정한 맥락 속에서 출현한 ‘역사적’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탈(脫)역사화 된 보편모델로 정식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맥락이 배태시키는 저항성과 역동성을 개방적으로 개념화하고 자기화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사회적 적대를 중심으로 하는 저항성과 역동성, 그것의 급진화라는 과제가 급진주의 패러다임 내에

1)기독교의 역사에서 도그마화는 예수의 삶을 ‘역사화’ 하기보다는 부단히 ‘신화화’ 하고 예수에 의해 ‘진리’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 진리의 기록인 성서를 ‘일점일획’도 가감없이 믿고 암송하는 태도로 나타났다. 진실은 이미 ‘확정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그것을 추동하고 적용하면 되는 어떤 태도 속에 언제나 도그마적 사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맑스주의를 포함한 급진주의 내에서도 바로 이러한 도그마화를 둘러싼 내부의 정치사상적 투쟁이 존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실의 변화가 부여하는 새로운 과제 앞에서 급진주의의 ‘정신’을 관철하는 방식 보다는, 이미 맑스에 의해 말해진 바를 ‘진리’로 간주하고 맑스 이후 맑스주의자의 과제는 그것을 ‘적용’하는 문제로 바라보는 태도에 맑스주의적인 도그마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항주체론의 역사도 도그마화의 위험을 뛰어넘어 변화하는 현실에 창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서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일종의 저항담론의 ‘도그마화’ 라고 할 수 있다. “지배적인 형태의 맑스주의에서 당연시되었던 것들, 따라서 우리 역시 당연시했던 것들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의문에 부치려고”²⁾ 하지 않고, 많은 경우 특정한 저항담론적 패러다임 자체를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그마화가 개재되게 된다.

그러나 맑스주의를 포함한 급진주의의 역사는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 모두에서 부단한 자기변화와 혁신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물론 대부분 현실변화가 강제하는 것이었으며, 하나의 쟁취된 현실이 대립물로 전화하고 그 대립물을 새로운 투쟁과제로 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현실 변화에 따라 실천이론은 부단히 자기변화와 혁신을 해왔으며--자체적으로건 강제된 것이건--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게 되는 쟁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저항담론의 쟁점을 아래와 같이 표현해 볼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맑스주의를 포함한 급진주의적 사고 속에서는 주체, 대상, 이슈(모순), 투쟁의 지형이라는 점에서, 노동자계급 중심주의, 국가중심형 혁명, 계급적대 중심주의, 국민국가적 투쟁을 상정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항하여 비(非)노동자계급적 저항성, 비(非)국가주의적 저항성, 생활세계 혹은 비(非)계급적대를 둘러싼 저항성, 지구적 차원의 투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등의 이슈를 둘러싸고 쟁점들이 형성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변혁론 혹은 급진주의적 저항담론의 변화과정은 현실변화 속에서 4가지 변혁론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변화 발전해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배와 투쟁의 현실 변화는 주체인식, 투쟁대상 인식, 모순 및 적대 인식, 투쟁지형 인식 등에서 변화를 촉발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러한 여러 차원의 인식을 형성함에 있어 급진화와 대중화의 두 지향이 각축하면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특정 시기의 저항은 자신의 목표(예컨대 독재 타도 혹은 사회주의 혁명)를 성취하면서 역설적으로 새로운 조건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새로운 조건 속에서 급진화와 대중화를 새롭게 구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조건 속에서의 새로운 구현노력이 없을 때 운동은 퇴조하거나 도그마화 하게 됨으로써 역동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운동은 끊임없이 현실변화(지배변화를 일부로 포함)가 동반하는 도전 속에서 어떻게 부단히 자기급진화의 응전을 하느냐 혹은 대중화의 응전을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응전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대중의 저항성이 구(舊)사회운동의 역동성 속에 포괄될 수도 있고 새로운 운동의 역동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2)이진경, 1997, 『맑스주의와 근대성: 주체생산의 역사이론을 위하여』, 문화과학사, 61쪽.

〈표 1〉 시기별 저항담론의 쟁점과 변화

	지배의 객관적 조건	저항의 객관적 조건	저항주체 인식
19세기	초기 자본주의의 폭력적 성격 강하게 노출	다양한 사상적 조류의 각축	노동자계급 중심의 혁명모델 및 혁명적 공산주의 당(黨)에 의한 권력장악 모델과 여타의 모델의 경쟁. 급진주의 내부에서 맑스주의적 혁명주의가 점차 지배적인 되어감.
19세기 후반-러시아혁명	자본주의의 독점화와 제국주의화. 1917년 러시아혁명.	맑스주의가 지배적 혁명이론이 됨	러시아혁명의 성공을 통하여 맑스주의적 혁명주의의 '유일한' '현실' 모델로 볼셰비키혁명이 설정됨. 노동자계급 중심 혁명론의 지배화(노동자계급 중심주의,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 강조), 국가중심형 혁명론, 혁명의 목표로서의 계급적대의 극복.
러시아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군국주의적 파시즘화. 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의 강화	맑스주의에 기초한 러시아혁명의 현실화. 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동력의 다양화	볼셰비키혁명모델(노동자계급-계급적대-국가 중심형 혁명모델)의 일반화. 당의 볼셰비키화. 레닌주의적으로 정식화된 맑스주의적 혁명주의가 급진주의를 대표함. 저항은 곧 혁명으로 인식됨. '계급 대 계급 전술'. 점차 반제민족해방운동을 중심으로 비노동자계급의 저항성, 비계급문제적 이슈의 혁명에서의 중요성이 인식되게 됨.
파시즘 대두 이후	자본주의의 군국주의화 및 파시즘화	반파시즘 인민전선의 등장. 민족해방 통일전선의 등장.	반파시즘 인민전선론의 등장. 식민지에서의 반제민족해방 통일전선론. 볼셰비키형 혁명모델의 역사화와 상대화. 통일전선형 혁명모델의 등장. 비노동자계급의 저항성과 비계급문제적인 저항성이 혁명론에 내부화하게 됨. 혁명주의적인 흐름이 지배적이면서 그 내부에서 볼셰비키형 모델과 통일전선형 모델의 분화.
2차 대전 이후	사민당의 집권당화와 포디즘 시대의 개막	1968년 5월 혁명. 다양한 반권위주의, 반관료화운동의 부상. 소련 체제의 문제점 노정.	비혁명주의적 급진주의의 다양화. 국가주의적 혁명전략에 대한 도전. 구좌파적 사회운동과 구별되는 신좌파적 사회운동의 등장. 비노동자계급의 저항성 주목. 계급해방의 과제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해방의 과제와 저항성이 주목되기 시작(소수자, 인권, 여성, 환경 등). 맑스주의 입장에서는 계급적대로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저항성의 급진적 전유의 문제가 부각됨.
사회주의 붕괴와 지구화의 진전	사회주의 붕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진전	국가중심모델의 의문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와 그에 대한 저항의 출현.	국가주의적 혁명전략의 전환. 지구화의 진전에 따르는 저항의 세계성의 문제 부각(일국적 저항주체 설정에 대한 도전). 지구화는 민족국가적 차원에 의해 억압된 소수자의 문제, 민족국가 이하(sub-national)한 차원의 독자성과 저항성이 주목되게 됨. 민족과 국가에 의해 억압된 저항성의 재발견. 동시에 지구적 차원에서의 저항성과 그 연대 문제가 새롭게 고민되게 됨.

3. 서구에서의 저항담론의 전개 및 그 쟁점 변화

여기서 간단히 서구에서의 저항담론의 변화과정을 일별해보고, 한국에서의 저항담론의 변화에 대해서 서술하여 보기로 하자. 저항담론 혹은 변혁론에 대하여, 다양한 입장이 경쟁하던 19세기 초중반의 시기를 거쳐 맑스주의가 저항담론에 있어 지배적인 흐름을 차지하게 되면서, 저항의 최고의 형태는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국가’ 중심형 ‘계급’ 혁명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혁명의 성공 이후, 이러한 ‘노동자-계급적대-국가 중심형’ 혁명모델은 일반적 모델로 인식되었고, 단지 그러한 변혁론의 틀 내에서 노동자계급의 주도성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계급계층과의 통일전선을 강조하느냐의 두 가지 흐름으로 분화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반제민족해방운동과 반파시즘 인민전선의 등장은 노동자계급-계급적대 중심의 혁명모델에서 비노동자계급과 비계급적대를 중심으로 하는 저항성을 혁명이 포괄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혁명론 내부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유럽에서의 반파시즘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중국에서의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론은 이전의 불쇄비키형 혁명모델을 상대화시키면서 ‘노동자계급-계급적대’ 중심형 혁명모델을 확장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20세기 전반기의 저항담론을 평가하게 되면, 급진주의적 저항담론 내부에서의 맑스주의의 지배화와 그 불쇄비키형 혁명의 성공은 한편에서는 급진화의 경향을 변혁세력 내부에서 결정적으로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급진화의 경향을 극단화함으로써 대중화의 문제의식을 봉쇄하고 다양한 좌편향적 실천을 결과하였다. 불쇄비키 혁명론의 지배화 속에서도 제국주의적 지배의 조건과 파시즘의 등장이라는 조건 속에서 통일전선론이 부상하는 것은, 저항담론의 내재적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불쇄비키형 일반 혁명모델의 경험적 적용의 문제로 왜소화되어가던 저항담론의 문제의식을 대중화의 관점에서 확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이전의 변혁론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국민국가적 혁명 지형과 ‘국가’ ‘혁명’ 주의적 입장을 공유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차대전까지의 급진주의적 저항담론에 기초한 변혁세력의 실천은 서유럽에서의 사회민주당이나 노동당의 집권, 동유럽에서의 공산당의 집권을 포함한 ‘사회주의체제’의 형성을 성취하는 단계로까지 ‘성공’ 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성공’이 저항운동을 새로운 조건 속에 위치시킴으로써--급진화와 대중화의 지향을 새로운 조건 속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을 포함하여--새로운 응전을 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의 전 과정은 ‘성공’의 도전에 대하여 급진주의적 저항담론과 실천이 ‘응전의 실패’를 행함으로써, 대중의 역동성은 구(舊)사회운동이 아니라 ‘신’ 사회운동으로 표출되게 되며, 사회당 정권이나 공산당 정권 자체의 퇴조를

경험하게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저항담론과 실천의 견지에서 보면, 2차대전은 한편에서 이러한 20세기 전반의 저항담론에 기초한 혁명이 성공하면서 일국사회주의가 사회주의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고전적인 저항담론에 새로운 성찰과 도전이 나타나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계급적대가 아닌 다양한 비계급적 이슈들을 둘러싸고 다양한 저항성이 표출되고 동시에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제계급계층을 중심으로 저항성이 표출되면서, 기존의 저항담론이 재정식화 될 필요가 제기되게 된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노동자계급을 근거로 한--비록 '개량적' 사회민주주의 흐름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사회민주당이 집권당이 되고 그 집권당이 자본주의적 '국가'의 행정적기능적 담지주체가 되면서, 국가적사회적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 의해 억압되고 있었던 다양한 저항성들이 비국가주의적 혁명의 전망을 가지면서 비노동자계급, 비계급적대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표출되게 된다. 2차 대전 이후의 과정을 종합한다면, 2차 대전 이전까지의 투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성취한 새로운 조건 속에서 새롭게 자기급진화와 대중화를 성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응전을 하지 못함으로써, 대중의 역동성은 구(舊)사회운동이 아니라 '신' 사회운동으로 표출되게 되며, 사회당 정권이나 공산당 정권 자체의 퇴조를 경험하게 된다.

20세기 말에 나타난 사회주의 붕괴와 지구화의 현실은 기존의 저항주체론의 재정식화의 과제를 더욱 부각시키게 된다. 사회주의 붕괴는 2차 대전 이후 전개되어온 비국가주의적비노동자계급적비계급적대적 저항성을 포괄하는 형태로 기존의 저항담론이 어떻게 재정식화 되어야 하는 가를 시급한 과제로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구화의 새로운 현실은 한편에서는 이러한 비국가주의적비노동계급적비계급적대적 저항성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저항담론의 일국적 한계를 뛰어넘어 지배의 지구화에 대응하는 저항의 지구화를 실현하여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구화는 급진주의적 저항담론이나 변혁세력에게 있어 쇠퇴나 재부활이냐의 전혀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4. 한국에서의 저항담론의 전개와 분화

이상에서의 서구적 맥락에서의 급진주의적 저항담론, 특별히 맑스주의적 변혁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쟁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이를 기초로 한국에서의 해방 이후의 저항담론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자.

1) 80년대 이전까지의 저항담론

저항주체론에 대한 인식은 한국 권위주의체제와의 투쟁 속에서 변화해왔다.

한국에서 근대적 급진주의와 급진주의세력은 1920년대 등장하기 시작한 이래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통하여 급속하게 성장하여 왔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민족국가의

성격을 둘러싸고 전면적인 투쟁기에 들어가게 되고 사회주의세력, 민족주의세력, 우익 세력, 친일파 세력, 자유주의세력들은 전면적인 정치적·사회적 투쟁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투쟁은 국제전(國際戰)화된 ‘내전’으로까지 발전하였으나 종결을 보지 못하고 남북한 분단체제로 귀결되었다. 이후 남한사회는 극우반공주의가 지배적인 ‘반공규율 사회’³⁾로 재편되었고 우익적 사회로 재편되었고 일체의 급진적인 세력들은 탄압과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속에서 극우반공주의적 인식이 지배적으로 존재하여 왔고 진보주의·급진주의적 운동론과 인식은 불법적인 것으로 탄압을 받았다. 해방공간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를 거친 후, 일체시대부터 확장되어온 급진적인 인식—당시로서 사회주의적·공산주의적 인식·급진민족주의적 인식—은 좌파세력 및 급진세력의 소멸과 함께 공론의 공간에서 소멸되어져 갔다. 당연히 저항담론에 대한 급진주의적 인식도 존재할 수 없었다. 잔존하는 급진적 세력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급진주의적 인식들은 각종 ‘반국가단체’와 친북적 인식으로 규정되어 엄혹한 법적 처벌을 받았다. 한국전쟁 이후 이 땅에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는 공론의 공간에서는 완전한 추방을 받았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급진주의와 관련된 각종 언술과 담론들은 친북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한국전쟁 이후 사회주의를 포함한 급진주의적 세력들은 어렵게 자기 방어적으로 생존하는 수준에 놓이게 된다. 물론 이 시기에 도 비공식적인 소그룹 내부에서 농업협업화론을 제기한다던지 ‘잔류’ 급진세력 내지는 진보적 민족주의세력들 간의 느슨한 네트워크 내지는 교류가 존재하고 있었지마는, 공식적이고 실천연관적인 사회운동론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별히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이나 독립투쟁 과정 속에서 ‘급진화’됨으로써 형성된 이 땅의 구(舊)좌익은 ‘단절’의 역사에 들어가게 된다.

급진주의·진보주의적 세력과 그들이 담지하는 저항담론은 박정희 독재정권과의 투쟁이 심화되는 7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출현하고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극우반공주의사회로 재편된 남한 사회에서 신좌익은 60년대 이후의 독재체제와의 대결 속에서 새롭게 자생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점이다. 나는 60년대 사회운동의 인식을 ‘소시민적’ 인식의 단계, 70년대를 ‘민중주의’적 인식의 단계, 80년대를 민중적·혁명적 인식의 단계로 구분하는데⁴⁾, 70년대 초반까지는 장기집권 반대나 부정선거 반대 등의 ‘자유주의적’ 슬로건을 가지고 저항운동이 전개되었고 72년 유신체제라는 폭압적 정권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저항담론 및 사회운동론적 인식의 심화가 나타나게 된다. 물론 70년대에 이르러 부분적으로 급진주의·진보주의적 저항담론이 등장하게 되나, 이러한 논의가 급진주의적 저항담론이나 혁명론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3)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1장 2절. 한국전쟁과 분단 이후 남한 사회에서 일체의 저항적 세력들이 무장해제되고 반공이 ‘의사합의’ 처럼 간주되는 극우반공주의적 사회로 재편되었는데, 이러한 특징을 반공규율사회로 표현한다.

4) 조희연, 1989, “80년대 사회운동과 사회구성체논쟁”,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1)』, 한울.

저항담론의 한 단계 심화는 72년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의 등장
을 매개로 하고 있다. 60년대 이후의 개발독재의 모순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각종 저
항을 전체주의적 억압체제에 의해 탄압하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이에 대항하는 저항세
력들의 인식도 한 단계 심화되게 된다. 70년대 중후반 ‘민중담론’의 등장은 바로 이를
상징한다고 보여진다. 70년대 후반 등장하였던 민중론, 그 일부로서 민중사회학에서
민중은 개발독재정권 하에서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존재, 경제적으로 착취받는 존재,
문화적으로 소외된 존재로서 특징 지워지는데⁵⁾, 이 민중은 개발독재의 착취·억압·소외
에 의해 고통받는 대중을 의미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고서점에서조차 자취를 감추었던
맑스, 레닌, 모택동이나 일본의 좌파서적들이 일부나마 유통되기 시작하고 맑스주의와
관련된 저작들을 ‘신세대’ 학생운동가들이 탐독하게 되는 것도 이 시기였다. 70년대 후
반부터 출현하게 되는 민중론의 다양한 형태들—민중사회학이나 민중신학, 분단사회
학 등—은 60년대의 비(非)혁명적 인식의 단계를 뛰어넘어 80년대의 혁명주의적 인식
의 단계로 가는 과도기적 인식단계였다⁶⁾.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이 심화되면서 그에
따라 저항론적 인식 자체도 심화되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시기의 민중론은 계급적 분
석이나 혁명적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 일종의 ‘민중주의’적 시각을 깔고 있
었다고 할 수 있다.

2) 80년대 이후의 저항담론—급진화의 구현과 사회주의의 부활

광주민중항쟁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에도 급진주의적 인식이 출현하게 된다. 나는 이
를 ‘혁명적 민주주의’ 인식단계라고 표현 한다⁷⁾. 앞 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세기
자본주의 초기에 서구사회에는 다양한 급진주의 사상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가 19세기
중후반에 이르면서 급진주의 저항사상 내부에서 맑스주의가 지배적 지위를 점하게 되
는데, 한국의 경우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심화되어 가면서 단절되었던 맑스주의가 복원
되는 방식으로 저항사상이 급진화 되어가게 된다⁸⁾. 70년대까지는 맑스주의적인 인식
과 패러다임은 ‘친북적인’ 것으로 ‘금압’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급진주의적 인식은 거의
부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민중항쟁을 경험하면서 인식의 급진화가 나타
나게 되고 투쟁양식도 보다 전투적이 되게 된다. 이런 점에서 80년대 민주화운동 및
민중운동은 투쟁의 전투화와 이념의 혁명화로 특징지워 진다고 할 수 있다.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의 선진적 인사들을 중심으로 맑스주의적 패러다임이 대거 도입되게 되고,

5)한완상, 1989, 『민중과 지식인』, 정우사.

6)조희연·김동준., 1990, “80년대 비판적 사회이론의 전개와 ‘민중, 민중사회학’”, 한국
사회학회 편, 『한국사회의 비판적 인식』, 나남; 김진균·조희연, 1990, “해방 이후 한국
인문사회과학사의 비판적 재검토: 학문적 종속과 민족적·민중적 학문의 전개”, 김진균·
조희연 편, 『한국사회론』, 한울 참조.

7)조희연, 2001, “5·18과 80년대 사회운동”,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민중항
쟁사}, 도서출판 고령 참조.

8)필자는 이를 ‘복원적 태동’ 이라고 표현한다(조희연, 1989, 앞의 글).

정치경제적 체제인식, 외세 인식 등에 있어서 맑스주의적인 패러다임이 광범위하게 도입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는 일제시대로부터 발전된 혁명적 사상들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단절되고 그것이 80년대에 이르러 복원되는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혁명주의적 인식에도 복합적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보여진다.

80년대의 급진주의적 저항담론은 NL(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적 인식과 PD(People's Democracy, 민주민주주의)적 인식으로 표출되었다⁹⁾. NL적 인식은 서구의 역사 속에서 보면 혁명주의적 인식 위에서 반제통일전선을 강조하는 인식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으며, PD적 인식은 맑스-레닌주의적인 혁명주의적 인식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급진주의적 저항사상 내부에서 맑스주의가 지배적인 흐름을 형성한 이후, 그 내부에서는 노동자계급 중심형 혁명과 계급적대 중심형 혁명을 강조하는 흐름이 한편에서 존재하였으며, 반제민족해방운동 및 반파시즘 투쟁과정에서 농민층이나 제국주의적 지배에서 유래하는 급진적인 민족주의적 저항성을 포괄하고자 하는 통일전선론적 흐름이 존재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80년대 중반 이후 NL적 인식은 후자의 흐름에서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PD는 동유럽형 혁명모델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노동자계급-계급적대 중심형 혁명모델을 강조하는 불쇄비키적인 모델을 지향하는 경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80년대 광주항쟁 이후 비합법적인 저항진영 내부논쟁을 띄고 전개되던 '사회구성체논쟁' 혹은 혁명론 논쟁은 학생운동 및 학생운동 출신 노동운동가들 사이에서 전개되었다. 이것은 이후 학생운동 내부에서 자민투와 민민투의 형태로 외화되기에 이르게 된다¹⁰⁾. 80년대 초반 자민투와 민민투의 형태로 NL과 PD의 초기적 형태가 나타났던 시기에 이러한 저항담론은 비(非)혁명주의에 대응하는 혁명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초반의 CA는 레닌의 초기모델, 특별히 1902년 당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의 모델을 전제하고 있었다. CA적 사고를 계승하는 80년대 중후반의 PD적 인식은 동유럽의 '인민민주주의혁명(PDR)론'을 전제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한국적 레닌주의의 입장에서 저항주체론을 사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¹¹⁾. 반면에 NL적 사고는 반미주의적 혁명노선으로서 이는 '미제국주의'에

9)NL은 당시 NLPDR(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을 약칭한 것이었고 PD는 PDR(People's Democratic Revolution)을 약칭한 것이었다. NL과 PD의 인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조희연, 1989, "현단계 사회구성체논쟁의 구도와 쟁점에 관한 연구",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2)』, 한울.

10)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강신철 외, 1988, {80년대 학생운동사}, 형성사; 일송정 편집부, 1988, {학생운동 논쟁사}, 일송정; 일송정 편집부 편, 1988, 『정치노선』, 일송정; 일송정 편집부 편, 1988, 『정치노선』, 일송정; 김용기·박승옥 편, 1989, 『한국 노동운동논쟁사: 80년대를 중심으로』, 현장문학사.

11)PD론적 사고 속에서는 이런 점에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 관철이라는 문제의식과 반파쇼 통일전선이라는 문제의식이 긴장을 일으키면 존재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PD론은 전자의 문제의식이 지배적으로 관철되고 있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반대하는 민족통일전선을 강조하는 노선의 성격을 띄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반제반 봉건 민주주의혁명론의 모델을 깔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론의 한 하위형태로서의 북한 식 모델을 전제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한국에서의 저항주체론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서구에서 혁명적 맑스주의의 현실형태로서 레닌주의적 볼셰비키 모델이 유일하게 존재하던 상태에서 20세기 전반을 거치면서 통일전선형 모델이 현실형태로서 분화되게 되었던 데 반하여, 80년대 한국에서는 이 두가지 모델이 NL과 PD라고 하는 경쟁하는 두 혁명주의 그룹으로 분화되고 그 각각의 혁명모델로서 수용되고 공유되었다고 하는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80년대 초반에서부터 87년까지의 급진주의적 저항담론과 실천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주의운동이나 변혁운동의 ‘단절의 역사’를 극복하고 ‘급진화’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였다고 생각된다. 비록 그것이 단절의 역사만큼 ‘원론적 모습’을 띄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급진주의적 저항담론과 실천은 87년 6월 항쟁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변혁적 지향들을 내재화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물론 80년대에 부활한 이 땅의 혁명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급진주의자들에게 진정한 도전을 그들이—자신들의 희생을 통해서—성취한 민주주의를 통해서 예비되고 있었다.

3) 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의 저항담론 분화와 시민운동의 도전

87년 6월 항쟁은 위와 같은 혁명주의적 흐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반독재민주화 투쟁의 정점이었다. 6월 민주항쟁은 독재정권을 퇴진시킴으로써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시대로 이행하는 분기점이 된다. 6월 민주항쟁은 한편에서는 혁명주의적 인식을 갖는 급진적 민중운동이 일정하게 대중화되면서 기존의 비(非)합법적·반(半)합법적 상태를 벗어나 반(半)합법적·합법적 상태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적 공간의 확장에 따라 비혁명주의적 인식과 주체론이 등장·확산되는 계기도 된다. 87년 이전에는 혁명주의적 세력들이 반독재 투쟁의 주요한 동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혁명주의적 세력 및 인식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주의적 인식이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 것으로 투명되는 지적·사상적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었으나, 87년 이후에는 이러한 지형이 변화되게 된다. 87년 6월 민주항쟁이 6.29선언에 의해서 중단되고 12월 대선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구성하고 있었던 급진주의적 민중운동진영과 온건제도정치세력의 분리, 후자의 분열 등을 계기로 하면서,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가 지배적인 경로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위와 같은 지적 경향성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87년 6월 민주항쟁은 혁명주의적 지향이 지배적이었던 급진주의적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정점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비혁명주의적 세력과 인식이 독립적으로 출현·확산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¹²⁾. 이것을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시민운동의 출현

12) 조희연, 2002, “87년 6월 민주항쟁과 시민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

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비혁명주의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첫째는 자유주의적 인식과 온건진보주의적 인식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며, 둘째는 노동자계급 중심주의·노동적대 중심주의적 혁명주의와는 다른 급진주의·진보주의적 인식과 실천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에서 2차대전 이후 신사회운동의 출현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사회운동이 비록 2차대전 이전의 고전적 모델--노동자계급·계급적대·국가중심형 혁명 모델--로부터의 이탈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비(非)혁명주의적 급진주의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던 데 반하여 한국의 시민운동은--특히 80년대 후반--비혁명주의적 온건보수주의 혹은 자유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87년 이전에는 급진주의가 맑스주의적 혁명주의--물론 그 내부에서는 NL과 PD의 분화가 있지만--적인 것과 거의 동일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주의적 공간에서 급진주의 혹은 진보주의는 곧 맑스주의적 혁명주의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게 되었다. 민주주의적 공간 내에서 온건보수주의·자유주의적 인식과 실천이 독자적으로 분화되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른바 시민운동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NL이나 PD적 혁명주의로 환원되지 않는 생활세계의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급진주의가 출현하게 된다. 물론 87년 이후에도 여전히 강고하게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반공주의는 이러한 급진주의의 지적·실천적 표출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페미니즘적 급진주의, 생태주의적 급진주의, 자율주의적 급진주의 등 다양한 형태의 비(非)'맑스주의적 혁명주의'가 출현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87년 이전에는 20세기 전반기의 서구처럼 노동자계급-계급적대-국가 중심형 혁명주의가 지배적이었다고 한다면, 87년 이후에는 소수자문제, 환경문제, 여성문제, 인권문제 등을 둘러싸고 비노동자계급-비계급적대-비국가중심형 인식과 실천이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이러한 인식과 실천이 새로운 급진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주의나 체제내화 된 온건보수주의적 경향을 드러내느냐를 둘러싼 각축이 존재한다. 예컨대 생태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맑스주의적 급진주의뿐만 아니라 비맑스주의적 급진주의가 출현하는가 하면 온건보수주의, 자유주의적, 생태관리주의적 입장들이 분화되어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과거의 '맑스주의적 혁명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비노동자계급이나 비계급적대를 둘러싸고 출현하는 대중의 새로운 역동성을 어떻게 급진적으로 전유(專有)할 것인가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87년 이전 전투적·혁명적 반독재로 표출되었던 급진주의적 흐름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표출되게 된다. 주제 상으로는 비노동자계급, 이슈 상으로는 비계급적대를 둘러싸고 민주주의적 공간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대중의 저항성은 87년 이후 일차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이고 온건진보주의적인 성격을 띠면서 출현하였다. 초기 시민운동의

의연구소, <기억과 전망> 1호, ; 조희연, 2001, “ ‘종합적 시민운동’ 의 구조적 성격과 변화전망에 관한 연구”, 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한울.

경우는 온건보수주의나 자유주의와 같은 비혁명주의적 입장에서 비노동자계급, 비계급적대, 비국가중심적 운동을 전개하는 운동형태라고 할 수 있었다. 시민운동은 종합적 시민운동에 의해 과잉 대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감시나 시장감시가 주된 시민운동 영역으로 인식되었으나, 시민운동의 발전과정 속에서 다양한 시민적 주체가 참여하고, 계급적대가 아닌 다양한 사회적 적대와 이슈들을 둘러싼 운동들이 분화하게 되며, 비국가주의적 운동론적 인식도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시민운동적 경향이 모두 보수적·자유주의적 경향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0년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초기 보수적·자유주의적 시민운동과 함께, 비노동자계급의 저항성과 비계급적대를 둘러싸고 표출되는 저항성을 급진적으로 전유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들도 출현하게 된다. 진보적 시민운동의 출현 등 이른바 시민운동의 다원화와 다양화 속에 이러한 흐름도 존재하게 된다.

시민운동의 부상에 대하여 급진주의 진영은 다양한 형태의 비판을 제기하였다. 시민운동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소액주주운동이나 다양한 형태의 권력감시운동, 재벌개혁운동 등에 대해서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균열시키는 운동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하고 체제내적 운동이라고 비판하였다¹³⁾. 미국식 운동의 모델을 따르면서 시장·관리주의적 입장으로 경도됨으로써, 체제의 합리화와 선진화에 기여하지 그것이 자본주의적 시장질서 자체의 근본적인 재편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치개혁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인식되는 낙천낙선운동에 대해서도 그것이 기성정당의 인적 쇄신에 기여하였을 뿐, 기성정당의 이데올로기적 폐쇄성이나 부패구조를 근본적으로 척결하는데 이르지 못하였으며 진보정당의 제도정치권 진출에 기여하지도 못하였다고 하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들은 대체로 ‘맑스주의적 혁명주의’ 혹은 급진주의의 입장에서 시민운동이 갖는 온건보수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시민운동에 대한 이러한 ‘외재적’ 비판과 함께, 이른바 시민운동 영역에서 급진주의적 경향이 출현·확대되기도 하였다. 인권운동영역에서의 급진주의적 지향, 환경운동에서의 급진주의적 지향, 생태근본주의적 관점, 생태운동과 결합된 무정부주의의 흐름, 생태공동체운동,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급진주의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특별히 기존의 대변형(advocacy) 운동이나 권력감시형 운동이 기성질서와 성장주의적 가치를 공유하고 거대기구화하여 관료주의적 병폐를 노정한다는 비판적 관점에서, 보다 근본주의적 관점에서 생활가치를 전환하고 근본적인 문화적·의식적·생활적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87년 이후의 시민운동은 맑스주의적

13) 대표적인 글로서 정종권, 2001,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 유팔무·김정훈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2)』, 한울. 여기서 정종권은 시민운동이 자유주의 운동, 관리주의 운동, 미국적 모델을 지향하는 운동, 비(非)신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혁명주의와 구별되는 비혁명주의적 운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다원화와 분화가 진전되면서 그 내부에서 비노동자계급-계급적대-국가중심주의적 혁명주의지향과는 구별되는 급진주의적 지향도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사회주의 붕괴 이후 저항담론 분화 - 비(非)맑스주의적 급진주의 등장

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의 현 시기는 이러한 경향이 사회주의 붕괴 이후 보다 강화되면서 다른 한편에서 지구화의 도전에 따른 새로운 역동성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붕괴는 한국의 지적·사상적 차원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이는 저항담론을 사고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주의 붕괴는 서구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비혁명주의적 인식의 출현, 비노동자계급적 급진주의의 정당화, 비계급적대적 이슈의 독자적 지위에 대한 재인식 등을 가져오게 된다. 사회주의 붕괴는 87년 이전 한국사회운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혁명주의적 흐름에 일정한 충격을 동반하게 된다. 이는 맑스-레닌주의적 혁명주의의 성격을 띄고 있던 PD적 인식에도 도전을 동반하게 되며, 또한 민족적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서의 북한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일반의 정치경제적 문제점이 공유하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NL적 혁명주의에 대한 도전도 나타나게 된다.

또한 사회주의 붕괴의 여파는, 그동안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주의적 모델 속에서 '가리워져 있던'(overshadowed) 새로운 이슈들과 새로운 집단들의 저항성이 주목을 받게 된다. 소수자운동, 외국인 노동자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지역운동, 협동조합운동 등 다양한 운동들이 새롭게 주목받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급진성이라는 것이 이전의 구도에서는 좌우의 구도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 주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혁명적 접근 여부를 떠나서 설정되는 정치적 좌우 구분에서부터, 이제는 급진성·진보성의 차원이 다차원적으로 설정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급진주의적 저항담론의 '다차원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예컨대 페미니즘과 생태주의 등이 하나의 독자적인 차원으로 설정되게 된다. 환경운동 같은 경우 급진성의 잣대 자체가 다른 차원에서 설정되게 된다. 생태주의적 입장에서 급진주의는 환경관리주의적 입장에 대립하여 생태근본주의적 입장으로도 표출된다. 입장에 따라서는 "상호 연결된 자연계에 초자연적 차원을 부여함으로써 신비주의에 유사생태학적 면모를 더하는 이론으로서 반문명적인 경향을 넘어, 인간성 자체를 부인"한다고 비판받는 생태신비주의와 "고귀한 야만"이라는 신화를 만들어 토착민을 천사처럼 고결하고 모범적인 행동과 사고를 지닌 초월적 존재가 되도록 몰아붙이는" 원시주의적 경향을 급진주의적인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회생태주의적 입장을 급진주의적인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¹⁴⁾. 이런 점에서 급진성의 차원이 '독점화'되지 않게 되며 급

14) 머리 북친은 사회생태론 속에서, 사회의 지배구조를 타파하여야만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취지에서, 이성이나 계몽, 과학 자체를 부정하면서 생태

진성의 차원 자체가 복합적인 것이 되게 된다.

노동자계급 중심의 계급적대 운동모델—비록 그것이 갖는 중심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에 직접적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이슈와 운동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는 상황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로서의 보편적 혁명 모델이 아니라, ‘복합적 적대에 기초한 복합적 해방운동’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강화되게 되었다. 이제 계급적대와 노동자계급이 보편적 해방의 담지자가 되느냐하는 쟁점 보다는, 상이한 적대들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노동자계급과 기타의 계급계층의 상호관계는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게 되었다. 물론 혁명적 맑스주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적대를 어떻게 계급적대에 대결하는 운동과 관련시킬 것인가, 다양한 적대에 대응하는 운동을 급진화시킬 것인가 하는 쟁점으로 제기되게 된다.

지적 차원에서 각종 포스트 주의, 그 일부로서의 포스트 맑스주의, 무정부주의, 공동체주의 등 비(非)맑스주의적 저항사상들도 나타나게 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단순히 권력을 체제적 억압으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서서, 생활세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 간에 내재하는 권력관계, 그 권력재생산에 있어서의 지식의 관계 등을 분석하는 푸코의 이론은 이런 점에서 새로운 생활세계의 저항성을 급진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포스트 맑스주의 논의들은 기존의 신사회운동의 개별 실천 속에서 제기되고 있던 논의들을 ‘맑스주의적인’ 총론적인 저항담론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이론과는 다른 문제제기를 담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90년 무렵 포스트 맑스주의적 입장¹⁵⁾이 제기되고 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은 80년대의 PD적 혁명주의의 입장에서 포스트 맑스주의의 논의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PD적 혁명주의의 입장에 선 윤소영 교수는 알튀세리안적 시각에서 기존의 맑스주의적 이론과 실천의 지배적 형태가 변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사회주의 붕괴로 맑스주의적 이론과 실천의 한 사이클이 종결된 마당에, 기존의 맑스주의적 이론과 실천의 모순을 극복하는 혁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맑스주의적 실천의 지배적 형태로서의 노동조합과 당에 대한 재검토와, 맑스주의적 이론의 지배적 형태로서의 교조화된 맑스주의의 재검토를 제안하고 있다¹⁶⁾. 후자의 입장은 PD적 혁명주의를 계승하면서 사회주

신비주의나 원시주의 찬양으로 가는 ‘신비주의적’ 혹은 ‘반인간주의적’ (북친의 표현에 따른다면) 생태환경주의의 여러 조류를 비판하고 있다(머리 북친, 구승희 옮김, 200, 『휴머니즘의 옹호』, 민음사).

15) 한국의 포스트맑스주의의 논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병천, “포스트 맑스주의와 한국사회”, {월간 사회평론} 1992년 8월호; 이병천, “맑스 역사관의 재검토”, 『사회경제평론』 제4호(한울, 1991); 이병천, “세계사적 근대와 한국의 근대”, {세계의 문학} 1993년 가을호. 시민사회론과 관련하여 포스트맑스주의적 사고를 정리하고 있는 글로서는 박형준, 1993, “시민사회론의 복원과 비판적 재구성”, 이병천·박형준 편,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와 포스트마르크스주의(2)』, 의암.

의 붕괴가 던져주는 도전에 응전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면, 한국의 포스트 맑스주의 입장은 기존의 맑스주의가 전제하고 있었던 ‘노동자계급-계급적대-국가중심형 혁명론’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을 ‘맑스주의’의 이름으로 제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상반기 최보은-김규항 논쟁¹⁷⁾은 상이한 적대와 상이한 주체를 상정하고 있는 여성운동과 급진주의적 입장이 대립할 수 있는 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를 대선후보로 지지해야 하느냐’는 쟁점으로 촉발된 이 논쟁 속에서, 우리는 고전적 혁명주의적 급진주의와 여성주의적 입장¹⁸⁾이 대립할 수 있는 지점을 보게 된다. 환경주의적 입장과 노동운동의 입장이 대립되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 동아매립지 계획의 파기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입장과 그것으로 실직하게 되는 노동자들의 이해가 대립되는 사례도 있었다. 발전노조의 민영화를 둘러싸고 민영화를 환경적 관점에서 찬성하는 환경운동의 입장¹⁹⁾과 공공성의 박탈이라는 점에서 또한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행의 관점에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운동의 대립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상이한 차원의 운동적 실천 과정에서 대립적인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이행이라는 맥락 그리고 사회주의 붕괴라는 맥락 속에서 급진주의가 갖는 내적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똑같은 급진주의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비(非)노동 ‘자유주의’ 대 노동 급진주의의 성격을 띤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진보의 여러 차원 간의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게 된다는 점에서, 맑스주의적 혁명주의가 급진주의를 지배하였던 80년대 전반과는 구별된다.

5) 지구화의 도전과 응전

지구화는—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서구에서 그러했던 것처럼—기본적으로 과거의 일국적 혁명주의에서 지구적 차원을 고민하게 하는 계기로 나타나게 된다. 지구화는 기존의 저항모델 혹은 혁명모델이 전제하고 있었던 일국적 관점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변혁의 차원이 국민국가나 지구적 차원이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구화는 급진주의적 저항담론이나 변혁세력에게 있어 쇠퇴나 재부활이냐의 전혀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운동들이 현실변화가 동반하는 새로운 도전 속에서 어떻게 자기급진화의 응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중화의 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저항담론과 실천 속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은 운동의 쇠퇴와 부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구화

16)윤소영, 1992, “한국에서의 ‘맑스주의의 위기’와 한국사회성격논쟁”, 『월간 사회평론』 8월호.

17)〈한겨레21〉 상에서 전개된 최규항과 최보은의 논쟁 참조.

18) 물론 최보은의 경우는 박근혜지지라는 의미에서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적 입장이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19)이 입장은 추후 조정되어 민영화 찬성론에서 후퇴하게 된다.

는 급진주의적 저항담론과 실천에게는 급진화와 대중화의 새로운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사회에서 이러한 지구화에 반대하는 저항성은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표출되듯이, 한국의 저항운동에 대해서도 지구화는 많은 쟁점을 제기하고 그러한 쟁점 속에서 한국의 저항운동 스스로 지구적 저항의 쟁점에 맞닥뜨리게 된다. 첫째 지구화로 인하여 개별국민국가의 정책이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띄게 되고 그것이 민중들의 삶에 파괴적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이 출현·확대되게 된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반대투쟁은 여타의 사회와 달리 대단히 제한되고 점진적으로 고양되는 과정을 밟았다. 이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이행과 지구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전자가 후자에 대한 급진적 비판을 제약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한국에서 지구화의 도전은 자본진영의 요구에 의해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문민정부 하에서 ‘세계화’가 국정지표가 되고 나아가 핵심적인 지배담론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화에 의해 규정되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초는 97년 IMF경제위기를 겪으면서—물론 생산적 사회복지정책과 결합되면서—외자유치 및 금융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처럼 문민정부와 국민정부를 거치면서 이러한 개방화와 세계화 정책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게 되었다. 문민정부와 국민정부를 거치면서 나타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의 정책변화가 거대한 지구적 흐름의 일부로서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규정되는 범지구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한국 저항운동 내부에서도 지구화의 문제가 주요한 저항의제로 부상해 가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저항운동에 있어 지구화의 문제는 문민정부 하에서 UR협상 반대투쟁 및 WTO반대투쟁, 노동법 개정 반대투쟁, 국민정부 하에서의 민영화 및 개방화 정책 반대투쟁 등의 계기를 통해서 의제화 되는 과정을 밟았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구조조정 및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민영화 및 시장의 대외개방 등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60%에 이르는 새로운 현실을 가져오게 되며, 외국인 노동자가 50만에 이르는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지구화가 이전의 노동계급의 국내적 조건마저도 무력화시키면서 노동대중의 다수를 비정규직화하는 조건 속에서, 새로운 투쟁전선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전선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여기에는 이전의 지배체제에 포섭되어 있었던 중간층이 몰락한다는 인식도 크게 작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IMF체제 하에서 이전의 중간층이 대대적으로 몰락하고, 고용형태가 유연화 되면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대되었는데, 한국에서 ‘20: 80사회’ 담론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상징화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것이 저항진영의 대표적인 논의로 수용되었다²⁰⁾.

20)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현시기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파괴적 결과는 단지 ‘20 대 80’ 사회 ‘로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더욱 비참하게 ’ 5 대 95 사회 ‘

민주주의 이행은 87년 이전의 혁명주의적 급진주의를 약화시키게 되는데,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반대로 지구화에 대항하는 급진주의적 인식--부분적으로--을 강화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화는 한편에서 혁명주의적 급진주의를 약화시키면서 저항의 체제내화를 촉진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 지구화의 파괴적 결과에 대항하는 새로운 급진주의의 부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할 수 있다. 99년 시애틀 투쟁을 시발로 하여, 다보스, 워싱턴, 제노아, 예테보리 프라하 등 WTO 관련회의나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회의가 열리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반세계화 투쟁이 전개되었고 이러한 영향 하에서 ASEM 정상회담 기간에 국내에서도 반세계화 투쟁이 조직되기도 하였다. 이런 속에서 90년대 이후 범지구적인 반세계화투쟁의 일부를 이루는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및 민영화 반대투쟁이 급진주의적인 민중진영에 의해서 쟁점화되게 되기 시작하였고²¹⁾, 이것이 사회운동의 공유된 인식으로 자리 잡아가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의 반세계화 투쟁이나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역설적으로 민주화의 억제적 효과로 인하여 급진주의적 경향보다는 다분히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공공성 옹호 투쟁 혹은 공공성 담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외환위기 상황에서 IMF에 반대하는 대규모 폭동과 급진주의적 저항이 나타났던 것과 비교한다면, 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한국에서는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국가위기를 계기로 한 시민사회의 동원’이 나타났고 IMF체제 하에서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대단히 온건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비혁명주의적 지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국제경쟁력 강화정책이나 개방화정책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60년대 이래의 최초의 민선민간정부, 즉 문민정부나 혹은 50년만의 최초의 야당정권인 국민정부에 추진됨으로써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정치적 저항의 희석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한 조건은 지구화의 파괴적 결과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의 급진화를 제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60%에 이르는 노동력의 비정규직화와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87년 이전과 같은 급진주의적 경향이 노동운동의 일부에 국한되는 것은 이른바 ‘저강도민주주의’라는 전략이 한국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지구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쟁점, 국내적·국제적 쟁점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지구화에 맞닥뜨리게 된다. 국제적 쟁점과 관련하여, 지구온난화 등 말 그대로 지구적 쟁점이 등장하게 되고 이에 대응하는 지구적 연대가 형성·확대되게 된다. 중국에서의 사

잘해야 ' 10 대 90 사회 '로 현상화한다고 주장한 황광우 씨의 논의를 둘러싼 흥미로운 논쟁이 있었다(<http://www.kdip.org>).

21)세계화를 둘러싼 사회운동 내부의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창근, 2001,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국제 사회운동 세력의 대응전략 논쟁”, 조희연 편, 『NGO가이드』, 한겨레신문사.

막화 현상은 한국에 황사 현상이라는 형태로 환경위기를 촉발하게 되고 이러한 새로운 현상은 이미 초국민국가적 연대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게 된다고 보여진다. 또한 9.11테러 이후 부시의 반테러전쟁과 그로 인한 일종의 ‘글로벌 공안정국’은 범지구적인 평화운동과 그 연대의 필요성을 강화시키게 된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공격적 군사주의에 기반하여 전지구적으로 진행된 반테러전쟁을 반대하기 위한 국내 여성운동들의 반전평화운동, 국내 시민·민중단체들의 반전평화운동은 평화이슈를 둘러싼 초국민국가적 연대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상기해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단지 ‘국제연대’의 차원을 넘어, 점차 ‘실재(real)’화되어가고 있는 지구촌의 공통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초국민국가적으로 대응하는 문제에 한국의 저항운동이 직면하고 있고 응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지구적 질서는 완결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의 국민국가적 질서체제만으로는 현존하는 지구촌적 문제들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지구적 체제의 형성에 급진적으로 개입하고 이것을 공론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범지구적 성격을 갖는 국내적 쟁점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들이 형성되는데, 특별히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중요성을 갖는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철폐와 고용허가제 도입 등이 저항운동의 현안이 되고 이 이슈를 둘러싸고 시민·노동종교 단체의 광범한 연대가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운동 차원뿐만 아니라 ‘초국민국가적 시민권’의 문제도 제기되게 된다. 자본이동의 지구화가 저임금과 싼 노동조건을 추구하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노동력의 초국경적 이동은 높은 임금을 추구하는 노동의 국제적 이동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국민국가가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반면에, 후자에 대해서는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이중적 기준 적용을 통해서 국내 자본의 착취와 수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국가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지구화시대의 일반적 현상이며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에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구호로서 존재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의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IMF나 WTO체제 문제 등 글로벌 가버넌스 체제의 쟁점화를 포함하여 ‘실재’화되어가는 지구적 차원을 전제로 한 지구적 행위의 필요성을 절감한 한국의 급진주의적 세력들은, 일찍부터 초기부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응전하는 노력들을 행해왔고 그 결과 이런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지구화는 기존의 민족국가적 질서를 상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구화의 급진적 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한 인식과 실천들이 전개되고 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지구화는 자본운동의 세계화로 인한 지구촌의 시장주의적 통합을 가속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구적 통합과정—비록 여러 차원에서 불균등하게 전개되고 여러 차원간의 부정합과 균열(disjuncture)을 내포하고 있지만²²⁾—은 다른 한편에서 민족국가적 질서의 해체적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게 된다. 사실 근대 민족국가는 중앙집중적인 국민국가에 지역자치적·하위민족적 요소들을 융해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억압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정치경제사회생활의 전차원에서 근대국민국가는 표준적인 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요소, 문화들을 억압하는 체제였다. 그러나 이른바 ‘권위의 재분배’ 현상으로 인하여 민족국가적 권한과 권위는 지구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으로 재분배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민족국가적 장악력과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민족국가적 통제 속에서 억압되고 있었던 요소들이 ‘해방’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저항운동은 지구화가 가져오는 민족국가적 질서의 해체적 잠재력을 급진화하려는 적극적인 인식과 실천을 요구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강한 민족주의·국가주의적 인식의 해체적 약화를 위한 문제제기들이 제기된 바 있다. 당대비평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우리안의 파시즘론’ 혹은 일상적 파시즘론²³⁾은 한편에서는 내부의 계급적·정치적 억압의 문제를 넘어서서, 생활세계 속에 내재화된 다양한 억압과 차별, 그 내면화된 기제들을 쟁점화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생활세계적 억압의 한 중요한 기제로서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적 경향을 쟁점화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논의는 지구화 시대 급진주의적 저항담론의 확장지점을 적절히 쟁점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문부식의 조선일보 인터뷰 및 기고 등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문부식의 정치적 투항’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급진주의적 저항담론이 이러한 쟁점들을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일상적 파시즘론은 더 나아가 급진주의적 저항운동 진영이 갖고 있는 교조주의적 경향, 근본주의적 경향, 저항폭력을 용인하는 경향을 비판함으로써 그동안 저항운동의 내재적 문제점을 쟁점화 하였다. 이는 정치적 파시즘에 대한 투쟁에서 혁명적 입장을 가졌던 저항세력의 ‘파시즘적 경향’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급진주의의 ‘보수성’ 자체가 쟁점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운동의 대상만이 아니라 운동 자체를 쟁점화하는 것 역시도 급진주의의 성찰의 대상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구화로 인하여 인권이나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가 확산되도록 하고, 기존의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대한 해체적 담론을 제기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지구화가 내포하는 진보적 잠재력을 급진적으로 전유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지구화라는 맥락 속에서 대중화의 문제의식만이 아니라 급진화의 문제의식을 관철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일상적 파시즘론과는 별도로, 자율주의(autonomia) 흐름²⁴⁾은 지구화의 조건

22)데이비드 헬드, 1991, “민주주의, 민족국가, 그리고 지구촌”, 한상진 편저,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주의』, 사회문화연구소.

23)임지현 외, 2000, 『우리안의 파시즘』, 삼인

속에서 비국가주의적 급진주의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생각된다. 네그리의 논의에 대한 한국적 수용형태로 전개되는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국가주의적 혁명주의, 노동자계급-계급적대 중심의 혁명주의와는 구별되는, 자율주의적 급진주의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네그리의 논의는 한국에서 한편에서는 국가주의적 혁명모델을 넘는 급진주의적 자율주의 모델로서, 다른 한편에서는 지구화에 대응하는 범지구적 저항주체론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진다²⁴⁾. 처음 자율주의의 문제의식은 생산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기존의 맑스주의적 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으며 이것은 사회적 노동자론 등으로 나타났다. 후에 {제국}을 통하여 네그리의 논의가 지구적 저항의 문제의식으로 확장되게 된다고 보여진다. 제국시대의 저항주체로서 다중(多衆, multitude)의 주목도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비국가주의적 저항담론의 성격을 띄는 자율주의적 급진주의의 흐름은 --물론 현재로서 이러한 논의들은 저항담론적 '인식'의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고 '실천'의 차원에서 담지되지 않고 있지만--87년 이전의 '노동자계급-계급적대-국가중심형 혁명주의'와는 구별되는 급진주의가 한국에서도 쟁점화되고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5. 요약 및 맺음말

현 단계 한국사회운동 담론의 혁신적 재구성을 위한 기초로서, 나는 이 글에서 한국의 저항담론의 흐름을 일별하여 보았다. 서구와 한국 모두에서, 저항담론의 전개과정은 변화하는 현실에 의해 계기 지워진, 부단한 혁신과 재정식화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이래 정식화된 혁명적 맑스주의의 패러다임은 '노동자계급-계급적대-국가중심형 혁명주의'의 패러다임이었는데, 나는 먼저 네 가지 쟁점들이 존재하여 왔음을 지적하였다. 그것은 노동자계급과 여타의 저항적 주체들의 관계문제, 계급적대 이외의 다양한 적대와 계급적대의 관계, 혁명의 국가중심주의의 문제, 저항의 일국적 차원과 초국민국가적 차원의 문제이었다. 나는 서구의 저항담론의 변화과정을 이러한 관점에서 간단히 일별하였고 나아가 한국저항담론을 이런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한국에서는 극우반공주의적 조건이 지배적이던 50년대에 진보주의와 급진주의의 전통

24) 최근 자율평론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의적 맑스주의의 논의를 소개하거나, 탈(脫)국가혁명론적인 자율주의 논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된다(해리 클리버, 이택진 옮김, "자율주의적 맑스주의"; 조정환 옮김, "자율주의적 맑스주의의 계급개념", 『자율평론』 2호, <http://jayul.net>). 자율평론 1호 및 2호; 조정환, 2002, 『21세기 스파르타쿠스』, 갈무리 등 참조.

25) 전자의 경우에는 자율평론 등의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며,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네그리의 『제국』의 논의를 확산을 들 수 있다. 조정환의 {아우또노미아--다중의 자율을 향한 네그리}(갈무리, 2003)는 네그리의 해설서적 형식을 띄지만 자율적 맑스주의의 한국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책으로 보여진다.

은 소멸한 상태에 있었다. 한국에서 그나마 급진주의·진보주의적 저항담론이 부활확대되는 것은 박정희 독재정권과의 투쟁과정 속에서였다. 80년 광주민중항쟁을 거친 후, 한국에서는 맑스주의적 혁명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서구에서 노동자계급 중심의 계급혁명을 지향하는 볼셰비키적 혁명모델이 지배적인 모델로 정착한 이후 반제민족해방운동 및 반과시즘운동의 경험이 반영되면서 통일전선론적 혁명모델이 중국과 동유럽에서 현실화되었던 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전자의 흐름에 조응하는 PD적 혁명주의와 후자의 흐름에 조응하는 NL적 혁명주의가 ‘경쟁적으로’ 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에 부활한 이 땅의 혁명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급진주의자들에게 진정한 도전을 그들이—자신들의 희생을 통해서—성취한 민주주의를 통해서 예비되고 있었다.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한국사회가 독재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이행하면서, 한국의 급진주의적 저항담론과 세력은 전체주의적 독재상황이 아니라—비록 불완전하지만—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저항성과 역동성을 어떻게 급진화 하고 동시에 대중화할 것인가 하는 전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80년대 전반기가 맑스주의적 혁명주의가 급진주의 진영 내부에서 지배적이었던 데 반하여, 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민주주의이행이 본격화되면서, 이전의 혁명주의적 흐름은 약화되고 시민운동으로 상징되는 온건보수주의적·자유주의적 중간층 운동이 출현하게 된다. 또한 87년 이전에는 노동자계급-계급적대-국가 중심형 혁명주의가 지배적이었다고 한다면, 87년 이후에는 소수자문제, 환경문제, 여성문제, 인권문제 등을 둘러싸고 비노동자계급-비계급적대-비국가중심형 혁명주의 지향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인식과 실천이 나타나게 된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이러한 사회운동의 분화경향은 더욱 확대되고 지적 정당화를 동반하게 된다. 지적 차원에서 각종 포스트 주의, 그 일부로서의 포스트 맑스주의, 무정부주의, 공동체주의 등 비(非)맑스주의적 저항사상들도 나타나게 된다. 특별히 포스트 맑스주의는 고전적인 혁명주의가 상정하고 있었던 노동자계급-계급적대-국가 중심형 혁명모델의 전환을 ‘맑스주의’의 이름으로 제기하게 된다. 한국에서의 포스트 맑스주의 논쟁은 이러한 포스트 맑스주의적 입장에 대한 혁명적 맑스주의 입장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저항운동 내부에서 고전적인 혁명주의적 급진주의와 구별되는 다양한 급진주의적 경향들이 출현하면서, 급진주의의 다양한 차원간에 논쟁과 갈등도 나타나게 된다. 환경단체와 노동단체의 대립,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대립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90년대 현실화되기 시작한 지구화의 영향은 여러 차원에서 한국의 급진주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지구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민선민간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민영화 및 외환시장 개방 등)이 추구되면서 고용의 유연화,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등을 매개로 하여 이른바 ‘20 대 80사회’가 출현하게 되고 그 결과 지구화의 이러한 파괴적 결과에 대항하는 반신자유주의투쟁 혹은 반세계화투쟁이 저항운동의 중요한 영

역으로 부각되게 된다. 둘째 지구화는 지구온난화 현상과 같은 범지구적 쟁점에, 국내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같은 범지구적인 국내적 쟁점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피억압민족으로서의 오랜 경험, 동질적인 민족으로서 생활해온 오랜 경험은 한국의 저항운동에 있어 일국적 시각을 뛰어넘는 지구적 시각이 대단히 '예외적인'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나 WTO체제 문제 등 글로벌 가버넌스 체제의 쟁점화를 포함하여 '실재'화되어가는 지구적 차원을 전제로 한 지구적 행위의 필요성을 절감한 한국의 급진주의적 세력들은, 일찍부터 초기부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응전하는 노력들을 행해 왔다. 마지막으로 지구화는 기존의 민족국가적 질서를 상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구화의 급진적 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한 과제가 급진주의진영에 제기되었다.

급진주의적 저항사상은 특정한 역사적 형태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변화가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지적·실천적 응전의 형태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맑스주의적 혁명주의 입장에서는 현실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을 맑스주의의 확장 및 혁신의 과제로, 비맑스주의적 급진주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저항담론의 정립노력이 중첩되면서, 각 시기의 모순에 대응하는 인간해방의 실천은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의 급진주의의 흐름을 저항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서구적 맥락에서 전개되어온 저항담론의 쟁점들이 한국사회에서도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저항운동은 이처럼 한편에서 서구적 일반성의 프리즘에 영향 받으면서 동시에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급진주의적 응전을 통해서 발전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의 저항담론이 서구의 일반적인 흐름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한국의 특수성을 일반화함으로써 서구 사회운동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저항담론의 지평을 개척할 지는 한국진보주의자들의 실천 여하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보론〉 21세기형 생태평화 사회민주주의를 향하여

이 부분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인용하지 마십시오.

최근 한국의 저항운동과 저항담론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60년대 이후, 더 소급하면 한국전쟁 이후 진보운동과 저항운동은 피억압자의 지위에 있었고 혹독한 탄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탄압에 저항하는 것만으로도 ‘도덕성’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운동에 대한 위로부터의 탄압은 있을지언정 저항운동 자체에 대한 회화화와 도덕적 도전이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반독재민주세력을 일정 부분 상징하는 국민정부와 참여정부가 성립하고 이러한 정부들, 특히 현재의 참여정부가 국민적 신뢰를 잃고 더 나아가서는 방향성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진보운동과 저항운동이 보수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는 형국이 출현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97년 이후의 “진보”권력 10년”은 저항운동이 기본적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도덕성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다. 이는 87년 6월 항쟁의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4·19혁명은 그것이 ‘돌연혁명’ 모델이었던 것인데 반해 6월 항쟁은 27년간 독재에 의한 혹독한 탄압 속에서 그 도덕성을 축적해 온 모델이다. 그러나 그 후 20여년이 가면서 20년 전의 정신적 에너지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아, 역사의 냉엄함이어!). 이는 거시적으로 보면 역사의 진보적 사이클이 보수적 사이클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적 국면에 우리가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사회운동 위기론은 바로 이러한 전환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독재와 지배권력이 강요한 위기론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제기되는 위기론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남다른 고민을 필요로 한다. 나는 이러한 위기를 패러다임적 위기라고 보고, 여기서 패러다임적 재구성의 방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생태평화민주주의

거시적 차원에서 저항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재적 도전을 염두에 둘 때, 저항담론의 현재적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는 현 단계 저항담론의 대안적 지향을 21세기적 유형의 ‘동아시아 생태평화사회민주주의’(East Asian type of eco and peace-oriented social democracy)로 표현하고 싶다. 생태주의와 평화주의가 사회민주주의가 재구성되는 경로는 생태주의·평화주의의 사회적 확장의 경로가 있고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의 생태주의·평화주의적 재구성의 경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나의 경우, 사회민주주의의 생태주의·평화주의적 확장과 재구성에서 이러한 생태평화 사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²⁶⁾.

26) 사회민주주의와 생태주의의 결합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한다.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을 주장하는 ‘제3의 길’ 론자인 앤터니 기든즈는 {제3의길}(한상진·박찬욱 옮김)

여기서 21세기적 유형의 생태평화 사회민주주의가 의미하는 바를 몇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보기로 하자. 첫째, 21세기적 유형의 사회민주주의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한국사회의 이념지형에서도 사회민주주의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는 보수주의와 개혁자유주의의 기본대립구도 속에 존재하고 있다. 남북 간의 반공주의적 대립은 한국사회의 대안논의의 지평을 협애화하고 있다. 특히 보수주의가 반공주의와 반복주의에 의해서 그리고 개혁자유주의가 지역주의에 의해서 그 발전이 질곡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본대립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나는 한국 민주주의운동과 진보주의의 지평을 사회민주주의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때 20세기적 의미에서의 사회민주주의(혁명적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것)로서가 아니라 19세기 사용되던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민주주의를 말한다. 19세기적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때 이는 개량적 사회민주주의만이 아니라 혁명적 공산주의, 국제주의 등을 포함하였다. 개량과 혁명의 흐름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복합적 지향을 내포하는 혁명적 급진주의로 사회민주주의가 존재하였다. 나는 바로 그러한 복합적 의미의 사회민주주의를 전제로 하여 사회민주주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20세기의 사회민주주의는 서구에서의 개량적 사회민주주의와 동구에서의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혁명적 공산주의라고 개념화하고 있지만)로 분화되고 양자가 모두 국가권력의 담지세력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국가권력화된 사회민주주의는 관료주의와 국가주의, 성장주의, 군사주의의 틀에 얽매이면서 그 생동력을 상실하여 버렸고 지배의 일부로 편제되어 버렸다.

19세기에 맑스주의가 다양한 도전 속에서 긴장을 가지고 존재하였다고 한다면, 19세기 말부터 맑스주의가 지배적인 혁명적 담론으로서 '이론적 패권'을 갖게 되면서,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패권이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국가적 패권'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김, 2001, *생각의나무*)에서 현대 사회민주주의의 5가지 딜레마의 쟁점영역으로, 세계화, 개인주의, 좌파와 우파, 정치적 행위, 생태환경적 쟁점을 지적하고 생태환경적 쟁점과 관련하여 사회민주주의의 생태적 현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그는 현존 사회민주주의의 '현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그것의 20세기적 한계와 왜곡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서구의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자이자 조절이론가였고 현재는 녹색당 유럽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알랭 리피에츠는 그의 최근 책(박지현, 허남혁 옮김, 2002, {녹색 희망 - 아직도 생태주의자가 되길 주저하는 좌파 친구들에게}, 이후)에서, 정치적 생태주의야말로 모든 사회변혁운동의 상이한 입장과 지향들을 종합시키고 조화시키는 '큰 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여기서 '노동운동과 정치적 생태주의 사이의 관계, 생태정치적 전략의 문제, 그리고 사회주의와 정치적 생태주의 간의 화해가 갖는 잠재적인 이론적 근거들'에 대해서 탐색한다. 리피에츠의 논의는 생태주의를 주패러다임으로 한 생태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종합을 이야기하는 셈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굴절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권력화에 따른 왜곡은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와 동구에서의 혁명적 사회민주주의 모두에서 표현되었으며, 이는 일국주의와 군사주의, 국가동원이데올로기화 등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런 점에서 21세기적 유형의 사회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20세기적 왜곡을 성찰적으로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는 사회민주주의는 ‘몰락 이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광의의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표현과도 일치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²⁷⁾.

이러한 20세기적 사회민주주의의 왜곡성을 극복하는 것의 출발점은, 민주주의의 원리 위에서 재구축된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표현이 역설적이듯이, 사회민주주의의 민주주의적 재구축이라고 하는 것도 역설적이다. 그러나 20세기 사회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역사가 민주주의를 도구화하고 수단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없는 사회 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로 달려갔기 때문에 21세기적 과제를 생각함에 있어 회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21세기적 사회민주주의를 논한다고 할 때, 그것은 민주주의를 도구화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의 급진적 잠재력을 사회적 방향으로 확장하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사회주의의 구성적 원리로 내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주의는 민주주의 위에서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19세기적인 ‘사회’민주주의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주의자가 급진민주주의를 내포하는 것이 바로 19세기적 사회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사회민주주의가 민주적 사회주의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의 의미를 담게 될 때, 사회주의적 급진주의자와 민주주의적 급진주의자가 만날 공간을 인정하고 확보하게 된다. 여기서 20세기적 굴절을 다시 상기한다면, 사회주의적 급진주의자와 민주주의적 급진주의자가 만나게 될 때, 사회주의적 급진주의자들이 프롤레타리아의 존재론적 특권을 연역적으로 주장하고 다른 운동을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급진성과 민주주의적 급진성, 생태주의적 급진성, 반전평화주의적 급진성을 인정하고 손을 잡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때 거기에는 다양한 급진적 진보들과 자신을 급진화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진보까지를 끌어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19세기의 사회민주주의 정신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복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20세기를 넘어, 21세기적인 과제를 내포화하는 사회민주주의여야 한다.

사회민주주의의 21세기적인 과제들

27) 이런 의미에서 나는 생태평화 사회민주주의를 넓은 의미에서 생태평화민주 사회주의라고 표현과도 혼용되는 것으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사회민주주의는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고 어떠한 과제를 자기화 하여야 하는가.

첫째,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한 새로운 응전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20세기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사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면서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시장절대주의에 굴복하도록 하고 있다. 혁명적 사회주의는 그 자취도 없는 채로 서구식 시장주의로 매진해가고 있으며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역시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외압 속에서 무력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지향은 현 단계 지구적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21세기적 사회민주주의는 현 단계 지구적 질서 자체의 급진적 재구축을 의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0세기의 맥락에서 서구 사회민주주의세력이 국민국가의 집권세력이 되면서 일국주의의 포로가 되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탈민족국가적인 국제주의에 기초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제 사회민주주의는 단순히 일국적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체제의 차원에서도 구현되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글로벌 가버넌스 자체의 급진적 민주화를 통해서 사회민주주의가 글로벌한 차원에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21세기의 사회민주주의는 20세기의 사회민주주의가 직면하지 못하였던 생태주의와 결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20세기의 맥락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생태주의적 현대화를 하지 못하였다. 20세기의 사회민주주의는 생태주의의 거대한 도전을 자기화하지 못하면서 환경관리주의적 사회민주주의로 전락되어 갔다. 동유럽의 혁명적 사회민주주의는 체르노빌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국가주의와 성장주의의 신화 속에서 생태주의 자체를 사회주의 권력이 억압되는 전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제 20세기적 사회민주주의가 보수주의나 자유주의와 동일하게 공유하는 ‘자연약탈적’ 이념으로 존재해왔음을 성찰해야 한다. 생태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다는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사회민주주의의 생태주의·평화주의적 재구성의 경로와, 생태주의의 사회적 확장의 경로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사회민주주의의 재구성의 의미에서 생태평화사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현 단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경쟁력 지상주의, 시장 절대주의를 부추기면서 성장주의적 지향을 지배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고, 이것은 다시 반생태주의적 개발주의를 전면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에서 이는 더욱 전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한국에서 단순히 사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문제로만 파악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상황에서 기존의 성장주의가 새로운 의미의 개발주의로 재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박정희 모델에서 국가는 노동자와 농민을 억압하는 국가였으며 동시에 전국토를 개발주의적 광풍에 포섭해 들이는 ‘토건국가’로서 재생산되었다²⁸⁾. 그러나 이러한 토건국가적 모델은 90년대 혹은 2000년대에도 변형된 형태로 재생산·확대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60·70년대의 ‘신축적

개발주의'였다고 하면 이제 '재건축적 개발주의'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청계천 복원사업은 생태주의적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재개발사업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또한 서울집중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수도분할 혹은 행정수도 이전 작업도 지역의 부동산투기를 재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환경친화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책들이 사실은 새로운 개발주의의 틀 내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로, 21세기형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주의적 군사주의에 의해서 포로가 된 사회민주주의를 '반전평화주의'적인 방식으로 재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20세기에 사회민주주의세력이 국가권력 담당세력이 되면서 그것은 국민국가적 군사주의와 결합된 국가주의의 포로가 되어 버렸다. 결국 사회민주주의세력은 국민국가의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의 기능적 담지세력이 되고, 여기서 20세기의 사회민주주의는 일국적 군사주의의 담지자로 타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타락은 동구의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여기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역시 국가화된 사회주의에서도 전혀 예외가 아니었다. 동서 간의 냉전 적 대결구도 속에서 현존 사회주의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군사주의를 내재화하고 군사주의를 증폭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21세기의 맥락에서의 사회민주주의, 그 일부로서 서구의 사회민주주의--동구의 사회주의는 붕괴하였고--는 또 다른 타락을 하고 있다고 나는 이야기하고자 한다. 즉 20세기의 맥락에서 제국주의 전쟁 시기, 민족국가 간의 군사적 대립에서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그것이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계급의 진보주의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포로가 된 것과 동일하게, 현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무장한 세계화'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구의 사회민주주의가 세계화의 군사주의적 방어기제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라크전에서 영국 사회민주당이 부시의 반테러전쟁의 '푸들'로 전락하게 되는 과정은 사회민주주의의 타락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 점은 사실 20세기 초반 제국주의 전쟁과정에서 유럽의 노동자계급이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굴복하게 되는 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통상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시장자율을 극대화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평화적'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패권적 '불량국가'에 대한 다층적인 저항--과거의 민족국가 간 갈등이 억제되는 대신 비국가적 행위자들, 예컨대 테러집단과 같은 저항--이 제기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저항의 범죄화'와 '반테러전쟁'과 같은 군사주의적 위협을 수반하면서 진행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장한 세계화(armoured globalization)'를 이야기하게 된다²⁹⁾.

28) 홍성태 편, 2005,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한울아카데미.

29) 조희연, 2004,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아르케, 8장. 무장한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반세계화·반전평화운동과 반부시투쟁 참조.

이런 점에서도 21세기적 사회민주주의는 20세기의 국민국가적 군사주의를 넘어서는 것과 함께 지구화시대의 군사주의를 넘어서는 방향에서 평화주의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20세기의 사회민주주의적 제국주의적 전쟁의 구도에서 군사주의와 결합되었고, 이제 무장한 세계화의 구도에서 군사주의와 결합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사회민주주의는 이러한 결합은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방향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개발독재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 중의 하나는 남북 간의 냉전적 대결 위에서 작동하는 준(準)전시적인--일상적인 전쟁상태를 가정한--군사주의적 대결이었다.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사회는 준전시적인 상태를 가정하고 편제되었으며 군사적 목표가 생존이라는 명분으로 여타의 정책지향들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가 동시에 군수산업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중화학 공업들이 군수산업의 시장수요에 일정하게 의존하면서 발전하였다. 이는 '경제의 군사화'라고 하는 성격이 한국자본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60·70년대의 개발독재가 미군 주둔과 미국의 군사동맹 위에서 기초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주국방을 외치는 민주정부 역시도 이러한 한국자본주의의 군사적 재생산구조를 전체하면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국가의 친미군사동맹적 현상 자체는 일정한 변화를 동반했지만 그 구조는 변형된 형태로--'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고 그에 부응하는 형태로--재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21세기적 사회민주주의는, 19세기적 맥락이나 20세기 전반기의 맥락에서 정면으로 쟁점화되지 않았던 생태주의적 도전과 반전 평화주의를 내포화하면서 새롭게 재구성된 사회민주주의여야 한다.

동아시아적 조건 위에서

여기서 생태평화 사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한국이 속하고 있는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때 이러한 모델을 제약하고 있는 동아시아적 조건과 그 잠재적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비교사회적 혹은 비교문명적 시각에서 볼 때 동아시아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동아시아는 거대한 '친미적 공간'으로 존재하여왔다. 즉 2차대전 이후 동서냉전의 질서 속에서 동아시아는 최극단적인 반공주의가 지배하는 공간이었으며 반대로 친미주의가 강력하게 존재하는 공간이었다³⁰⁾. 남미가 지리적으로는 미국에 가깝게 있으나 '반미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동남아시아가 친미적 공간+반미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복합되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또한 이슬람문명권이 반미적 지대로 존재하는 것과 대비한다면, 동아시아는 독특한 성격을 지

30) 반공주의가 한편에서는 반노동자주의를 내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친미주의를 내포한다고 할 때, 동아시아는 바로 이러한 반공주의, 반노동자주의, 친미주의가 강력하게 존재하는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 경험에서 직접적으로 미국의 지배를 받지 않은 지역이며, 오히려 일본제국주의나 유럽의 제국주의와 달리 미국이 ‘해방자’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다. 대만이나 남한에서 미국의 ‘강력한 해방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상기하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는 전후 동서냉전 속에서 가장 친미주의적으로 재구조화되어 있으며 친미적 전략이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을 갖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의 조건이 상이함을 상기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반공주의=친미주의 속에서 60·70년대의 ‘성공적인’ 경제적 근대화도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60·70년대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장은 친미적인 경제성장모델이 일본을 필두로 하여 확산되는 과정이었다. 가장 친미적인 공간인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제적 근대화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필연적인’ 것이기도 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바로 미국 주도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가장 친미적인 공간에서 미국식의 신자유주의적 모델이 높은 수용성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동아시아, 그 일부로서의 한국에서 생태평화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거대한 구조적·문화적 제약을 넘어서야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럴 때 거대한 제약을 넘어서는 힘은 아래로부터의 민중의 주체화된 저항력, 시민사회의 공적인 힘의 강화를 통해서 비로써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비교사회적 견지에서 볼 때 한국은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전투적 노동자운동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또한 중국이 시장사회주의화의 경로를 달려왔지만 중국의 공산당 주도의 정치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성장 모델은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점에서도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모델을 향한 일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일련의 정치적 불안정--예컨대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체제의 붕괴--이 현존 신자유주의적 모델의 동아시아적 적용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60·70년대식의 근대화모델을 답습하는 신자유주의적 모델은 큰 도전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한편에서 동아시아에 친미적인 신자유주의적 모델--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모델일 뿐만 아니라 반생태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 모델이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것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출구를 찾고자 하는 잠재력들도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수렴하는 데에 대안적인 모델도 중요한 결집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포스트-박정희 모델과 생태평화 사회민주주의

한국사회의 위기의 근저에는 박정희 시대가 종결되었고 박정희에 맞서 싸웠던 반독재 민주세력이 주도하는 민주정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정부가 박정희 모

델의 틀 내에 머무르고 실제적으로 작동 가능한 포스트-박정희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원인이 존재한다. 즉 현재의 위기론의 근저에는 진보적인 국가운영모델의 실종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20년에 이르는 동안 민주진보세력은 분명 과거 독재의 유산을 척결하는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정치개혁, 반부패개혁 등의 영역에서 큰 성과를 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의 반독재세력 혹은 현재의 보수세력에 대항하는 반대의 모델(negative model)로서만 존재하지 적극적인 긍정적인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박정희식’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으나, ‘박정희식이 아닌’ 방식으로 ‘박정희 시대 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모델’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적 조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宿命주의적으로나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주체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위기는 바로 여기에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박정희 모델은—폭압적 독재에 의해서 결국 구조화된 것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잘 짜여진 모델이다. 그 박정희 모델에 의해 경제성장이 실현되고 그 박정희 모델에 저항하면서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이 주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화된 조건에 부응하는 새로운 포스트-박정희 모델은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박정희 모델과 지향들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맥락에서, 동아시아라고 하는 친미적 공간, 그 일부로서의 한국에서, 가장 전형적으로—가장 ‘돌격대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반독재민주정부 역시 이러한 거대한 흐름의 일부로 재편제 되어가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반독재세력은 포스트-박정희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과거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독재세력이 주도하는 박정희 모델에서, 반독재 민주세력도 그 일부가 되는 거대한 변형된 박정희 모델의 재생산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변화된 조건은 바로 박정희 모델의 즉자적인 시행과 불일치되면서 불안정성을 만들어내고 정치적·사회적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 경제적 재생산 자체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모델에 대한 저항 속에서 대중은 민주주의 있는 경제, 민중들의 삶이 나아지는 성장, 다양한 성장의 모순들이 해결된 상태를 회구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이 실종된 것이고, 민주정부가 이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반동의 물결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민중들은 독재가 물러갔으나, 무자비한 인간이 없는 ‘1차 근대화’에서 무자비한 ‘인간이 없는 2차 근대화’를 대면하게 되면서 오히려 보수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박정희 모델에 저항했던 반독재 민주진보세력이 박정희 모델의 패러다임적 구조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포스트-박정희 모델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위기상황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보다 적극적으로—그것이 급진적이라고 하건 아니건—포스트-박정희 모델을 사고할 필요가 있고 이런

점에서 생태평화 사회민주주의적 인식지평에서 포스트-박정희 모델을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민주주의 모델은 포스트-박정희 모델을 사고함에 있어서 현재 한국의 인식적 한계의 지점을 돌파하는 하나의 지점이 된다고 생각된다. 생태평화사회민주주의적으로 재구성된 포스트-박정희 모델은 다양한 내용적 요소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상상을 해본다면, 예컨대 사회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사회적 국가’의 실현을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60년대식의 미국의 수출모델이 아니라, 수출-내수의 재균형 모델을 구축해갈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요구하는 경쟁력 지향적 국가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를 통하여 신자유주의시대의 ‘bumper state’(완충국가)를 구현하는 노력도 가능할 것이다. 60·70년대와 같이, 절대시장의 팽창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박정희 모델은 절대시장의 팽창 속에서 이전 보다 대중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사실 그 모순성에 저항하면서 붕괴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는 양극화모델이다. 그래서 오히려 민중들의 삶을 붕괴시키는 체제이다. 그래서 더욱 정치적 불안정이 큰 체제이다. 예컨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단절 현상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시대에 구조적 현상이다. 즉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공유되는 점이 많았으나 이는 오히려 단절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전평화주의적 관점을 급진적으로 확장하여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그를 기초로 한 복지국가의 재원조달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는 보수적인 사회적 저항을 넘어서는 전제 위에서 비로써 가능할 것이다. 또한 토건국가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재생산 기제 속에 내재화된 부동산 투기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부터 획기적으로 탈각시키는 예컨대 ‘1가구 2주택 소유금지조항’과 같은 획기적인 모델도 사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공상만이 아니다. 전지구적인 에너지 고갈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인 국가정책목표로 삼는 것은 경제적으로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 생태주의적 관점은 포스트-박정희 모델의 지속가능한 순환구조의 유기적인 일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안의 보편성’

사실 서구에서는 생태주의와 사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가 분리된 경로를 겪었다. 서구에서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주의적 군사주의의 포로로 되었다. 이러한 서구가 밟아온 길을 넘어서서, 한국과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세계사적 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물론 ‘미지의 경로이다’. 이는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우리안의 보편성’³¹⁾을 구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의 패배,

31) 신정완·이세영·조희연 외, 2006, {우리안의 보편성: 학문주체화의 새로운 모색}, 한울

동유럽의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의 패배를 성찰하면서, 동아시아의 친미주의를 성찰하면서 동시에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 속에 있는 공동체주의를 미래지향적 에너지로 전환시켜 내는 과정 속에서 비로써 가능할 것이다. 서구의 신자유주의적 모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 현재의 반세계화운동 등의 저항을 고려할 때 서구식의 신자유주의적 모델은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효용성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모델을 뛰어넘는 새로운 모델을 구성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 그 일부로서의 한국은 중요한 실험의 현장일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아카데미.

20세기의 사민주의, 그 가능성과 한계

- 서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임운택(계명대 사회학과, wlim@kmu.ac.kr)

〈순서〉

1. 서구 사민주의의 팽창기
2. 사회 자본주의의 건설 - 사민주의의 강화기 1
3. 수정주의와 자본주의의 황금시대 - 사민주의의 강화기 2
4. 서구사민주의의 위기 - 1960년대
5. 자본주의 단계에서 사민주의 프로젝트의 소멸?
6. 신사민주의의 실체 : 신자유주의와 공동체이론의 절충으로서 제3의 길
 - 1) 사회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결합
 - 2) 신 사회문제와 실천적 공동체주의의 제안
 - 3) 공동체주의와 “경쟁 공동체” (competition communities)의 형성
7. 사민주의의 전망

1. 서구 사민주의의 팽창기

19세기 말 통속적 맑스주의자는 여타 사회주의 사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통속적 맑스주의는 대략 세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였다. 첫째, 자본주의사회는 불공평하며, 둘째, 역사는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서 발생하며, 셋째, 노동자 계급은 어느 정도 동질적인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전제의 힘은 대단히 강력해서 다양한 반자본주의적 좌파 급진주의는 사회주의로 결집, 전화되었다. 물론 이 세 가지 전제는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자본주의 국가는 확실히 불공정하였으나 국가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이후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역사가 명백한 (필연적인)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역사운동을 실증주의적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역사의 방향은 기획될 수 있으며, 역사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의 편이라는 신념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신조는 심리적으로는 편안한 것이었을지 몰라도 사회주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과제를 잘못 이해하게끔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질적 노동자 계급에 대한 관념은 이질적인 집단을 묶는데 유용한 것이기는 하나 기술숙련, 지역, 젠더의 차이를 은폐하였으며, 일부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제도화의

수준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점을 간과한다.

그와 같은 삼위일체로부터 실천적인 이념과 전략을 도출해내는데 실패한 사회주의운동은 볼셰비키들에게서 정점에 이르렀다. 공산주의 운동을 고취하였던 볼셰비키들은 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전략도 보유하지 못하였다.¹⁾ 사민주의자들의 경우, 자본주의가 자정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 베른슈타인식의 ‘수정주의자들’의 통찰력은 부분적으로 옳았지만, 그러한 통찰력은 사회주의 ‘운동’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식은 자본주의의 자정능력이 종종 심각한 경제위기, 반자유의적 정치, 야만적인 전쟁 속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정주의자들의 인식은 그들로 하여금 비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정치를 하는 부드러운 의회주의로 이끌었다. 여타 사회주의자들은 양차 세계대전 기간에 있었던 정치적 부재를 복원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계획론자’들은 노동자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와 ‘네오코포라티즘적 경영자주의’(국가-정부-노조간의 삼자합의주의)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람시는 파시즘과 마주하여 사회주의운동이 실패한 이유에 대한 중요한 이론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진지전’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아마도 개혁주의적 사민주의자들의 아이디어에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회주의 운동의 외부에서 있었던 J.M. 케인즈로부터 주어졌다.

통속적 맑시즘은 이론과 실천의 효율적 연계를 보여주지는 못했어도 최소한 말로는 양자간의 연계를 계속 강조하였다. 그러나 애초의 삼위일체에의 결합이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가는 것에 반하여 일상투쟁과 사회주의 운동을 연계시키기 위한 새로운 해답을 찾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어찌 됐건 그러한 일은 사회주의 운동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추가적인(이론적인)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자신감으로 충만하여 타인을 쉽게 개선하려 들었다. 일반적인 사회운동에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한 일상투쟁에 개입하고, 이러한 노력은 스스로 재차 더 모호한 대형 프로그램을 구축하게끔 하였다. 예컨대 독일 사민당(SPD)은 일종의 복지국가를 원했으며, 히틀러에 의해 궁지에 몰리기 이전에는 통제·관리되는 경제를 요구하였다. 북유럽의 사민주의자들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미 1930년대에 고유한 전후(戰後) 발전모델을 위한 초석을 쌓았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북구에서 노조에 대한 법적 보호는 매우 중요하였다.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의 하나는 이론과 실천간의 연계를 구

1) 볼셰비키들은 자본주의가 전면적 혁명을 통해 붕괴할 것으로 확신하였었다. 정작 그러한 전면적 혁명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볼셰비즘은 ‘일국사회주의’가 되어버렸으며, 소비에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럽공산주의 운동을 활용하는 서구 공산주의 전략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유럽의 사회주의 운동을 분열시키는 대가로 스탈린주의적 패권정치를 위해 유럽노동자를 급속하게 도구화시켰다.

축하여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단기적 요구를 넘어 사회주의 이념에 상응한 일상적 저항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이다. 그 누구보다 레닌은 이론과 실천의 연계가 자발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론과 실천의 연계를 이론적으로 인식하고, 실천으로 이끌어내 노동자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몫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전 유럽에 걸쳐서 높은 열망과 함께 중요한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었으나 사회주의를 실현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념은 분명하지 않았다. 더구나 역사는 사회주의운동이 적절한 사상과 결합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질 않았다. 대공황, 파시즘과 함께 전쟁은 자본주의의 신빙성을 산산조각 내었으며, 대중 좌파(the Mass Left)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열었다. 많은 곳에서 좌파는 나치즘과 파시즘에 반대하는 민족투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기에 국가재건 과정에서 강력한 위치에 설 수 있었다. 처음으로 좌파는 권력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

2. ‘사회 자본주의’ 의 건설 - 시민주의의 강화기 1

전쟁이 끝난 직후 권력을 획득한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로의 이행 프로젝트보다는 ‘사회 자본주의’ (Social Capitalism: Sassoon, 1996)라 불릴 수 있는 자본주의의 개혁 작업에 집중하였다. 전후(戰後)에 곧바로 다가온 개혁주의 시기는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이 다소간에 즉흥적으로 정책을 주도한 시기였다. 서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처음으로 실질적인 권력을 획득하고 개혁과제를 완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사회주의적 미래와는 별 상관없는 프로그램을 추구하였다. 서유럽 사회주의자들은 개혁정책을 자신들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찾거나 혹은 부르주아 개혁주의자들로부터 차용하였다.

그럼에도 복지국가의 확대는 좌파가 이루어낸 성과 중 가장 값진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예측 가능한 재난으로부터 보호(건강관리, 신체장애보험, 연금 등)받고, 나아가서 혹독한 자본주의 시장으로부터 보호(교육, 빈곤, 실업으로부터 초래된 문화적 자본의 불평등에 대한 교정)받는 것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시민권’ (social citizenship)은 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특수한 형태는 종종 비사회주의적 자원으로부터 빌려왔다. 영국의 시민주의자들은 비버리지(Beveridge)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스웨덴 시민주의자들은 미르달(Gunnar Myrdal)의 이론을 수용하였다. 유럽대륙에서는 기존의 비스마르크식 프로그램과 자코뱅 공화주의 프로그램이 확장되었다. 진보적 프로그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종종 모순적이었다. 보편성과 평등적 가치를 추구하였음에도, 시민주의자들의 프로그램은 추진방식의 ‘사회공학’ 에서 종종 온정주의적이거나 관료주의적이었으며, 재정 혹은 예산지원에 취약하였다. 사회보장 원칙이 지배적이 되었음에도, 복지프로그램은 다양한 관점에서 차별적이었다. 거의 모든 복지국가는 남성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젠더화

되었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계급구조와 시장이 병존하는 프로그램은 애초부터 잘못 기획된 것일까?

때로는 국유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조정과 시장의 규제에 국가의 개입을 증대시키는 것 또한 좌파의 전략이었다. 명백한 이유가 있기도 하였지만 좌파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것은 완전고용이었다. 그러나 완전고용과 여타 다른 목적을 위한 국가개입이론은 오래전에 케인즈나 보틴스키(바이마르시대의 독일 경제학자)와 같은 개혁적 지식인에 의해서 제공되거나, 오래된 국가주의자 전통(국가주의가 새로운 테크노크라트 세대에 의해서 활기를 띤 자코뱅 전통의 프랑스)에서 공급되었다.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경제 시스템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은(그 방식은 매우 다양하였다) 독창적이었다. 영국에서는 시민주의자들 내부에서 경제의 ‘계획’ (planning)이 요청되었으나 전신통제를 제외하고서는 결코 심각할 정도로 실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유화’는 추진될 전략적 내용이 부재한 상태에서 언급되는 일종의 주문(呪文)이었으며, 법적 소유권의 변화는 경제적 논리를 이행시킬 수 있다는 흡사 마술과 같은 희망사항이었다. 국유화된 다수의 기업은 특정 사업주에 대한 노동자의 불만에 반응하고, 경향적으로는 완전히 사양화된 영역으로 되어버렸다. 사정이 다른 지역이라 해도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해 국가가 더 많은 것을 약속하기란 힘들었다. 유사한 사례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발견된다. 작고, 개방적인 경제를 지닌 스웨덴은 국제 시장에서 유연성을 요구하는 소수의 몇몇 대기업에 의해서 지배되었으며, 국영기업은 거의 없었다. 오스트리아에서 국유화는 좌파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나치즘의 유산이었다. 그러나 국유화가 진척된 곳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일부 사회주의자들의 이념이 남아 있기도 하였다.

사회주의 이론과 개혁을 연계시키는 사례는 간혹 서유럽 공산당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물론 그다지 위도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특별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공산당은 소비에트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유용한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개혁을 바라보았다. 이들 프랑스/이탈리아 공산주의자들이 소위 ‘통일전선’의 국내정치방향에 대해 고민할 때, 그것은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족주의적 수단’ 이거나 전후 시기에 유행하였던 ‘대중적 민주주의’ 방식이었다. 이때 실천을 뒷받침하던 이론은 말 그대로 조잡한 수준이었다. 개혁은 공산주의자들이 국가에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조종되었다. 만약 그러한 교두보가 충분히 강력했다면, 공산주의자들이 헤게모니, 나아가서 국가에 대한 통제를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비에트 모델의 모방은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민족주의적 수단’이라는 개념은 전후의 짧은 정치운동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아니었으나, 심각할 정도로 비민주적이었다. 어찌됐건 서유럽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그러한 이념을 실행할 수가 없었다.

복지국가, 공공영역, 국가경제의 경영은 모두 국가와 관계한다. 당시 영향력을 행사하

있던 좌파는 국민국가 내에서 ‘혼합적’ 정치경제학을 재구성하였다. 좌파가 주도한 국유화전략의 한계는 외교문제에서 두드러졌다. 사회주의 정부의 외무장관들은 외교 노선에 있어서 철저하게 ‘국가의 이익’ 을 좇았다. 달리 말해서 ‘사회주의적 외교 정책’ 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영국의 노동당은 유럽통합과정의 불참을 희생하고 영연방을 중심으로 한 고유한 전략을 추구하는 고전적인 전형을 제공하였으나, 다른 사회주의 정부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그러한 상황과 맞물려 하나의 거대한 제약이 있었다. 냉전의 발발은 사민주의자들이 자신의 국가적 이해를 단지 반소비에트주의(anti-sovietism)와 친나토미국주의(pro-Nato Americanism)의 우산아래서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다수의 사민주의자들에게 심각한 정도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었으나 별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미국인들은 매우 능숙한 게임을 주도하였으며,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전쟁기간동안 파산한 이후, 유럽은 국가별로 처분 가능한 자원을 토대로 전후 복구·개혁과정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마셜 플랜이나 각종 지원을 통해 미국은 냉전에 기초한 친미주의를 대가로 사민주의자들에게 필요한 현금을 지원하였다.

3. 수정주의와 자본주의의 황금시대 - 사민주의의 강화기 2

전후(戰後) 개혁주의의 조잡한 성격, 개혁주의의 즉흥성, 포퓰리즘의 등장은 황금시대(Golden Age: Marglin/Schor)의 자본주의에 의해 평정되기까지 사회주의 운동을 한껏 고무시켰다. 1950년대부터 사반세기는 자본주의의 전체 역사 중 최고의 성장을 이룩한 시기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 특성은 좌파들이 전후 직후 구축해 놓은 개혁적 틀 안에서 미국식 포디즘적 축적모델(대량생산-대량소비)을 복제 혹은 만회(catch-up)하는 것이었다. 전쟁이후 이론과 실천을 연계시키는데 실패한 좌파는 자본주의 자체의 회복과 개선에도 약점을 보였다. 그러나 좌파의 개혁은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Keynesian welfare state)의 틀 안에서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전례가 없는 경제성장은 이윤 일부의 재분배와 세금을 통해 복지국가의 확대를 지원하였고, 나아가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조에게 고임금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다수의 노동자들은 ‘풍요로워졌고’, 이는 재차 소비의 붐(boom)을 가져와 이윤을 창출하였다. 국가의 개입은 수요관리를 통해 완전고용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였다.

사회주의 운동은 매우 단순한 논리(고용안정과 복지의 연계)와 함께 황금시대에 이론적으로 흡수되었다. 전후에 도처에서 개혁이 활성화되었기에 자본주의는 급속하게 성장하였고, 또한 이는 국가에 의한 조정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사민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보통사람들이 조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즉,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양립). 따라서 기본적인 사회변화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으며,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이론과 실천간의 연계를 추구하는 것도 포기되었다.

따라서 1945년 이후에 등장한 ‘수정주의’ (Revisionism)는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승리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수정주의자는 영국의 Anthoy Crosland였다. 그 외에도 여타 사민주의자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만족하였다. Bad Godesberg와 Gaitskell에는 수정주의에 대한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좌파내의 갈등도 고조되었다. 수정주의자들은 우파에게 선거를 진 사민주의 정치가들과 리더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에 사민주의정당은 1945년 이후 최악의 선거결과를 경험하였다. 수정주의자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또한 1950년대에 사회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였다. 종종 이들은 자신의 입장을 전통, ML주의의 경전, 심지어는 악마 모습을 한 풍차간(satanic mills)²⁾ 형상에 근거하였다. 수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적대자들이 무기력한 전통주의자들이라고 반박하였다.

상황은 다소 불운하게 전개되었다. 수정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분석에서 근본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수정주의자들이나 수정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황금시대에 진행된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다. 사민주의자들이 불로소득자들에게 자본주의의 문화를 개방한 반면에, 임노동자들 내부에서는 저항헤게모니를 발전시킬 노력을 포기한지 오래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갈등 혹은 투쟁은 소비주의, 미디어, 상업화된 청년문화 등에 대해 가벼운 공격을 가하는 것 외에는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소수의 사회주의자들은 여성의 지위변화와 노동과정에서 여성노동력의 참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한편, 지도적인 사민주의자들 중 누구도 자율적 지식인의 위협받고, 신중산층의 급진주의가 대두하고 있음을 눈치 채지 못하였다. 수정주의자들이나 수정주의의 반대론자 모두 새로운 자본주의의 환경비용을 간과하였다. 약간의 단서가 없지는 않았지만 제3세계에서 탈식민화에 따른 비서구적 발전의 심오한 의미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소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이 시기에 유럽 사회주의운동에 의해 새롭게 기획되거나 예측된 것은 거의 없었다. 다만, 황금시대에 사민주의 지도부는 자본주의가 영속할 것이라는 신념 속에서 자본주의의 일시적인 단계에서 새로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매진하였다.

4. 서구사민주의의 위기 - 1960년대

1960년대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여겨졌던 자본주의 낙원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동안 몇몇 단기적 위기는 황금시대 정치경제학의 ‘선순환’ 속으로 흡수되었음에도, 황금시대의 자본주의 시스템도 서서히 임금상승과 인플레이션에 그 취약

2) 프랑스의 공산주의자들은 심지어 노동자들이 심각한 빈곤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소비주의의 붐과 변화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상대적 완전고용과 높은 수준의 노조 조직율은 노동자들에게 그동안 익숙하지 않은 시장력(market power)을 부여하였다. 만약 이들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즉, 자본주의의 건강함이 자신들의 개별적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전제에 동의하느냐의 여부), 임금은 생산성보다 더 빨리 증가하게 될 것이며, 그로부터 결과하는 인플레이션은 통화와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상이한 국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가장 성공적인 방안은 거대하고 강력한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는 임금수준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동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 교환에 동의하는 ‘네오 코포라티즘적’ 모델이었다. 네오 코포라티즘은 초과 인플레이션이 직접적이고 심각한 국제교역문제를 야기하는 스웨덴, 오스트리아처럼 규모가 작고, 국제적으로 개방적인 경제 속에서 비교적 잘 작동하였다. 그러나 네오 코포라티즘은 독일처럼 규모가 큰 사회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문제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처럼 다른 제도적 조건을 가진 나라들에서 발현하였다. 이러한 국가에는 전투적 노동운동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들은 의도적이건, 조직적 차원에서건 네오 코포라티즘적 게임을 운영할 수가 없었다. 노동시장의 긴장이 증가하면-특히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대규모 파업이 이어졌다. 그러나 네오 코포라티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였던 지역에서도 노사관계의 긴장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노동자들은 더 많은 임금을 원했고, 산업민주주의와 투자제한과 같은 새로운 개혁안이 실행됨에 따라 시스템은 좀 더 불안정하게 되었다. 게다가 사민주의 지도부가 강조하였던 계급갈등은 완전한 제도화되어 그 급진성과 투쟁성이 점차 소멸되어가고 있었다. 자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읽어내고 있었으며, 이들은 점차 자본주의 황금시대의 질서유지에 들어갔던 비용을 수익으로 만들기 위한 셈을 다시 시작했다.

한편, 수정주의자나 우파들 모두 동시에 놀랍게 보았던 점은 신중산층의 반란, 1960년대의 학생운동, 그리고 이들의 이슈 지향적 운동이었다. 젊은 행동주의자들 속에 선언적 맑시즘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운동의 동기와 주제들은 과거에 알고 있었던 사회주의 운동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집합적 대변보다는 개인의 해방이 본질적인 주제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자유주의(Libertarianism)는 강력한 반관료주의 및 반국가주의적 전망과 결합하였으며, 직접참여를 강조하는 아나키즘적 조류와도 연계되었다. 이와 같은 신사회운동은 유럽에서 노동운동과 공존하였으며, 스스로를 반항적인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더 이들의 모습은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처럼 엄청난 사회적 폭발력을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새로운 운동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였으며, 자신들의 양식과 주제를 ‘좌파’ 정치로 규정하였다.

1960년대에 전개된 위기의 마지막 요소는 국제상황이었다.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베트남전은 미국에서 다수의 학생운동을 촉발시켰으며, 이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베트남전은 미국정부의 재정을 압박함으로써 1945년 이후 세계경제를 지탱하여왔던 자본주의적 국제통화시스템의 붕괴(브레튼우즈 조약의 파기)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재편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발생했던 사건의 어느 것도 수정주의자의 다양한 발전모델에 조용하지 않았다. 수정주의자들은 모든 있을 법한 문제는 자본주의의 황금시대가 제시한 변수 내에서 적절하게 관리를 하면 제반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수의 사회주의자 지도부와 심지어 공산주의자들조차 노동자 계급의 투쟁성은 거시경제의 미세조정(fine-tuning)에 의해서 억제될 수 있으며, 점증하는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한 교환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다. 게다가 신중산층과 신사회운동은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한편, 국제시스템의 분열은 통화가치의 조정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위기를 관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오랫동안 특수한 개별국가의 보호막을 통해 생명을 유지해왔던 수정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것도 개별국가의 정치경제를 약화시킬 수는 없다고 철석같이 믿었다.

5. 자본주의 단계에서 사민주의 프로젝트의 소멸?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는 전반적인 위기에 들어섰으며, 그와 동시에 사민주의적 정치모델도 동시에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동유럽에서 사적인 자본축적시스템이 전면적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던 반면에, 서유럽의 좌파는 총체적 패닉상태에 들어갔다.

좌파인 사민주의자들이 우파보다 더 적절하게 관리해온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고,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은 가파르게 떨어졌으며, 실업률은 증가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양하다. 한편에서는 시장의 국제화, 특히 금융자본의 세계화, 초국적 기업(TNCs)의 등장, 국제무역의 증대 등을 지적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일자리를 파괴하는 과학기술발전을 예로 든다. 또 다른 쪽에서는 완전고용을 지향하였던 거시경제정책으로부터 가격안정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엘리트 집단에 의한 경제정책의 전환을 지적한다. 당연히 세 가지 원인은 종합적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자본의 자유화, 시장의 탈규제화, 공기업의 사유화'를 핵심 가치로 제시한 신자유주의적 엘리트집단에 의한 정치 프로젝트는 '사민주의 시대' (Dahrendorf)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에 다름 아니었다. 신자유주의적 엘리트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핵심은 '시장으로의 회귀' 였으나, 이를 지지하는 이데올로기는 대단히 정치적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강력한 노조, 불평등을 제한하는 사회적 보호프로그램이 없이도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시장만능주의 이데올로기와

적자생존으로 대변되는 무한경쟁 이데올로기를 유포하였고, 이는 사민주의자들에게 대단히 치명적이었다. 높은 실업률은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켰고, 따라서 정부와 사용자는 노조의 도움 없이 임금인상과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코포라티즘적 매개를 통해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해 왔었다면 이제 ‘탈규제’와 ‘자유화’를 내세운 시장의 매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복지국가로의 롤백은 낮은 대중적 지지율, 높은 실업비용, 적자예산의 압박, 장기 부채 등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사민주의자들이 황금시대에 동원하였던 합의 즉, 국민국가가 관대한 사회적 재분배와 사회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국민경제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다는 합의는 붕괴되었다. 아마도 사회주의 역사상 사회주의자들이 내렸던 가장 힘든 결정이었던 사회주의자들의 ‘국가화’(nationalization)는 이제 다시 자신들에게 강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민주의자 내부의 분화과정 또한 뚜렷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 아래 사민주의자들의 우편향화는 매우 두드러진다. 세계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대안은 우파의 그것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서 사민주의 정당에서 계급담론이나 노동과 관련된 용어는 거의 모두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사민주의의 구원자는 노동자 계급이 아닌, 신중산층이며, 이들만이 선거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러한 내부변화 과정이 그다지 심각한 내부 갈등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블레어의 영국 노동당에서부터 이탈리아 공산당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신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사민주의 정당의 재편은 사민주의의 역사가 전무한 미국의 클린턴주의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롭다.

6. 신사민주주의의 실체: 신자유주의와 공동체이론의 절충으로서 제3의 길

오늘날 소위 ‘제3의 길’로 알려진 신사민주주의 전략의 핵심은 ‘공동체주의적 신자유주의’(communitarian neoliberalism)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레이저노믹스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실천적 공동체주의의 확산과 성공은 공동체주의 담론의 두 가지 특성에 기인한다. 첫째, 공동체주의 저작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들은 지속적인 사회의 분열과정의 계기로서 신 사회문제의 다양한 형태, 내용 그리고 원인을 “아노미”, “사회응집력의 문제”, “사회적 분열”, “사회적 배제” 등과 같은 개념으로 분석한다. 둘째, 공동체주의자들은 시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물신주의와 거대정부에 대한 지지를 모두 거부한다. 그 대신 이들은 대부분 무시되어왔던 세 번째 차원을 선호하는데, 그것은 가족, 학교, 공공영역, 지역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적 네트워크의 다양한 형태, 이웃 등과 같은 공동체의 미덕과 장점에 대한 강조이다. 새로운 전망에 대한 관심은 한편으로는 1970년대식 사민주의 정책의 한계와 복지국가의 팽창에 기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1990년대에 신

자유주의적 전략의 결점에 기인한다. 이로써 공동체주의는 정당의 지도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일반적 정치 어젠다에 있어서도 매우 매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6.1. 사회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결합

공동체주의자들은 “응집력 있는 사회의 비전” 을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자유방임과 거대 정부를 초월한 제3의 길을 제안한다. 제 3의 길은 완전고용,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 그리고 복지국가의 확대와 같은 과거의 사민주의 프로젝트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매력적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사고와 정치적 방향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다수 정당의 강령과 선언이 점차 공동체주의자들의 논거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니었다. 정당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영향은 특별히 사민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정당에서 두드러졌다. 미국에서 공동체 이슈는 빌 클린턴과 신 민주론자(New Democrats)에 의해서, 그리고 영국에서는 토니 블레어의 신 노동당(new Labour)에 의해서 주도되었다.³⁾

집권 초기에 서유럽을 관통한 블레어의 인기를 설명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 한 이유는 신 노동당에 의한 유럽지향의 적극성과 시장 급진적 신자유주의를 포기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사회주의자와 사민주의자들의 내재적 조건에 근거한다. 사순(Sassoon, 1996: 730-754)은 사회주의 정당의 거의 모든 “신 수정주의자” (new revisionist)가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사민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역사적 배경을 상실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정치적 통제에 종속되어야만 하는 근대성의 지속적인 특징으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인다. 이는 자본주의의 생존능력이 심하게 손상되지 않는 한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여전히 자유, 평등, 정의 그리고 연대와 같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MS와 EMU 프로젝트는⁴⁾ 그러한 딜레마를 입증해준다. 사민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수적이라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그와 함께 자신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수정함으로써 자신들의 본래적 의도를 부정해왔는데 이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블레어와 노동당은 사회주의 목표의 가장 급진적일뿐 아니라 심지어는 가장 공세적인

3) 블레어와 클린턴은 님은꼴의 정치가였다. 두 사람 모두 매스미디어를 잘 활용하였으며, 신자유주의적 정부의 유산을 계승하였다. 또 양자는 막대한 사회문제, 부패한 공공 인프라, 그리고 본질적으로 약화된 복지국가와 직면하였다. 매우 오래된 개인주의적 문화와 전통을 지닌 국가에서 두 사람이 선거에 승리하였을 만큼 사회적 위기의 충격은 매우 깊었다.

4) 사순(1996: 739)에 의하면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실업이 아닌 인플레이션이 주적(main enemy)이라고 선언하였다. 노동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유럽 사회주의정당은 그러한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였다. 사민주의로의 (혹은 현대화로의) 개별 국가의 길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이것이 1990년대의 진정한 신수정주의(authentic neo-revisionism)의 핵심이다” .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신 노동당은 변화된 경제 환경과 사회주의적 가치의 화해를 선언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권력, 부 그리고 기회”가 “소수의 손이 아닌 다수의 손에” 놓일 수 있다는 공동체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사적 영역의 확대”, “고속권 공공서비스”, “정의로운 사회”, “열린 민주주의” 그리고 “건전한 환경”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제”였다(ibid.: 739f.). 이 같은 개념들은 이미 블레어(1997)의 논거에도 영향을 끼쳤다. 첫째, 국제 경쟁에 대한 요구이다. 더 나은 인적자원, 교육과 숙련의 촉진, 연구와 기술개발, 현대적 운송 및 에너지 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 및 예산강화정책 등에 의해 제공되는 인프라의 개선이 핵심을 이룬다. 대부분의 경제이슈 외에 블레어가 내다본 전망의 다른 부분은 사회복지의 문제에 관련된다. 블레어는 또다시 교육, 직업훈련의 개선을 강조한다. 동시에 그는 유연한 노동시장, 유연한 노동조건, 그리고 사람들이 기꺼이 더 많은 “공적 의무와 책임을 떠맡는 응집력 있는 시민사회”에 대해서 언급한다. 인상적인 점은 블레어가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갈구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공동체는 협력, 연대, 책임, 의무, 상호신뢰, 소속감, 공공노동과 같은 특성을 포함해야만 하며, 그와 같은 개념은 전통적인 ‘보충성’ 개념을 현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보충성 개념은 EU 개혁에 대한 논쟁에서 돌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복지국가에 대한 우파의 비판에서 표명되었다. 그것은 국가에 의해 보장되었던 사회적 권리를 축소하기 위해서 개인, 가족, 그리고 공동체 네트워크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신보수주의적 공세의 보편적 특징이었다. 신 중도좌파는 공동체주의적 사고를 채택함으로써 우파적 사고에 더 친숙하게 되었다. 이는 계급적 수사학을 포기하고, 이를 공동체적 유대라는 수사학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명백해졌다. 그 밖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정치와 관련된 초미의 관심사는 노동조건이나 임금처럼 기업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잘 조직화된 가족관계에 놓여있다. 후자는 교육과 직업훈련, 도덕적 미덕과 사회적 참여 그리고 범죄의 예방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관련된 정치적 노선의 변화는 과거와는 달리 신뢰할만한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서 보수주의에 새롭고도 진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Giddens, 1995).

일부 보수주의적 요소의 채택은 신자유주의로의 방향선회와 함께 동반되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사고의 기본적인 전제는 모순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보적이다(임운택, 2004). 이는 세금, 복지 그리고 고용규제에 대해 제안된 ‘새로운 합의’에서 명백해진다. 신 노동당은 현대의 사회적 위기가 자본주의의 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지의 위기라는 신 우파의 시각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들은 예산적자가 ‘실업, 기업의 탈세, 부자를 제외한 조세의 재분배’에 근거하기보다는 ‘복지에 의존하는 하위계급과 기식자’ 의해서 발생했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는 빈곤, 범죄, 사회

적 무질서, 도심의 붕괴,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 등과 같은 실업의 황폐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숙련, 개인의 참여, 이노베이션, 그리고 창조성과 같은 경쟁적 능력의 낭비가 언급되었다. 놀랄만한 점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실천적 공동체주의자들은 전적으로 붕괴된 공동체와 소진된 경쟁적 잠재력에만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입헌적 신자유주의의 토대위에서 ‘좋은 사회’ (good society)를 건설하기 위한 이중적 시도를 기도한다. 첫째, 이들은 새로운 경제능력을 개발하고, 그것을 탈규제와 유연화 조치, 개선된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 그리고 더 능동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이들은 적절한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기꺼이 경쟁력과 관련된 신자유주의적 방안을 수용하고 지지하게 하는 일련의 규범적, 문화적 방향을 의미한다. 그러한 점에서 쇠신된 공동체 구조에 대한 담론은 시의 적절한 것이었다.

6.2. ‘신 사회문제’ 와 실천적 공동체주의의 제안

공동체주의적 사고에 영향을 받은 다수의 사회과학자들은 앞서 기술된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에 동의한다. 예를 들어서 로버트 라이히(Robert Reich, 1991)나 제레미 리프킨(Jeremy Riefkin, 1995)의 매우 영향력 있는 저술은 분석적 차원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전제한다. 한편, 공동체주의자들은 사회의 분열을 포함한 발전과정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통제를 벗어난, 사회적으로 배제된 세계 경제에 의해서 야기된 것으로 고찰한다. 이들은 사회관계, 소통의 형태, 문화의 유형, 공동체 가치, 사회적 유대가 경제적 재생산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 심대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피상적으로 보면, 공동체주의적 관점은 앞서 언급한 ‘사회 응집성의 해체’ 를 초래한 동력과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주의자들은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공동체주의자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드러나 보이는 것만큼 날카롭지도, 급진적이지도 않다. 경제, 정책, 문화 그리고 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변화는 사회적 이해와 사회적 갈등의 관점에서 드물게 분석되었다. 그 대신 그러한 영역은 현대화의 추상적 논리 혹은 엘리트의 낮은 감수성의 결과로써 기술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공공영역과 시민사회를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영역들을 대안적 정치 프로젝트들을 제안하는 상이한 세력들 혹은 사회블록 간의 투쟁에 연계시키지 않는다. 그러한 분석적 결함의 결과는 대부분의 관찰이 매우 피상적이라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이상은 기본적으로 수평적 수준에서 가장 잘 조직화된 사회관계이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자들은 때때로 보다 모순적인 권력관계와 지배구조를 무시한다. 이 약점은 특히 현대사회에 대한 위기진단에서 뚜렷해진다. 공동체주의자들은 무엇보다 공동체의 유대, 공동의 가치, 공적인 인프라 등이 해체됨에

따라 야기된 사회분열 및 사회해체과정을 개탄한다. 그에 대하여 공동체주의자들은 사회적 의무와 책임, 교육 등의 새로운 규범적 의미부여를 통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이와 같은 사회적 재통합에 대한 다소 조화로운 전망은 착취, 소외, 권력 그리고 지배와 같은 주제들 즉, 사회적 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거의 전적으로 무시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저작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와 그의 동료(1985; 1988) 혹은 아미타이 에치오니(Amitai Etzioni, 1988; 1993; 1997)와 같은 영향력 있는 공동체주의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고삐 풀린 국제자본주의가 야기한 사회의 해체현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여타 비판적인 이론가들과는 달리, 공동체주의자들은 그들의 관심을 문화적 변화에 돌린다. 예컨대 에치오니는 현대사회의 위기를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합의의 붕괴, 약화된 사회적 결속, 부패한 공통의 인프라, 그리고 도덕적 타락 등의 결과로 간주한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적 권리와 책임 간의 관계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그 균형상태가 깨지기 시작했다. 단지 소수만이 공동체적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에, 다수의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경력과 문화적 해방에만 관심을 보일 뿐이다. 에치오니에 의하면 공동의 가치와 책임의 소멸은 주로 공리주의적 혹은 헤도니즘적 태도에 의해서 자극된 거친 개인주의의 동력에 의해 발생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이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 특히 후자의 경우는 매우 포괄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무엇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과정에 의해서 야기되었다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주목함으로써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이들의 종합적인 노력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라는 수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제적 원칙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 연대의 이름 아래서 이들은 탈규제와 긴축재정정책을 통한 복지국가의 해체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자들의 제안은 근본적인 교정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틀의 부드러운 변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신보수주의와 비교해 볼 때 공동체주의적 사고는 민주적 사회구조의 중요성, 공공의 열린 의사소통, 그리고 사회적 참여를 강조한다. 그러한 점에서 공동체주의는 국제적 경쟁에서 요구되는 구조조정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입장은 상층 노동자계급과 신 중간층 계급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지되기 때문이다 (Blackburn, 1997: 4f.).

신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상보적 관계는 공동체주의의 견해가 신 사회문제에 대해 문화적으로 편협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음에도(특히 미국의 공동체주의자) 대중적인 논쟁에서 어렵지 않게 친화력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는데, 이는 스스로를 공동체주의자라고 여기지 않는 다수의 학자나 정치가들조차 공동체라는 주제의 규범적 지향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잘 조직화된 사회의 핵심적 특징은 “미국 공동체주의자 선언” (the Manifest of American Communitarians, 1994)에 잘 요약되어있

다.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삶의 도덕적 기초를 추구함에 있어서 이 선언은 가족, 교육 및 직업훈련과 상호 책임성 원칙에 기초한 공동체의 기여를 강조하였다.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다양한 네트워크는 공동체의 특수한 사회적, 도덕적 성과 때문에 사회의 응집력 혹은 통합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재생산 네트워크는 삶의 의미를 심화시키고,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치와 규범을 제공하며, 미덕과 책임의 중요성을 유지한다. 즉, 그러한 네트워크는 사회 응집력을 개선하기위해 문화적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공동정신을 불어넣는다.

이러한 일반적 목표는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가 기본적으로 생태적, 사회적 자원을 재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장경제로의 길을 추구해야만 함을 의미한다. 만약 현재의 실업문제처럼 사정이 그렇지 못할 경우, 공동체주의자들은 낭비된 기술과 활용되지 않은 노동력에 대해 불평할 것이다. 그 이유는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부정적 결과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높은 실업률을 가진 사회가 사회적 불평등, 빈곤, 소외 그리고 통합된 공동체의 쇠퇴를 촉진할 것이다. 결국 그러한 사회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실업률이 복지비용 지출의 증가, 수동적 인간유형, 노동능력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손상된 경제에 있어서 그러한 결과들은 국제경쟁력의 악화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의 불투명을 의미한다. 실천적 공동체주의자들은 그러한 악순환을 깨트리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안한다. 첫째, 이들은 초국가적 제도의 차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와 정치가 배태된 국제경제의 문제점을 강조한다. 둘째, 이들은 공동체적 삶의 조건의 전면적 개선을 호소한다. 온전한 공동체는 중앙 집중화된 복지국가의 대체물로서 그리고 고용상황을 극복하기위한 개인 활동을 고무하는 자원으로써 간주된다. 이러한 시각은 세 번째 목표에 의해서 더 구체화된다. 즉, 교육 및 직업훈련에 책임을 지는 제도(가족, 학교, 기업훈련센터)는 공공영역에서 더 많은 주목과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6.3. 공동체주의와 “경쟁 공동체” (competition communities)의 형성

블레어리즘(Blairism)은 국제경쟁의 시대에 사민주의적 가치가 어떻게 재규정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공동체주의적 사고에 의해 영향을 받은 정치적 노선전환에 대한 유사한 사례는 EU의 여타 다른 국가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모든 국가에 공통적인 것은 급격하게 변화된 사회문제에 대한 해석이다. 블레어리즘에서 사회문제는 궁극적으로 포스트포디즘적 사회의 계급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권력, 착취, 그리고 지배의 구조에 의해서 야기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 대신 사회문제는 국제경쟁력을 손상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해석된다. 유사한 의미전환은 ‘연대’라는 개념에도 적용되었다. 연대가 정치적 어젠다의 핵심적 이슈가 된 이후, 이 단어는 그 본래적 내용을 상실하였다. 연대는 더 이상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조직하는 피지배자들의 자원이 아니다. 사회적 권리, 더 나은 노동조

건, 높은 임금 등을 위한 투쟁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연대는 공동체 구성을 위한 상징이 되었고, 이는 구성원 대다수가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선호되는 경제적 권력구조에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Fach, 1998).

지속가능한 경쟁력의 목표는 탈규제화되고, 유연한 시장의 동력에 반대하여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복지국가의 관료화된 제도가 더 문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복지국가에 대한 재정압박은 쇠신된 공동체정신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완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공동체는 지금까지 숨겨진 경쟁력과 상호책임의 잠재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주의적 신자유주의’의 프로젝트가 서유럽을 관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방식이다. 공동체주의적 신자유주의는 최근 유럽의 다층적 시스템의 특징인 “경쟁 공동체”(competition communities)의 형성에서 발견된다.

경쟁 공동체의 의미는 국가차원에서 더 명백해진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전략은 경제적 투자조건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 분열과 배제와 같은 내부 문제를 극복하려 하기 때문이다.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상이한 조치들은 국민국가 기능의 변화과정에서 압축되었다. 사회과학자들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위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state)가 시장중심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민족경쟁국가”(national competitive state: Hirsch, 1995) 혹은 “슈뎨터적 업적국가”(schumpeterian workfare state: Jessop, 1993)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한 변화는 삶의 물질적 조건의 근본적인 변화(소위 “포스트 포디즘적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에서도 기인한다. 따라서 국가기구의 새로운 조정은 변화된 사회적 내용에 조응한다. 사회의 주변인들에 대한 이들의 이해가 점차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합의는 점점 더 선택적으로 되었다. 와해된 노동계급연대를 배경으로 하여 신자유주의자들은 더 많은 경쟁을 압박한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스스로를 강화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 회피하였던 광범위한 사회적 모순을 생산하였다. 따라서 동반된 규제조치(인프라와 숙련)는 구조조정과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공동체주의자들은 국가 공동체의 능력과 미덕을 강조함으로써 적절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을 제공한다.

유사한 과정은 지역 그리고 기업차원에서도 관찰된다. 몇몇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입장은 소위 지역국가(regional state)간의 경쟁을 과장하고 있다(Ohmae, 1993). 그러나 지역차원에서 사회관계, 정체성, 정치적 협력, 그리고 경제적 재생산 형태의 변화가 감지된다. 특수한 지역적 조건을 고려해볼 때,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경제발전 능력을 개발하고, 조직화하기 위해서 공적이고 사적인 제후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지역주의는 지역운동의 지지뿐만 아니라 유럽집행위원회의 지지를 얻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시장지향적 접근을 통해서 지역주의라는 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였다

(Tömmel, 1995). 기업차원에서 경쟁 공동체의 창출은 강화된 합리화와 국제 경쟁과 조응하는 기업적 코포라티즘의 확립을 의미한다. 이는 노사관계의 전면적 탈중심화, 강화된 경쟁 압력, 그리고 해고의 위협 등을 포함하는 “신 경영전략”(new management strategies)⁵⁾ 속에 표현되어있다. 게다가 공동체를 창출하는 가치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주도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직장 평의회를 활용하는 노력이 존재한다 (Schulten, 1996; Marginson and Sisson, 2004).

특별한 대안은 없지만 시장 급진적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시도 들은 지속되었다. 헤게모니 블록 내에서 보다 온건한 세력들은 원칙적으로 신자유주의적 통합의 길을 벗어나지 않은 채 사회적,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 려한다. 이와 관련한 공동체주의적 신자유주의의 정치철학은 일종의 새로운 관습법을 제공한다. 이 철학은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그리고 응집력 있는 사회에 대한 비전을 경제적 성과와 경쟁력 개선의 목표에 결합시켰다. 이것은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중 요한 장점을 갖는다. 첫째, 공동체주의의 전략은 가치, 사회적 유대, 책임, 의무 등과 같은 사회적 규제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엄격한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공동체주의적 사고는 공공영역에서 시민사회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사학을 제공하며, 신자유주의적 경쟁에 있어서 공공의 지 지를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주의적 논거는 소위 “진보적 경쟁 력”(progressive competitiveness) 전략(Albo, 1994; Panitch, 1994)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속런 전략에 기초한 경제의 현대화를 제안한다. 동시에 이는 종종 더 강력한 ‘노동 인센티브’와 결합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근로연계적 복지 프로그램의 촉진 을 의미한다.

7. 사민주의의 전망

다소 과장해서 정리해보면 과거에 우리가 이해하여 왔던 ‘사회주의(= 사민주의)’ 의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서유럽에서 좌파로 불리는 집단 은 그들 스스로 형식적인 구호와 행동양식을 유지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결코 전통적 인 의미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자유주의의 폭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선거정당으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 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변혁 논리뿐만 아니라 일상적 실천에서조차 대처주의자의 공리(TINA: There is no Alternative!)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5) 테귀(Taegue, 1994)에 의하면 신경영전략은 고속런노동과 유연생산을 지지하는 신 케 인즈주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신경영전략이 내부노동시장의 규제에 관심을 가지 는 한, 이 전략은 기업 내에서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인적자원관리’ (HRM)와 ‘사 회보장, 훈련 그리고 고용 관여’ (Security, Training, and Employee Involvement: SET)와 같은 신 개념들에 민감하다.

하물며 정치적 조건과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과거 진보적 정치운동은 정치적 조직을 통해서 구현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진보주의자들에게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소우주로서 그리고 휴머니즘에 기초한 대항문화(counter-culture)의 중심지로서 기능해야 할 대중정당은 선거공학을 위한 엘리트 조직으로 바뀌어 버렸다. 선거에서는 정치의 내용보다는 spin doctor들의 홍보, 통계, 선거공학에 따른 계산만 난무한다. 그렇다면 지난 100여 년간의 사회주의 실험은 이제 과거형이 되었을까?

확실히 지난 2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기존사회를 엄청나게 변화시켰다. 나라별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통적 노동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며(그러나 여전히 사회의 압도적 다수임!), 이들은 지속적인 분열과정에 놓여있다. 반면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전히 '억압받는 범주'로 계산되는 신중산층을 중심으로 대안적이고 진보적인 담론이 구성되고 있으며(혹은 그 가능성을 보임), 동시에 다소간에 독단적인 개인주의 혹은 이와 유사한 반국가주의(anti-statism)적 모습도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세계화를 어떻게 규정짓던 간에 국민국가가 경제적, 사회정책적 권한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는 것도 명백해졌다.

자본과 신자유주의적 엘리트 계층이 대중을 분할 지배(divide et impera)하는 방식에 성공한 반면에 다양한 임노동자 집단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별다른 결집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지 사민주의의 전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전망마저 위협하는 것이다. 사회관계의 시장화(marketization)는 시민의 사회적, 정치적 시민권을 위협한다. 과거 사민주의(혹은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재구성하였던 반면에, 오늘날 시장자유주의적 엘리트 연합은 지역 혹은 세계경제를 통합시켜(EU, FTA, WTO 등)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나간다. 반면에 오늘날 사회주의 혹은 사민주의 운동은 실천적 차원에서는 차치하고서라도 대항헤게모니적 담론을 주도할 지적인 전략개념을 구체화하는 데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새로운 대항담론은 구체적 현실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새로운 담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지형을 언급하는 것에 논의를 제한하고자 한다.

1. 사민주의 혹은 진보주의자들의 클라이언트는 이제 전통적 노동자 계급이 아니다. 다변화된 계급 및 계층구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식수준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임무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반동적이기조차 하다.
2. 과거와는 달리 사회문제는 모든 사회구성원에 의해서 공유되지 않으며, 거대담론이 언제나 우선권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사회의 부문운동이 기초하고 있는 PC(Political Correctness)담론의 한계를 거대담론에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3. 정당정치의 위기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대안적 형태가 가시화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운동 또한 정치세력화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운동과 정당정치의 미래지향적 결합 형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4. 오늘날 사회문제는 국내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발생한다. 이와 같은 다층적 거버넌스(multilateral governance)는 신자유주의적 엘리트의 헤게모니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운동의 지역화, 국제화를 통해서 대항적 헤게모니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녹색 담론, 무엇을 담아야 하나?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소장, kudowan@korea.com)

〈순서〉

1. 우리는 어떤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2. 그 동안 환경운동은 무엇을 했는가?
3. 개발동맹과 녹색연대 : 담론 구성체
 - 1) 개발동맹과 녹색연대
 - 2) 개발동맹/녹색연대 정치지형의 변화
 - 3) 담론 분석의 결과
4. 녹색 담론구성체
 - 1) 환경담론의 유형: 이념형 연구
 - 2) 환경담론의 실제
 - ① 생태권위주의
 - ② 지속가능발전론
 - ③ 녹색 낭만주의
 - ④ 녹색 합리주의
5. 생태 민주주의를 통한 생태적 근대화의 급진화
6. 녹색 대안을 찾아서

1. 우리는 어떤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¹⁾

21세기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자유무역과 개발의 열풍 속에 ‘자기조정적 시장’ (폴라니)의 위세는 더욱 커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자기조정적 시장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21세기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것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시장이 아무 저항 없이 확산되어 온 것은 아니다. 폴라니가 올바르게 보았듯이 시장의 확산은 사회와 자연의 자기보호 기제를 작동시켰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시민운동, 환경운동의 발전, 그리고 이로 인한 부분적인 민

1) 이 글은 포럼 ‘바람과 물’ (2006. 6. 17)에서 “녹색화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한 글이다.

주화와 환경개선은 사회와 자연이 시장에 포섭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하고 새롭게 구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환경관련 분쟁과, 느리지만 조금씩 나타나는 민주화의 움직임도 시장 체계만이 지배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기보호를 위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져 간다는 점이다. 자기조정적 시장은 우리의 삶의 방식, 생각하는 방식을 모두 바꾸고 우리를 생산/소비자로서의 개인으로 고립시킨다. 세상에는 오직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손해를 줄이려는 경제학적 인간들 사이의 거래가 있을 뿐이다. 토지, 자연, 노동이 모두 거래되는 상품일 뿐이고 더 많은 가격을 받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거래해야만 한다. 우리가 시장 안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로서만 살아간다면 그러하다.

시장이 커질수록 우리는 시민 혹은 생활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생산자/소비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삶의 영역은 먹고살기 위해 억지로 일하거나, 소비하면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살아 있는 기계의 영역으로 치환된다. 서로 사랑하고 돕고 생각하는 '쉬는 인간', 남을 위해, 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시민으로서의 인간'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폭주기관차와 같은 시장의 힘은 좌파도 우파도 녹색도 막을 수 없다. 다만 브레이크를 밟거나 저항하거나 방향을 약간 돌릴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시장을 지배하는 문화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풍요와 건강과 장수를 약속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이것들을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져다주기도 한다. 유럽과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몇 나라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시장의 쓴 맛을 보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요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과잉과 시장의 빈곤, 이 두 가지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문제는 시장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사회와 자연을 파괴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사회 위기와 생태위기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시장의 확산은 같은 마을 사람들을 경쟁자로 만든다. 옆집의 성공이 나의 실패가 될 수도 있다. 공동체의 협동과 사랑은 개인들 사이의 경쟁으로 변화한다. 시장의 확산은 자연의 대상화를 가속화시킨다. 토지는 살기 위한 땅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부동산으로 그 의미가 변화한다. 모든 자원은 시장의 가격에 의해 평가된다. 이 때문에 나는 사회위기와 생태위기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본다.

2. 그 동안 환경운동은 무엇을 했는가?

시장의 확산 속에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었다. 1987년 이후 비로소 시민사회가 활발하게 공론장을 형성하고 발전시켰다. 그 속에서 환경운동은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환경을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만들었다.

환경운동이 한 일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환경문제를 쟁점으로 만들고 환경정책을 개선하고 사람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일을 했다. 이 덕분에 부분적으로 환경이 좋아지기도 했다. 둘째로 환경운동은 시민사회 공론장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민중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의 버팀목이 되고 연대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2000년 총선 시민연대는 그 힘의 극적인 표현이다.

2000년대 들어 환경운동은 정치지형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첫째, 환경 이슈는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의제로 포섭되었다. 지방의제 21을 통해서 ‘가버너스’ 라는 이름으로 민관 파트너십 활동이 일상화되었다. 이를 통해 환경문제가 다소 개선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예전처럼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

둘째, 환경운동의 힘이 세지면서 동강댐 반대운동이 성공한 이후, 반환경운동의 힘이 점차 성장했다. 보수언론은 환경운동단체의 급진적, 근본적 특성, 도덕적 지도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 반환경운동 담론을 주도하고 있다.

셋째,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시민사회운동 전반의 약화를 가져왔다. 정치적 비전과 실행력의 부족은 정치적 무관심과 무력감을 확산시키고, 사회전체의 파편화를 확산시켰다. 시민사회운동의 성장과 제도화가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역설을 낳은 것이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전세계적인 시장의 확산이다. 시장에 뛰어들어 선두에 서지 않는 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폭주기관차가 오늘의 모습이다. 복지국가의 민주주의도 위협에 빠질 수밖에 없다. 보다 좋은 일자리, 보다 많은 소득을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는 선거에서 패배한다.

둘째는 변화된 세계적인 조건 속에서 우리 나름의 진보를 이끌 철학적, 지적 지도력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좌와 우를 요동치고, 노동운동세력 역시, 지적, 도덕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시민사회 역시 시장의 확산 앞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3. 개발동맹과 녹색연대: 담론 구성체²⁾

1) 개발동맹과 녹색연대

앞에서 보았듯이 시장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핵심어는 언제나 ‘경제’ 이다. “경제에 올인하라”, “이제는 경제다”,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말은 1970년대 ‘반공’ 이라는 말만큼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모든 가치는 공허하다.

이러한 변화는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되었다. 시장 중심으로 체계가 변화하면서 환경보다는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생각과 실천이 점차 확산되었다. 총론으로는

2) 3절은 구도완(2004)을 요약한 것이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 이러한 경향은 개발동맹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개발동맹과 녹색연대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발동맹과 녹색연대는 전혀 다른 철학과 이념, 이해관심을 가진 사회세력들의 연합이다³⁾. 개발동맹의 장이 경제체계이고, 주된 매체가 돈인 반면, 녹색연대의 장은 생태계⁴⁾이고 주된 매체는 생태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세력은 담론적, 비담론적 실천에 의해 구성된다. 여기서 특히 담론은 이 두 세력이 '사회적 힘으로 구성' (empowerment)되는 데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사람들이 이윤을 위해 행동할 때 그것을 동기화하는 것은 바로 문화이자 담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글에서 개발동맹과 녹색연대를 설명하는 핵심개념인 담론구성체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푸코(Foucault)의 영향을 받아 담론구성체의 개념을 확립한 빼쇠(Pecheux)는 담론구성체를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Pecheux, 1982: 111). “단어, 표현, 명제 등은 그것들이 그 속에서 생산되는 담론구성체로부터 그것들의 의미를 획득한다 “. 그에 의하면 단어, 표현, 명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그 의미가 바뀐다. 이 뿐만 아니라 개인들은 ‘언어 속에서’, 즉 담론구성체에 의해서 말하는 주체, 즉 담론의 주체로서 구성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자명한 주체로서 자명한 언어를 사용하여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양한 이념갈등과 투쟁 속에서 마치 우리가 주체인 것처럼 상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빼쇠의 담론 이론은 알튀세(Althusser)의 구조적 맑스주의와 푸코의 이론의 영향을 받아 담론과 이념이 주체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한 이론이다(구도완, 1990).

이러한 이론은 주체를 규정하는 담론과 이념의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약점이 있지만 새로운 저항적인 담론구성체의 형성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 담론구성체 개념은 우리에게 당연시되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개발동맹 담론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이 개념으로 우리는 개발동맹이라는 지배적인 담론구성체 안에서 생겨났지만 사회적 실천 속에서 대안적인 담론구성체로 성장한 녹색연대를 설명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담론구성체 개념을 바탕으로 개발동맹과 녹색연대의 특성을 분석한다.

개발국가는 개발동맹이라는 핵심적인 세력연합에 의해 기능한다. 개발동맹과 녹색연

3) 두 담론구성체 가운데 하나는 동맹, 다른 하나는 연대라고 이름 붙인 것은 두 담론구성체의 관계망과 매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개발동맹은 돈을 매개로 연결된 강고한 경제적, 이념적 세력동맹인 반면, 녹색연대는 가치를 매개로 연결된 느슨한 네트워크이다.

4) 여기서 생태계는 생태계 그 자체가 아니라 담론적, 비담론적 실천을 통해 사회 속에서 구성되는 생태계를 말한다.

대, 이 두 블록은 전혀 다른 가치관과 이데올로기, 이해관심, 참여자와 지지자, 이론 배경을 갖고 있다. 개발동맹은 경제개발과 성장, 인간중심주의와 같은 지배적인 사회 패러다임을 주된 가치체계로 공유하는 반면, 녹색연대는 새로운 환경·생태패러다임을 지지한다. 개발동맹은 인간 중심주의(Anthropocentrism) 가치관을 바탕으로 생산력 발전을 주된 가치와 목표로 삼는 반면 녹색연대는 인간중심주의에 반대하고 생태계 균형을 중시하는 이념을 갖는다. 개발동맹의 핵심세력은 경제성장과 개발을 지지하고 이로부터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얻는 정치인, 관료, 자본이다. 반면 녹색연대는 인간 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을 지지하는 환경운동조직이 핵심을 이룬다. 개발동맹이 경제적 이해관심에 바탕을 둔 강한 연결망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하여 녹색연대는 생태적 이해관심을 바탕으로 느슨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이다.

〈표 1〉 개발동맹과 녹색연대의 특성

사회블록 특성	개발동맹	녹색연대
패러다임	개발중심의 지배적 사회 패러다임	새로운 환경·생태 패러다임
이데올로기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 생산력 중심주의	비인간중심주의 (non-anthropocentrism) 생태 중심주의
핵심세력	개발주의 정치인·관료·자본	환경·생명 운동조직, 풀뿌리공동체
이해관심	경제적 이해관심	생태적, 호혜적 이해관심
유형	개발독재 (개발-반공동맹: 박정희, 전두환) 신자유주의(김영삼, 김대중) 신개발주의(노무현)	좌파환경주의(공해추방운동) 지속가능발전 생명운동/생태주의

개발동맹과 녹색연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기회구조, 경제·사회적 조건에 따라 그 영향력과 연계의 특성이 달라진다. 개발동맹과 녹색연대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개발동맹의 핵심인 개발국가 내에서는 경제부처가 개발 담론 구성체의 재생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먹고 살아야지 환경보전도 가능하다’ 는 담론을 경제부처는 자본과 함께 지속적으로 생산, 재생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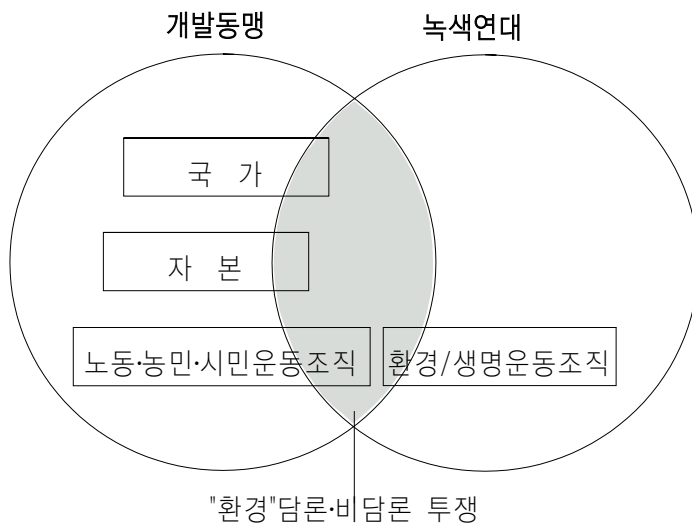
보전부처는 개발국가, 생산력 중심 국가라는 구조적 조건에 있는 한, 개발동맹에 속한다. 보전부처는 개발국가의 하위 기구로서 개발을 위해 기능해야 하는 역할과 환경을 우선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역할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한다. 보전부처는 녹색 연대 담론구성체의 정당성과 영향력이 커질 때 녹색연대에 느슨하게 연결되기도 한다.

자본은 개발 담론구성체의 핵심으로서 국가와 개발동맹을 형성하고 그 이념을 확산시킨다. 환경, 사회, 경제의 균형발전을 실천하는 개별 자본이 녹색 자본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지만, 사회세력으로서 자본 일반은 개발 중심의 이념과 실천을

조직하는 엔진이다. 자본이 지속적으로 ‘환경’ 과 ‘지속가능발전’ 담론을 생산하는 것은 개발 담론구성체 안에서 주체를 재생산하는 한에서만 그러하다.

노동·농민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은 환경운동조직과 함께 시민사회의 핵심세력이지만 지배적인 개발 담론구성체에 깊이 포섭되어 있다. 민주주의와 권리 담론에서 이 세력들은 환경운동조직과 연대하지만 녹색연대에는 매우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개발 담론구성체와 녹색 담론구성체의 담론 투쟁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의 양과 질이 급속하게 변한 현대에서 대중매체는 개발동맹과 녹색연대 사이에서 사안에 따라 주요 의사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신문과 방송이라는 거대 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의 중요성도 매우 커지고 있다. 개발 중심의 공론장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녹색 공론장(public sphere)은 일부 매체, 일부 사안에 제한되어 있다.



〈그림 1〉 개발동맹과 녹색연대의 구조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동맹과 녹색연대는 국가, 자본, 시민사회를 둘러싸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담론적, 비담론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환경운동조직은 국가, 자본, 노동, 농민, 시민운동조직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재는 일부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녹색연대는 소수자의 반대 주창운동에 머물 수 있다. 녹색연대가 녹색 공론장을 활성화하여 국가, 자본, 시민사회를 녹색으로 바꾸는 녹색 주류화(green mainstreaming)의 길은 멀고 험난하다.

2) 개발동맹/녹색연대 정치지형의 변화

박정희 정부는 경제성장에 대한 광범한 이데올로기 동의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았다. ‘빈곤의 악순환’ 을 깨고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해’ 는 불가피한 부

산물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국가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널리 내면화되어 있었다. 억압적인 반공은 가시적인 경제성장과 그 이념적 정당화 속에서 18년간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개발-반공 동맹은 1980년 이후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으나 1987년까지 유지되었다. 해방후 1987년 이전까지 한국 국가의 특징은 억압의 과잉동원, 급속한 자본주의화, 그리고 돌진적 산업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통합의 훼손과 환경파괴, 그리고 이로 인한 정당성 위기가 일상화되었다. 이렇게 볼 때 1960년대부터 1987년까지 한국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이면서 권위주의적 개발국가라고 볼 수 있다. 권위주의적 개발국가의 닫힌 정치적 기회구조 아래 개발-반공 동맹과 개발-민주 동맹이 투쟁하는 상황이 1987년까지의 정치지형의 특성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1987년 이후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87년 이후 자본주의화와 산업화는 일관되게 진행되었으나, 국가의 억압은 점차 약해지고 정치적 기회구조는 크게 개방되기 시작했다. 열린 정치적 기회구조 아래, 시민사회가 새롭게 형성되고, 정당성을 획득해 나가기 시작했다. 경실련, 공해추방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의 전신), 배달환경연합(녹색연합의 전신) 등 시민운동조직들은 취약한 정치사회의 빈 공간을 메우면서 급속히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진퇴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발전은 20세기 말 이후 전 세계를 지배해 온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커다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국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국민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경쟁 국가의 속성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⁵⁾

1987년 이후 개발동맹은 반공이라는 정치적 이념동원을 점차 줄이면서 노동을 배제하는 전략을 떠나갔다. 새롭게 등장한 경실련 중심의 시민운동은 이러한 정치공간 속에서 개발동맹의 안과 밖을 오가며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넓혀나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발동맹과 다른 녹색연대의 담론구성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1980년대 ‘공해추방’ 담론으로 성장-민주 동맹의 한 구석에 있던 녹색 담론구성체의 씨앗이 1990년대 이후, 지속가능발전, 환경, 생명, 생태 담론으로 확산되며 개발 담론구성체의 담론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것은 개발국가의 정책과 담론변화로 나타났다. 1987년 이후 노태우 정부는 급진적인 노동운동과 통일운동,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억압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시민운동과 환경운동을 체제 안으로 포섭하는 전략을 폈다. 1990년 환경처 승격과 환경원년 선언 등은 이러한 노태우 정부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김영삼 정부는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시키고, ‘환경대통령선언’을 통해 환경정책 강화를 천명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선언」을 통해 환경정책의 강화를 천명했고 아울러 동강댐 백지화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립을 선언했다.

5) 노동의 유연성 제고, 산업 구조조정, 노동운동의 억압 등의 1990년대 정책의 기초는 경쟁국가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3) 담론분석의 결과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와 환경운동단체의 담론을 분석하면 개발동맹과 녹색연대가 전혀 다른 담론 구성체 속에서 같은 소리(기호표현)를 사용하지만 다른 의미의 연쇄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담론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구도완, 2004 참조).

첫째, 1960년 이후 모든 정부는 경제성장이라는 개발국가의 목표를 공유한다. 둘째, 1987년 이후 개발-반공 동맹은 급속히 해체되었지만 개발 담론구성체는 여전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셋째, 1980년대 이후 반공해,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생명 담론 등이 형성되면서 녹색 담론구성체가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넷째,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을 둘러싸고 개발 담론구성체와 녹색 담론구성체의 투쟁이 지속되어왔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누가 어떻게 개발동맹을 형성하는가? 대통령 취임사 분석에서 우리는 개발동맹의 핵심적인 주도세력인 국가가 55년간 개발 중심의 지배적인 사회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환경보존' 네 글자를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은 취임사의 의제로 설정되지도 않았다. 개발국가의 개발부처 관료, 자본, 정치인 그리고 다양한 이익집단들은 개발동맹을 형성하여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심을 매개로 튼튼한 연줄망을 이용한 자원동원 능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누가 어떻게 녹색연대를 형성하는가? 녹색연대의 핵심세력은 환경운동조직이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환경운동조직은 민주화와 환경을 결합시키는 좌파 환경주의로부터 현실 환경주의와 생태주의로 이념적 경향을 변화시키면서 그 연대의 힘과 폭을 넓혀왔다. 주된 세력은 민주화운동 세력과 피해주민으로부터 시민과 전문가로 확대되었다. 녹색연대는 경제적 이해관심이 아니라 도덕적, 생태적 이해관심을 바탕으로 연결된 정체성의 공동체이다. 노동조합이 주로 경제적 이해관심으로 조직되는 것과 달리 녹색연대는 이익보다는 가치에 기반한 연대이다. 물론 피해주민의 피해보상운동, 지하하락에 반대하기 위한 혐오시설 반대운동 등 자기이익이 주된 자원인 경우도 많다. 그러나 동강댐, 새만금 사례에서 보듯이 녹색연대의 주된 자원은 생태계에 대한 이해관심으로 확대되었다. 녹색연대는 다양한 상징과 직접행동을 통해 흩어져 있는 시민을 녹색연대의 일원으로 동원한다. 이러한 동원 양식은 도덕적, 상징적으로 강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취약하다.

4. 녹색 담론구성체⁶⁾

녹색 담론구성체는 하나인가? 녹색이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날 녹색은 널리 쓰이는 말이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리 오래 쓰인 말이 아니다. 공해, 환경이 훨씬 일반적인 말이다. 먼저 그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자.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잘 사는’ 것이 기본적인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공해’ 담론은 주된 담론이 될 수 없었다. 1980년대 들어서 ‘공해’ 담론은 ‘민중’ 담론과 결합되어 ‘공해추방운동’이라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공해’ 담론은 급속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환경’ 담론이 대체했다. ‘환경’ 담론은 새롭게 등장한 ‘시민’ 담론과 결합되고 다른 한편 ‘생명’ 담론이라는 새로운 담론과도 결합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환경’ 담론에서 적대적 특성이 급속히 사라지기 시작했다⁷⁾. 환경, 시민, 생명과 같은 핵심적인 기호들이 서로 융합되면서 ‘환경’ 담론은 지배적 사회 패러다임의 담론과 때로는 적대적으로 때로는 비적대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1990년대 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 같은 보수적 언론에서 스스로 환경운동의 주체⁸⁾가 되어 환경담론을 재생산한 사실은 이 시기 환경담론이 ‘보편적 가치’ 담론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공해 피해 주민들과 시민의 건강 문제가 주된 이슈였다면, 1990년대에는 자연, 생명, 지구환경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 환경운동조직들은 건강이나 오염 문제로부터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운동영역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동강댐 반대운동의 성공은 이러한 움직임의 정점을 보여준다. 200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운동은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운동’,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동강댐 반대운동의 성공과 새만금 반대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이제 환경 담론은 더 이상 보편적인 가치 담론이 아니라 개발 담론구성체와 녹색 담론구성체 사이의 담론 투쟁의 장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롭게 나타났다고 보다는 담론들 간의 차이가 동태적인 사회운동의 과정을 통해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운동의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담론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서구의 환경담론들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문화와 접합되고, 변형되어 우리의 담론으로 소통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담론들 사이의 차이를 가로지르는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이고 그 것이 갖는 철학적,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6) 4절과 5절은 구도완(2006)을 요약한 것이다.

7) 공해추방운동연합이 환경운동연합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담론의 적대적 성격이 크게 약화된 사실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구도완, 1996: 218-20).

8) 조선일보는 “쓰레기를 줄이자” 캠페인을, 동아일보는 “그린스카우트 운동(그린 헬리 운동)”을 주도하거나 지원했다.

필요하다. 이것은 현재의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전망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 환경담론의 유형: 이념형 연구⁹⁾

한국의 환경담론 지형을 올바르게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중요한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호를 구분 짓는 의미의 차이가 소통되는 과정이다. 환경위기의 원인, 문제, 해결책, 해결의 주체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담론은 주체로 하여금 다른 의미를 소통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차이의 구성은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담론 지형의 변화는 더욱 빠르다.

나는 1990년대 초반의 우리나라 환경 담론 지형을 환경관리주의, 좌파 환경주의, 그리고 생태주의로 구분했다. 이러한 담론 구분은 당시의 담론지형을 반영한 것이다. 공해추방운동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계승하면서 좌파 환경주의 담론을 소통시켰다. 반면 당시의 환경부 등 정부 담론은 물론, 새로 등장한 경실련 환경개발센터의 이념은 환경관리주의를 크게 넘지 않았다. 1990년대 초에 나타나기 시작한 생태주의 지향의 생명 담론은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생태주의는 좌와 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비판하면서 대안적인 담론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다(구도완, 1996: 44-55).

이러한 담론 지형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변화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부, 기업, 환경운동조직이 모두 사용하는 담론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좌파 환경주의의 자본주의 비판 담론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셋째, 환경정의 담론이 발전하였다(최병두, 1999; 조명래, 2001; 한면희, 2004; 이상헌, 2003). 넷째, 근본적인 생명, 생태 담론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다섯째 대안적인 정책제안과 감시 운동이 크게 발전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류 환경운동조직과 생태주의적 운동조직 사이에 운동 이념, 자원동원방식 등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담론과 활동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석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드라이잭(John S. Dryzek)의 『지구환경정치학 담론』(The Politics of The Earth)을 참조할 수 있다. 드라이잭은 산업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을 두 가지 차원으로

9) 우리나라에서 환경 담론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다. 문순홍(1992, 1999)은 생태학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소개하였다. 그녀는 근본 생태론, 사회 생태론, 생태 사회주의, 생태 맑스주의, 생태 여성론, 생물지역론 등 환경담론을 자세히 설명하고 비평했다. 최병두(1999)는 환경담론을 모던 환경론과 포스트 모던 환경론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환경담론을 다시 기술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사회주의 환경론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최병두(1999)를 비롯하여 조명래(2001), 이상헌(2003) 등은 환경정의론을 통해 환경 담론의 지형을 넓혔다. 한면희(2004)는 생태학과 생명론을 결합하여 대안적인 생태윤리와 문명론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담론을 포괄적으로 유형화하는 데 유용한 준거를 제공해 주는 드라이잭의 담론 분석을 참고로 한다.

나누었다. 첫째 기준은 산업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 개혁적인지 근본적인지가 하는 것이고, 둘째 기준은 답습적(prosaic)인지 창조적인지 하는 기준이다.

나는 드라이제의 담론구분을 참고하여 우리 사회의 담론지형을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해, 산업주의의 개량/변형이라는 기준과 낭만주의/합리주의라는 서로 다른 두 기준을 선택했다. 첫째 기준은 산업주의 혹은 자본주의 경제, 정치, 문화체계의 근본적 변형을 지향하는 담론과 부분적인 개혁 혹은 개량에 머무는 담론으로 나누어진다. 환경담론은 모두 과잉생산 과잉소비의 산업주의의 폭주기관차를 수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폭주기관차를 약간 고치든지 속도를 좀 늦추면서 그 기차를 타고 가야한다고 본다. 또 다른 사람들은 폭주기관차에서 내리든지 아니면 기관차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기준은 합리성과 이성에 대한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한편에 반이성, 반근대, 탈근대의 특성을 갖는 낭만주의가, 다른 한편에 이성, 근대, 탈마술의 특성을 갖는 합리주의로 나누어진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폭주기관차에 탄 사람들의 마음과 영성을 모아 기관차에 내려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이들은 냉철한 이성을 가진 개인들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기관차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두 기준을 바탕으로 환경담론을 구분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산업주의와 합리성을 준거로 본 환경담론의 유형

합리성 에 대한 입장	산업주의에 대한 입장	산업주의 유지/개량	산업주의 변형
	낭만주의	생태권위주의	녹색 낭만주의
	합리주의	지속가능발전론	녹색 합리주의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첫째 산업주의와 자본주의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담론들 사이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환경담론에 널리 퍼져 있는 낭만주의를 합리주의와 구분함으로써 ‘자연의 재마법화’ 담론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이후 생명 담론이 확산되면서 환경운동에 낭만주의 담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현상을 판별할 수 있다. 셋째, 실천적 의미로서 한국 사회에서 200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환경운동의 철학의 빈곤 혹은 과잉의 특징을 보다 분명히 밝힐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생태권위주의 담론의 특성을 살펴보자. 생태 권위주의는 신멜서스주의 특히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의 구명선 윤리에 잘 나타난다. 환경 담론은 아니지만 나치즘이 강조한 혈통과 자연은 파시즘이 낭만주의의 전형임을 잘 보여준다.

지속가능발전론은 경제학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산업주의와 자본주의를 더욱 발전시키

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담론이다. 지속가능발전론은 생태적 한계를 한편에서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는 담론을 내포하고 있다. 이 담론은 경제, 환경,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행정적 합리주의, 민주적 실용주의, 경제적 합리주의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특히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의 환경담론이 여기에 포함된다¹⁰⁾.

그러면 산업주의의 변형 담론은 어떠한가? 먼저 낭만적 산업주의 변형 담론을 우리는 녹색 낭만주의라 부를 수 있다. 녹색 낭만주의는 산업주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만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어떤 개혁적 환경정책, 개량적 환경운동도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이 산업주의의 뿌리는 근대적 합리성과 과학주의에 있다. 따라서 서구, 근대, 이성, 남성과 같은 지배적 가치로부터 단절하고 비서구, 탈근대, 영성, 여성과 같은 새로운 대안적 가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환경운동을 통해서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운동, 일부 생태여성론 담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녹색 합리주의는 산업주의와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형해야만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녹색 낭만주의와 별 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녹색 합리주의는 근대적 합리주의의 성과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태적이고, 성찰적으로 급진화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자연을 다시 신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부터 해방을 급진화시킴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이 점이 녹색 낭만주의와 녹색 합리주의를 구분 짓는 중요한 차이이다¹¹⁾.

10) 지속가능발전론은 환경관리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환경관리주의는 기술낙관론에 근거하여 생태학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기술관료적으로 관리하여 자본주의, 산업주의적인 발전을 지속하려는 담론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론은 환경관리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나 빈곤퇴치, 전지구적 협력, 시민사회의 민주적 참여와 같은 좀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담론으로 소통되고 있다. 양자는 산업주의 유지 혹은 개량이 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하다. 결국 환경관리주의 담론은 넓은 의미의 지속가능발전론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11) 1990년대 환경 담론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환경관리주의 담론은 지속가능발전론으로 진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지속가능발전’이 전지구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 지속가능발전 담론을 전유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운동의 제도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가능발전 담론이 확산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둘째, 좌파 환경주의 담론은 매우 약해져서 환경정의 담론으로 소통되고 있다. 이것은 넓은 의미의 녹색 합리주의 담론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1990년대 생태주의 담론은 녹색 낭만주의 담론과 녹색 합리주의 담론으로 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반합리적 낭만적 생태주의 담론이 재생산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태주의 담론을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담론 유형구분은 이념형적 분류이다. 한 사람의 담론 안에서 다양한 유형이 공존할 수도 있고 한 단체 내에서도 다양한 담론이 공존하는 경우도 많다. 이 담론들은 개발 담론구성체와 녹색 담론구성체 사이에 있는 그런 소통불가능성의 장벽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들 사이에는 동일성만큼이나 차이도 크다. 다음 절에서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각 담론들의 특성과 그것의 의미를 분석한다.

2) 환경담론의 실제

1990년대 이후 환경운동은 급속히 발전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왔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 환경운동세력들의 담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차이보다는 유사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환경운동 사이에 차이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4년 이후 ‘환경운동 위기론’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토론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이념형적 분류를 통해 각각의 환경담론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① 생태권위주의

산업주의를 변형하지 않은 채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담론으로서 생태권위주의와 지속가능발전론을 검토해 보자. 첫째, 생태권위주의 담론은 산업주의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권위주의적인 정치동원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근대가 이루어온 민주주의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후퇴시켜야만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자연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대중동원의 객체가 되거나 배제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생태적 의식으로 무장한 엘리트들이다. 자기이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대중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생태권위주의 국가는 필수불가결하다. 자연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민주주의적 토론은 무시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 권위주의 담론의 전형을 우리나라에서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연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국가에 의존하려는 경향은 환경운동에 널리 퍼져 있다. 자연보다 밥을 중시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압력을 넣고 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면 대중으로부터는 더욱 멀어지고 권위주의적인 강력한 국가에 대한 향수는 커진다. 박정희 대통령이 억압적으로 그어 놓은 그린벨트를 다시 억압적 국가가 지켜 주기를 바란다면 이는 생태권위주의 담론의 그늘에 있는 것이다.

② 지속가능발전론

지속가능발전론은 산업주의와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면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환경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담론이다. 이 담론은 미래세대의 요구충족 능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한계의 개념을 포함하지만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

장을 당연시함으로써 한계 담론을 무력화시킨다. 이러한 내재적인 모순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담론은 지속가능한 성장, 지속가능한 기업경영과 같은 성장주의 담론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담론에서 참여를 활성화하는 민주적 국가는 매우 중요한 주체이다. 관료, 기업, 시민, 여성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지속가능발전 담론은 인간중심주의적인 특성이 강하고 경제학적 인간관을 전제하고 있다. 주로 환경친화적 과학기술에 의존하여 환경과 경제의 병행발전을 추구하는 ‘약한 근대화’ 담론은 지속가능발전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Christoff, 1996).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 담론은 환경담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의 ‘새천년 환경비전’,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 등의 담론에서 지속가능발전 담론이 잘 나타나 있다. 환경운동 담론에서도 지속가능발전 담론은 매우 널리 퍼져 있다. 환경운동가들 사이에는 ‘경제가 잘 되어야 환경도 보전된다’는 경제결정론이나 ‘환경을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경제환원론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가 사회위기로 전환되고 그것이 다시 환경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다. 1980년대 반공해 담론이 약화되면서 1990년대 이후 지속가능발전 담론은 정부, 그 가운데 보전부처의 지배적인 담론¹²⁾이자 환경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담론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경향은 환경운동이 점차 제도화되면서 더욱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의제 21 등 새로운 가버넌스 기구들은 지속가능발전 담론의 확대 재생산의 주체로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기업이나 정부와의 협력 활동을 많이 하는 조직에서 지속가능발전 담론은 자주 발견된다.

“지난 26년간 환경운동을 해오면서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소득도 많았습니다만, 시대가 바뀌었으니 환경분야의 문제해결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 손잡고 정부정책에도 반영되고 기업도 수익에 도움이 되고 환경도 살리는 제 3의 대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중략) 정부-기업-시민이 함께 사는 환경재단의 윈-윈-윈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최열 환경재단상임이사, <http://www.greenfund.org/>, 재단소개, 2005.10).

환경운동조직이 기존 사회제도의 돈, 인맥 등 자원에 주로 의존하는 한, 산업주의의 구조변형이 아니라 산업주의의 확대발전을 통해서만 스스로를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제도화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12) 정부의 주류 담론이라는 것이 주된 실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담론과 비담론적 실천은 종종 분리된다.

③ 녹색 낭만주의

산업주의를 개량하거나 온존시키는 담론에서 새로운 철학을 찾기는 쉽지 않다. 철학의 빈곤을 극복하는 길은 산업주의를 변형하려는 담론 속에서 현실적이면서 창조적인 철학을 발견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녹색 낭만주의와 녹색 합리주의를 보다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녹색 낭만주의의 특징을 토론해 보자. 녹색 낭만주의 담론에는 심층생태론(Deep Ecology), 생명운동담론 등이 포함된다. 녹색 낭만주의는 지속가능발전론을 비롯한 개량적인 환경운동과 환경정책으로는 결코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본다. 산업주의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변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다시 그 담론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고 이들은 본다. 이들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자연친화적인 본성, 초월적이고 영성적인 본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억압적인 국가를 민주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소규모 공동체가 생물지역주의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회를 이상향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녹색 낭만주의 담론은 한살림 모임의 한살림 선언에 최초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나타났다. 이 담론을 우리는 주로 생태주의, 혹은 생명 담론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생명 담론은 서구의 심층생태론, 머레이 북친(Murray Bookchin)의 사회생태론¹³⁾은 물론 동학사상, 노장사상 등이 융합되어 하나의 독립적인 철학체계를 이루어 가고 있다. 김지하의 생명사상, 김중철의 담론 그리고 지울 스님의 담론과 실천이 그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처음 고속철도가 천성산의 심장부를 관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산이 울고 있다고 느꼈으며 산이 도와 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늪가의 아주 작은 벌레와 이름 모를 꽃들과의 약속이었고 숲을 지키는 새들과 달아나는 고라니를 향해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약속이었습니다(지울스님과 도롱뇽의 친구들, 2004: 77).”

생명담론은 1990년대 이후 확산되어 왔다. 동강댐 반대운동에서 주된 상징은 어름치, 수달과 같은 ‘생명’ 이었다. 새만금 반대운동에서는 수질오염이 주된 쟁점이었다가 점차 갯벌의 망둥이, 조개, 이름 없는 생명들로 점차 바뀌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성직자들의 자기희생이 환경운동의 주된 상징이 되었다.

1990년대 나타나기 시작한 녹색 낭만주의는 녹색의 철학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동강댐 반대운동, 새만금 반대운동에 나타난 지지를 보면 이를 유

13) 드라이젝은 북친의 담론을 녹색 합리주의로 분류하였다. 그 이유는 북친이 심층생태론의 반합리주의 반인간주의를 비판하고 합리적인 인간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명운동 담론은 심층생태론의 반합리주의와 사회생태론의 공동체주의가 결합하는 형태를 보인다.

추할 수 있다. 천성산터널 반대운동에서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녹색 낭만주의 담론/철학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녹색 낭만주의는 인간중심주의적 인식론에 반대한다. 데카르트-뉴턴 패러다임이 전제하는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독점적 권위를 근본적으로 비판한다.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존재를 인정받고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서구적 산업문명에 의해 그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둘째, 녹색 낭만주의는 서구, 합리성, 근대를 근본적으로 비판한다. 근대과학도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문화적 생태여성론에서 잘 나타난다. 보수적 혹은 문화적 생태여성론은 여성=자연=생명=반이성=탈근대의 의미연쇄를 지지하고 이에 대해 남성=기술문명=반생명=이성=근대의 의미연쇄를 비판한다. 반다나 시바에 따르면 최근의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죄악의 뿌리는 생의 다양성과 거룩한 존엄성을 파괴하는 공범인 과학과 경제성장에 몰두하는 계몽주의이다(드라이젠, 2005: 280).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주의가 결국 자연을 억압하므로 가부장주의와 근대주의를 모두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일이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담론에서 산업주의와 남성주의에 대한 비판이 근대가 이루어온 진보와 해방의 성과를 통째로 버리는 또 다른 극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녹색 낭만주의는 생태적 감수성이나 영성, 종교적 깨우침을 중시한다. 지울 스님의 담론과 실천에서 이러한 경향을 잘 볼 수 있다.

“산이나 나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았던 우리의 오랜 전통은 실용주의적인 사고 속에 매장되어 버렸고, 심지어는 미신으로 치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미신이라고 외면하는 오래된 풍습들은 대부분 변화와 순환을 거듭하는 자연의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과학적 사고방식은 그러한 교감능력을 퇴화시켜 버렸다.” (지울, <http://cafe.naver.com/chorokgm.cafe>, 2005, 10)

생태적 감수성의 회복을 통해 문화의 변화를 추구하는 ‘꽃꽃세상을 위한 모임’은 적극적으로 ‘녹색 감수성’을 깨우치는 일을 하고 있다.

“새-돌-풀-골목길-조개-꽃-지렁이-자전거-논에게 꽃꽃상을 드린 우리의 꽃꽃운동에는 미적 리듬이 있으며, 우리는 녹색감수성이라 부를 수도 있는 이 미적 리듬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만 이 별의 모든 형제 공동체와 진정한 교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꽃꽃운동은 그러므로,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쁨의 소리와 함께 신음소리 또한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고는 진정한 기쁨이 불가능하다는 확신 때문에 꽃꽃운동은 반성과 동시에 기쁨과 경탄의 운동이기도 합니다” (<http://www.fulssi.or.kr/>, 2005, 10).

넷째, 녹색 낭만주의는 오늘날의 환경위기는 문명의 위기이므로 새로운 문화를 통해

서만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농업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사회가 녹색 낭만주의의 주된 이상향 가운데 하나이다.

“오늘날 생태학적 위기로 요약되는 이 어처구니없기도 하고 끔찍스럽기도 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결국 우리들 각자가 자기 개인보다 더 큰 존재를 습관적으로 의식할 수 있게 하는 문화를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가 생명의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문화의 재건은 우리 각자의 인간적인 자기훼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이 분명하다. (중략)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협동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상부상조의 사회관계를 회복하고, 하늘과 땅의 이치에 따르는 농업중심의 경제생활을 창조적으로 복구하는 것과 같은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조직하는 일 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 (김종철, 1999: 19).

티벳의 라다크 지역에 대한 『오래된 미래』는 녹색 낭만주의자들의 눈에 보인 평화롭고 행복한 전근대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인류학자들의 보고서를 보면, 생산력이 굉장히 낮은 단계에 있는 소위 미개 사회 - 미개사회라고 해서 그 나름의 풍부한 문화를 누리는 인간사회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중략)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중략) 아주 낮은 생산력 단계에서 고르게 원만하게 잘 살고 있어요” (김종철, 1999: 51-52).

녹색 낭만주의는 환경운동 담론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첫째, 주류 환경운동의 철학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주류 환경운동단체의 담론에서 생명 담론은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녹색연합은 출범 초기부터 생태 낭만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갖고 있었고, 이후에도 백두대간 보호운동 등을 통해 생태중심의 철학을 실천에 옮겨왔다. 2003년 이후에는 천성산터널 반대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둘째, 녹색 낭만주의는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 귀농운동, 공동체운동 등의 철학적 뿌리가 되었다. 장일순과 김지하는 한살림 운동의 이념적 뿌리이자 정신적 스승이다.

셋째, 녹색 낭만주의는 생태 신학적 종교운동으로 발전했다. 불교환경교육원(에코 붓다)은 불교에 바탕을 둔 생명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은 생명담론을 통한 종교적 각성을 확산시켜왔다. 2003년의 새만금 삼보일배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볼 때, 녹색 낭만주의 담론은 도구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산업주의를 근원적으로 비판하고 인간의 성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철학의 저수지임에 틀림없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는 말은 진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녹색 낭만주의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산업주의를 근본적으로

비판하지만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김종철은 농업, 공동체, 생협운동을 강조하고 김지하¹⁴⁾는 생명민회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운동은 산업주의의 폭주기관차에서 내려 생태공동체라는 해방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폭주기관차가 블랙홀처럼 그 속도와 규모가 너무나 빠르고 커서 보통사람들이 거기서 내리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심지어 해방구조차 폭주기관차와 소통하지 않으면서 살기 어려운 것이 지구화된 지구의 현실이다¹⁵⁾.

둘째, 합리성 비판은 근대가 이룬 성과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반합리주의로 연결될 수 있다. 근대 이후 인간은 마술로부터는 탈피했으나 산업주의와 자본주의에 다시 구속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근대는 공동체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개인을 탄생시켰다. 공동체, 공공의 이름 아래 진행되던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차이와 정체성의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근대이다.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에서 죽은 수많은 부르주아와 노동자들을 대가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일부 녹색 낭만주의자들이 그리는 전근대는 억압 없는 평화와 화해와 상생의 공동체이지만 역사적 전근대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도구적 합리성을 비판하는 것과 신비주의와 마술을 다시 불러오는 것은 전혀 다르다.

셋째, 녹색 낭만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을 고착화시키고 자연을 특권화함으로써 인간 사이의 차이와 소통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녹색 낭만주의의 과잉은 생태 권위주의로 연결될 수 있다. 머레이 북친이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인간과 자연을 대립시키는 순간 사회 속의 계급, 인종, 성, 민족간의 차이와 차별은 사라진다.

④ 녹색 합리주의

녹색 합리주의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산업주의와 자본주의를 변형하여 환경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담론을 말한다.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산업주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변형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는 ‘강한 생태적 근대화’ 담론이 여기에 포함된다(Christoff, 1996). 이 뿐만 아니라 유럽의 녹색당, 에코 맑스주의 담론도 녹색 합리주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 녹색 합리주의는 녹색 낭만주의와 달리 근대의 성과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찰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자연을 다시 마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탈마술화의 과정을 더욱 급진화하여, 근대성과 합리성을 생태적으로 재구성하는 담론을 녹색 합리주의라 부를 수 있다. 녹색 합리주의 담론에는 속의 민주주의와 담론 민주주의를 생태적으로 급진화하는 생태민주주의 담론이 포함된다(드라이젝, 2005).

14) 김지하가 단군을 강조하는 것은 그의 생명론이 낭만주의와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15)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녹색 합리주의 담론도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

녹색연합은 4대 강령으로 생명존중, 생태순환형 사회 건설, 비폭력 평화의 실현, 녹색 자치의 실현을 제안한다. 환경정의는 ‘환경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 초록정치연대는 생명, 평화, 풀뿌리, 지구, 나눔, 미래, 성평등, 다양성 등 8가지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를 천명한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통해 성장과 경쟁의 논리를 극복하는 것, 중앙집권과 가부장주의를 넘어 풀뿌리와 여성의 활력으로 사회를 이끄는 것, 나눔을 통해 지구의 이웃과 생태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미래에 대한 고려가 행동의 원리가 되고 다양성이 창조적 힘의 원리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초록정치연대 창립선언문, <http://www.greens.or.kr/bbs/metro1> 2005. 10).

우리나라의 환경운동가들 가운데에는 산업주의와 자본주의의 변형을 위해 운동하고 있다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혹은 한 사람 가운데에서도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지속가능발전 담론과 녹색 합리주의 담론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 합리주의 담론이 진화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첫째, 녹색 합리주의 담론은 개발 지상주의, 경제 지상주의적 정부정책에 부분적으로 제동을 거는 데 성공했다. 댐개발정책, 도시개발정책,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립, 간척사업, 자연보호정책 등을 개선하는 데 녹색 합리주의가 많은 기여를 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기업에 대한 감시, 고발, 불매운동 등의 활동은 기업이 산업주의와 자본주의의 병폐를 줄이도록 만드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

셋째, 정부정책의 변화, 시민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바꾸어 나가는 데 기여했다. 쓰레기 분리배출, 자전거 타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같은 생활 속의 실천운동은 산업주의적 생활양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녹색 합리주의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녹색 합리주의 담론은 자본주의와 산업주의를 어떻게 변형시켜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철학과 비전의 부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구조적 제약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변형의 상상력은 아직 무르익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녹색 합리주의는 녹색 낭만주의의 근본주의 담론과 지속가능발전 담론의 현실주의 담론 속에서 동요하고 있다.

둘째, 한국에서 녹색 합리주의는 제도화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도구적 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녹색 합리주의는 관료화와 제도화를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운동조직들은 스스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스스로 제도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 딜레마에 놓인다. 산업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효율적인 조직을 동원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스스로 산업주의와 관료주의의 덫에 걸린다. 자기혁신과 자기성찰

은 녹색 합리주의의 핵심 규범이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5. 생태 민주주의를 통한 생태적 근대화의 급진화

우리는 앞에서 네 가지 환경담론을 살펴보았다. 생태권위주의를 제외한 세 담론은 모두 성과와 한계를 갖고 있다. 나는 세 담론 가운데 녹색 합리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것이 근대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소통과 토론을 통해 생태주의와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녹색 합리주의는 정치적으로 올바르면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산업주의를 변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녹색 낭만주의의 비판과 성찰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녹색 낭만주의 담론은 녹색 합리주의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상상력의 뿌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¹⁷⁾.

녹색 합리주의는 어떻게 산업주의를 변형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태적 근대화론과 생태 민주주의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먼저 생태적 근대화 담론을 살펴보자. 마틴 예니케(Martin Jänicke)에 의하면 생태적 근대화는 “환경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수반하는 기술변화를 통해서 산업화를 지속할 수 있는 것” 이다(이상현, 2003: 292). 달리 말하면 “장기적인 환경보호는 생태적 근대화이며, 산업사회의 구조변경이고, 나아가 정치적 행위체계의 근대화” 라고 할 수 있다(예닉, 1995). 생태적 근대화 개념은 논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피터 크리스토프(Peter Christoff)는 이 담론을 ‘약한 생태적 근대화’ 와 ‘강한 생태적 근대화’ 로 나누어서 유형화했다.

약한 생태적 근대화는 환경문제를 기술적 해결에 중점을 둔다. 또한 과학, 경제, 정치 엘리트들이 독점하는 기술지배적, 조합주의적 스타일의 정책결정이다. 약한 생태적 근대화는 특권적인 선진국들이 빈곤한 국가들과 차이를 더 크게 벌리도록 한다.

반면 ‘강한 생태적 근대화’ 는 사회의 제도적 구조와 경제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변화를 고려하고, 의사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열려있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중시한다. 또한 환경과 개발의 국제적 차원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형태의 정치-경제-생태적 발전을 고려한다.

약한 생태적 근대화 담론은 환경관리주의 담론이나 지속가능발전 담론과 별로 다르지 않다. 약한 생태적 근대화 담론의 관점에서 보면, 과학기술 전문가, 행정 전문가들에 의해 잘 기획된 예방정책은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며 산업주의와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고 그것은 바람직하면서 동시에 가능한 일이다.

17) 녹색 낭만주의의 헌신적 실천과 각성이 없다면 녹색 합리주의 담론과 행동 공간은 크게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낭만주의의 급진성이 대중적 소통에 실패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가슴과 머리의 균형이 녹색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달리, ‘강한 생태적 근대화’ 담론은 근대화를 급진화시킴으로써 생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서구 중심의 이성에 독점적 권위를 부여하던 근대화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근대화를 근대화하려는 담론 전략이 그 속에 있다.

〈표 3〉 생태적 근대화의 유형

약한 생태적 근대화	강한 생태적 근대화
경제학적	생태학적
기술주의적(좁은)	제도적/체계적(넓은)
도구적	소통적
기술관료적/신조합주의적/폐쇄적	숙의(deliberative)민주주의적/개방적
국가적	국제적
단일한(헤게모니적)	다양한

출처: Christoff(1996: 490)

‘강한 생태적 근대화’가 녹색 합리주의의 핵심 담론이라면, 이 근대화 담론은 산업주의를 변형할 수 있는가? 근대의 핵심 특성인 산업주의를 변형하기 위해 다시 생태적 ‘근대화’ 담론을 제안하는 것은 근대화로 근대를 변형하는 역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역설은 근대가 가져온 합리성(마술로부터의 탈피)과 성찰성(자기비판)을 급진화함으로써 근대의 산업주의와 자본주의를 변형하는 담론 전략이다. 다시 말하면 근대를 산업주의와 자본주의로부터 구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근대화는 성찰성의 증대, 수용력을 넘어서는 생산과 소비의 통제, 과학기술의 생태적, 민주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결과이다. 이것을 우리는 ‘성찰적인 생태적 근대화’라고 부를 수 있다.

성찰적인 생태적 근대화 담론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정부관료와 시장은 자신들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생태적 근대화를 지지한다. 자본의 지구화 속에서 국민국가의 세계 금융자본에 대한 자율성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생태적 근대화의 물적 근거는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경향이 정당성 혹은 담론의 근거까지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생태적 근대화를 급진화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권력을 매개로 기능하는 국가나 화폐를 매개로 기능하는 시장 체계에서 그 힘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시민사회의 생태화 혹은 녹색화를 통해서 산업주의를 합리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담론적 실천적 힘이 나올 수 있다.

시민사회의 녹색화를 이끄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녹색 낭만주의자가 강조하듯이 종교적 체험, 각성, 영성 같은 것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녹색화를 이끄는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담론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나와 나 아닌 세계/자연

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자연을 신비화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확산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특히, 속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인권 확산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담론은 민주주의의 복합성을 입헌주의 혹은 선거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허약한 민주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는 길은 속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급진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속의 민주주의는 합리적 토론과 숙의를 통해 소수자의 이해와 가치를 배려하면서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확보하는 민주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속의 민주주의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구나 참여하여 숙의하고 토론하는 절차이다. 정당한 숙의 절차를 거친 의사결정은 국가와 공론장에서 공적으로 인정되고 실행된다¹⁸⁾. 여기서 좋은 절차는 공평하고 평등하며, 억압적이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Dryzek, 2000: 174). 속의 민주주의자들은 강제 없이 누구나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선호를 바꿀 수 있고 좋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드라이젝에 의하면 “시민성(civility)과 호혜성(reciprocity)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속의 그 자체를 해 보는 것”이다(Dryzek, 2000: 169).

속의 민주주의를 절차적 정당성으로 환원한다면 생태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이 보장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속의 민주주의의 토론의 장에 인간이외의 비인간세계가 참여할 수도 없고, 이들의 이해관심이 체계적으로 대변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의의 과정은 계속될 것이고 녹색 합리주의자는 더 많은 의사소통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보다 공평하게 소통할 수 있는 생태적 합리성¹⁹⁾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인간중심적 정치구조는 점차 생태합리적인 생태 민주주의적 정치구조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구조에서는 마치 장애인, 극빈층과 같은 최소수혜자에 대한 최대 배려의 원칙이 인간사회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고려한 취약한 생물종에게도 엄격히 적용될 것이다. 지구의 생태계 평형이라는 목표는 경제적 목표보다 우선될 것이다. 이러한 변형을 이루는 것은 물리적 힘이 아니라 담론의 힘이다. 이 때문에 녹색 합리주의자는 속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속의 민주주의를 발전시

18) 문순홍은 ‘녹색 공영역’ 개념을 제안하면서 생태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으로 강조했다(문순홍, 2000)

19) 생태적 합리성은 생태계의 균형을 행위의 규범적 근거로 전제하는 가치합리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생태적 합리성은 지구적인 생태위기라는 실존적 조건 속에서 생겨나지만 이것을 성찰적으로 인식하는 인간의 반성능력을 바탕으로 발전한다. 생태적 합리성은 도구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바탕을 두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보다 보편적인 합리성이다. 이것은 도구적 합리성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전제하는 인간중심주의를 반대하되 동시에 녹색 낭만주의의 생명의 특권화, 신비화도 반대한다.

켜 생태적 합리성이 절차와 내용 두 측면에서 모두 보장되는 생태 민주주의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녹색 합리주의는 속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생태 민주주의의 절차와 제도를 통해 성찰적 생태적 근대화를 발전시켜 생태적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담론이자 실천이다. 녹색 합리주의자는 올바른 속의 과정이 공론장에서 지속되면 사회적 학습능력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생태적 합리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2004년 말 참여연대 시민과 학센터에서 추진한 ‘전력 정책에 관한 합의회의’의 결과는 속의가 선호를 바꿀 수 있으며 생태적 합리성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행복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²⁰⁾ ‘성찰적 생태적 근대화’가 녹색 합리주의의 물질 기반이라면 생태 민주주의는 그것을 이끄는 정치적 구조이다.

6. 녹색 대안을 찾아서

한 쪽에는 거대한 시장 체계가 있고 다른 한 쪽에는 사회와 자연이 구석에서 있다. 사회와 자연을 살리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장 안에서 시장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 밖에서 사회와 자연을 지키는 것이다.

환경재단이 시장 안의 전략을 택했다면 지울스님은 시장 밖의 전략을 택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일하고 있다. 시장의 안과 밖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사람들과 어울리며 좀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대안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다. 지역화페운동(대전 한밭렛츠), 의료생협(안성), 흥성 문당리 사례, 광명 YMCA 등대생협, 성미산 사례, 한살림 등 많은 사례들이 시장의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호혜적인 사회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자연을 지키고 살리는 실험들을 성공하고 있다. 단지 생산자, 소비자가 아니라 생활인이면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역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여기서 시장과 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힘이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조금씩 바꿀 때 지역이 바뀌고 국가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생태주의와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만 자신감이 생기고 활기가 생긴다. 대안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실천할 수 있을 때 자라날 것이다.

20) 원자력과 직접 관계가 없는 시민 16명이 참여해 원자력 찬반 전문가로부터 자료를 받고, 전문가 의견 청취와 질의, 응답, 자체 토론을 통해 “가동 중인 기존 원전을 무조건 중지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원전의 신규건설을 중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반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04년에 추진한 한탄강댐 조정사례는 속의의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참여자들 사이의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절차에 대한 부분적 합의는 전체적인 합의형성에 이르는 한 가지 조건일 뿐이다.

지금까지 주류 환경운동은 위로부터 국가를 공격하면서 환경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데 힘을 집중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런 노력은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는 자리를 잡았다. 권력균형, 부패, 인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사람들의 정치체계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높고, 민주주의에 대한 체감 만족도는 떨어진다. 오히려 권위주의의 유혹은 커져가고 있다.

환경은 어떠한가? 생태계에 대한 경제의 압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주변 환경은 일부 좋아지고 있다. 공원이 생기고 하천은 여가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청계천과 양재천은 지방에도 생기고 있다. 환경오염사고가 사람들의 공분을 낳는 시대는 지나갔다. 환경 웰빙족들은 늘고 있지만 환경운동가에 대한 지지는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운동은 스스로 발전하여 ‘천성산’과 ‘지울스님’과 같은 담론과 실천이 나타났다.

이러한 주류 환경운동의 흐름과는 거리를 두면서 아래로부터의 녹색화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한살림, 홍성군 홍동면 농촌공동체, 성미산, 광명 Y 등대생협 같은 사례들이 ‘지역’에서 자라왔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녹색화의 특징은 국가와 시장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주된 목표와 전략이 아니라 스스로 도우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연대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근대사회의 전통적 권위에 바탕을 둔 기계적 연대와도 다르고 근대사회의 경제적 이익에 바탕을 둔 계약적 연대와도 다르다. 이러한 연대의 핵심은 ‘생명/생태와 호혜적인 협력’이다. 이것이 아래로부터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녹색 연대의 특성이다. 누구에게 무언가를 공격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래로부터 녹색화와 위로부터의 녹색화는 성격은 다르지만 녹색이라는 의미에서는 크게 보아서 같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두 길은 모두 시장과 국가 중심의 체계를 변형하여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미래를 향한 길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다. 철학, 담론, 자원동원방식, 참여자의 특성이 모두 다르지만 이 두 길은 서로 협력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²¹⁾

그러면, 위로부터의 녹색화를 생각해보자. 시장 경제의 지배아래 경쟁국가로 기능하고 있는 국가체계를 어떻게 녹색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가능한 일인가? 나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활력 있는 시장경제를 유지하면서도 사회가 살아나서 시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면서 자연을 지키는 국가들을 우리는 스웨덴, 네덜란드 등 북유럽과 서유럽 몇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의 특징은 계급갈등을 타협으로 풀어가면서 ‘생태적 현대화’를 통해 환경을 잘

21) 녹색연합은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백년계획, 성미산 생태마을기 등의 연구에 참여하여 이 두 흐름을 함께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보전한다는 점이다. 자기조정적 시장이 사회와 자연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질주하지 않도록 하는 힘을 이 나라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국가, 정치체제, 경제체제를 어떻게 녹색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와 같이 거시적인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운동은 이 문제에 집중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 시민사회가 미성숙한 상황에서 위로부터 구조와 제도를 바꾸는 전략이 비용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를 보면서 이러한 위로부터의 변화 모델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녹색은 이러한 전략으로부터 두 번 패배했다. 위로부터의 국가 개혁 모델의 실패와 함께 개발 동맹에 의한 패배를 함께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녹색은 아래로부터의 녹색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 아래로부터의 녹색화는 어떠한가? 생태공동체 운동, 지역화폐, 생협운동, 마을만들기 같은 아래로부터의 녹색화는 비교적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녹색화가 지역과 국가 수준으로 그 영향력이 확산되어 왔는가?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아래로부터의 녹색화 실험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지역과 국가의 구조를 녹색으로 바꾸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경제, 사회, 문화체제가 모두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수준 혹은 공동체 수준의 녹색은 스스로 존속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우리에게는 아래로부터의 녹색화와 위로부터의 녹색화를 매개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위에서 아래로 향하고 밑에서 위를 향하는 소통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녹색 공론장은 이러한 소통 속에서 녹색 대안을 찾는 마당이다. 국가, 경제, 시민사회를 모두 녹색으로 점차 바꾸어 나가는 과정은 구불구불 돌아가는 먼 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도완. 1990. “1980년 ‘서울의 봄’ 시기의 이데올로기 지형”, 『경제와 사회』, 제4호. 이론과 실천.
- 구도완. 1996.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문학과지성사.
- 구도완. 2004. 「개발동맹과 녹색연대: 담론구성체 연구」. 《에코》 제7호. pp.43-77.
- 구도완. 2006. “환경운동의 담론: 낭만주의와 합리주의”, 『경제와 사회』 제69호.
- 김종철. 1999. 『간디의 물레』. 녹색평론사.
- 드라이제크, 존 S. 2005. 정승진 역. 『지구환경정치학 담론』. 에코 리브르. John S.

- Dryzek, 1997. *The Politics of the Earth: Environmental Discourses*. Oxford University Press.
- 문순홍. 2000. “민주주의와 환경 결합 논의들의 재구성: 생태민주화의 설계도 그리기”. 《한국정치학회보》 34집. 2호.
- 이상현. 2003. 『세상을 움직이는 물』. 이매진.
- 예닉, 마틴. 1995. “서구 산업사회의 생태정치적 근대화”. 문순홍편역. 1995.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생태전략』. 도서출판 나라사랑.
- 조명래. 2001. 『녹색사회의 탐색』. 한울.
- 지울스님과 도롱뇽의 친구들. 2004. 『지울, 숲에서 나오다』. 도서출판 숲.
- 최병두. 1999. 『환경갈등과 불평등』. 한울.
- 플라니. 『거대한 변환』.
- 한면희. 2004. 『초록문명론』. 동녘.
- Christoff, Peter. 1996. *Ecological Modernization, Ecological Modernities, Environmental Politics*. Vol.5, No.3, Autumn. pp.476-500.
- Dryzek, John. 2000.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echeux, Michel. 1982.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New York. St. Martin's Press.



토 론 문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 구도완 박사의 발제와 관련해서 당면한 운동의 공통과제이자 핵심 과제가 시장과 개발주의, 성장주의라는 것에 동의함. 노동, 농민, 시민운동이 환경운동과 함께 시민 사회의 핵심세력이지만 지배적인 개발 담론구성체에 깊이 포섭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함. 80년대 이후 민주화 과정을 통해 개발독재형 성장패러다임에서 독재는 해체되었지만 개발, 성장 패러다임은 여전히 강력한 지배 이데올로기로 존재함. 운동 진영은 정치적 억압, 노동 배제, 인권 문제 등 성장의 이면과 과정의 문제라는 우회로를 통해 그 정당성을 문제 삼아 독재체제를 해체했으나 박정희 시대의 본질인 개발 성장주의를 극복하지 못함. 이로 인해 3만불 시대론과 같은 '수출 100억불 -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식의 박정희식 구호가 한 세대를 지난 21세기에도 국정 운영 목표가 되고, 대중적 정치 슬로건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

○ 발제자는 환경운동의 담론을 유형화하여 정리하고, 운동의 발전과 변화를 이와 연관지어 분석하였음. 그러나 이런 분석이 다소 도식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운동의 변화와 한계는 지배적 담론의 문제와 운동주체의 실천적 문제, 운동의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이 상호작용하며 나타나는 것임. 90년대 굴업도 투쟁, 동강 반대운동과 참여정부 하에서의 방폐장 투쟁, 새만금 반대운동의 양상과 결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그 사안이 지닌 성격이나 운동의 담론 보다는 주체와 조건의 문제가 주된 것으로 보임. 90년대 이후 환경 운동의 대중적 동의 기반의 약화 역시 환경운동의 담론이 생태주의로 진화해서라기보다는 운동주체와 조건의 문제임. 이와 관련해서 조건의 변화는 객관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90년대 환경 운동의 실천과 전략에 대해서는 현안 중심의 성과에 집착하여 장기적인 대중적 동의 기반의 확보를 위한 담론의 사회화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봄.(이는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운동 일반에 대한 토론자의 반성이기도 함) 또한 늘 환경 운동의 가장 큰 한계라고 생각해 온 시장,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와 행동의 부족은 운동주체의 지배적 담론의 문제로 환원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 지속가능발전론의 한계 지적은 일면 수긍함. 그러나 성장 없는 진보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수용' 될 수 있는가, 성장을 배제한 생태주의가 현실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임. 녹색합리주의와 지속가능발전론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특히 현실적으로는 어떤 차별성이 드러나는지도 의문임. 녹색합리주의, 속의 민주주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호함. 국민국가 단위에서 민주주의와 정치의 과정은 선거라는 절차와

의회라는 대의제 기구와 정당과 같은 제도화된, 혹은 비제도화된 조직을 기본 요소로 함.

○ 지속가능발전론, 녹색 낭만주의, 녹색 합리주의가 현실에서는 혼재되고, 대립되고 갈등하면서도 상호 작용을 함. 운동적으로도 각각은 나름의 의미가 있으며 개별주체와 단체는 어떤 주된 경향을 선택할 수 있으나 운동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담론을 대안으로 할 이유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듯 함.

운동의 제도화 위험은 상존함. 그러나 운동의 제도적 성과와 일정 수준의 자기 제도화(관료화)가 다른 운동(환경운동의 경우 녹색 낭만주의, 녹색 합리주의 같은)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함. 근본주의적 운동은 늘 매력적이고 개량형의 조직은 이에 대해 늘 부담을 느끼지만 그것이 가까운 미래에 대중적으로 수용되어지고 대중운동화 되지는 않음. 운동 주체가 근본주의에 전체적으로 경도되면 운동이 고립됨. 개인과 단체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전체 운동속에서 개인과 각 단체가 성격과 조건, 구성원의 지향, 사회적 역할에 따라 자신의 담론을 구성하고 추구하면 되고, 이것의 총합으로서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짐. 여러 환경단체와 개인들이 모여 하나의 대안을 모색할 이유가 없음. 성찰을 위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다른 담론과 그 역할을 과도하게 비판할 이유는 없음.

이런 점에서 위로부터의 녹색화와 아래로부터의 녹색화를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시민사회가 미성숙한 조건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위로부터의 녹색화를 평가하고 그러나 위로부터의 녹색화가 한계에 이르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래부터의 녹색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견해에 동의함. 이는 시민사회운동 일반의 문제임(녹색화를 민주화로 바꾸면 그대로 타당함)

○ 최근 시민운동, 진보운동의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음. 막연한 위기론을 전제로 한 대안 논의에 앞서 위기의 실체와 그 원인을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함. 또 지역 생활 운동론, 네트워크형 운동론, 전문화론, 각론적인 정책 능력 강화론 등 위기의 원인과 대안을 단순화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 그러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총론의 위기임. 즉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특히,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비전의 부재가 위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함. 운동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그 비전은 대중이 이해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이런 점에서 사민주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 물론 사민주의는 동아시아적, 한국적 특수성 속에서 21세기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함. 조희연 교수의 생태평화사민주의론은 그 시도라고 봄. 그러나 사민주의의 국가주의적 경향과 생태주의, 평화주의의 탈국가적(탈국민국가적) 경향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

해명해야 함.

○ 진보운동이 직면한 가장 큰 화두는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라고 생각한다. 과연 한국사회의 발전 단계, 시민사회의 성숙정도를 판단할 때 시민사회가 시장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임. 현재로는 시장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국가를 매개로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양극화 문제의 해결, 사회, 경제적 개혁의 주체는 국가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국가 개입의 정당성 옹호가 당면 과제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결론적으로 현실에서 개발성장주의의 담지자이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국가의 이중성을 고려하여 한편으로 국가의 역할을 능동화 하면서도 국가주의적 한계를 극복하는 탈국가화된 대안과 이를 위한 운동이 공존하며 상호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와 관련된 운동주체의 다양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개인과 단체마다 가치와 지향, 자신의 역할 규정에 따라 결정할 일임.



이제는 녹색주의를 이야기 할 때다.

최승국(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o 시민운동의 위기, 한국사회의 위기

· 한국사회의 위기 징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형식상의 민주화는 이루어졌으나 민주주의라는 그릇을 채울 내용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의 광풍과 보수진영의 역공에 의해 한국사회 전체는 위기를 맞고 있다.

· 분단체제에 근거한 냉전 이데올로기의 극복, 재벌개혁, 언론개혁, 관료사회의 개혁 등 오랜 개혁과제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양극화의 심화, 끝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실업자의 증가, 경기침체를 등에 업은 각종 개발정책들.

· 참여정부의 실패, 민주정부의 한계 :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듯이 민심은 참여정부를 완전히 떠났고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보수로의 회귀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히 노무현 정부의 무능 때문만이 아니라 6월 항쟁의 성과를 이어갈 제대로 된 개혁세력들의 자리매김에 실패했기 때문이며, 개혁의 과제를 또 다른 보수의 뿌리를 이어오고 있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이들 집단들은 최장집 교수가 밝히고 있듯이 과거의 박정희 독재정권이나 이를 이어오고 있는 한나라당에 비해 개혁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뿌리인 한민당의 보수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과거 독재정권에 반대하기 위해 선택한 알은 진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시민운동의 위기 :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다양성과 진보를 이끌어왔던 환경운동을 포함한 시민운동도 빠른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동시에 언론과 보수진영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대중성의 약화, 도덕성과 정당성의 타격을 받고 있다.

· 위기의 근본 원인, 방향성 상실 : 한국사회 위기의 원인은 경기침체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가야할 방향성(비전)을 잃어버렸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희망을 찾을 곳을 함께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o 진보담론이 돌아와야 한다.

· 신자유주의 대 공세와 진보 담론의 부재 : 분단 이데올로기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80년 전까지 진보 담론의 형성 자체가 거의 불가능 하였다. 그러다 80년대 NL과 PD로 대별되는 진보 담론 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의 담론 논쟁은 대중성과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극단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나마도 민주화 이후 진보세력들이 다음 과제를 수행하지 않

은 채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버리게 되고 이와 더불어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진보 담론은 거의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이와는 반대로 보수진영의 회귀와 이들에게 이론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논리는 우리 사회전체를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 진보 담론의 필요성 : 담론이 전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담론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운동의 자기 논리 확보로써, 또한 현장(풀뿌리 운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로써 담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이 시대의 요구에 맞는 올바른 진보 담론의 형성은 절실하다. 그리고 이는 현장의 운동(실천)과 결합했을 때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 우리 사회의 방향성 제시를 통한 희망의 재발견 : 앞에서 한국사회 위기의 원인을 방향성 상실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가야할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담론의 형성과 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성장과 부의 실현만이 지고지선의 가치가 아닌 모든 생명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담론이 만들어지고 사회 속으로 깊이 확산되어 갈 때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o 왜 녹색주의인가!

- 80년대 거친 수준에서 진행되었던 진보 담론은 90년대 IMF 경제위기와 함께 위기를 맞는다. 그러다 지난 총선에서 진보성을 갖는 민주노동당이 첫 원내 진출에 성공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진보진영의 논쟁이 조심스럽게 다시 살아나고 있다. 논쟁이 돌아온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현재까지의 논쟁은 여전히 과거의 논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성장을 골간으로 한 인간의 이해관계만을 따지고 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쟁의 중심에는 사민주의(사회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하다. 사민주의는 스웨덴의 복지국가, 독일의 적록연정에서처럼 현존하는 국가나 정치체제, 사회 속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녹색주의 담론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사민주의가 우리사회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채워 갈 녹색주의와 연대 또는 결합할 방안은 없는지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근본의 문제에 접근하면 사민주의도 인간의 이해관계를 벗어난 생명 자체에 대한 존중과 생태계의 순환문제는 자리를 잡기 어려워 보인다. 사민주의는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뿌리내리기 어려운 근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직 반공이 테올로기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속에서 그 내용이 아무리 옳고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도 사민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한 이 담론은 전체 대중들에게 설득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공이데올로기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만 이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한국사회에 필요한 담론은 새롭고 통합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사민주의를 포함한 인간 중심의 담론이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해 왔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는 물론이고 사회주의조차 그 중심에는 오로지 경제성장과 부의 축적, 부국강병의 논리만 존재해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체제하에서 인류의 진정한 행복은 실현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인류간의 투쟁과 불평등이 가속화되어 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자연생태계는 이용과 약탈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인류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경제가 아무리 성장하고 한국인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불이 된다고 한들, 또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갈등이 사라진다고 한들 생명의 가치가 무시되고, 인간이 밟히고 살아갈 수 있는 자연환경,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인류의 생존을 허용하지 않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류와 생태계 문제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이 논쟁의 중심에 들어올 필요가 있다.

· 환경운동(녹색운동) 담론의 다양성 : 환경관리주의, 근본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 지속가능발전론, 녹색낭만주의, 녹색합리주의, 그리고 생태평화사회민주주의

환경운동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음에도 환경운동 담론은 매우 다양하다. 발제를 맡은 구도완 박사의 경우도 다양한 담론을 설명하고 그중 녹색합리주의를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작고하신 문순홍 박사의 경우 근본생태주의와 사회생태주의 담론을 무척 있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론은 현재 환경운동 진영은 물론이고 정부와 기업들도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사민주의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론은 어쩌면 지금 시기에 가장 힘을 받고 있는 담론일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론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어 녹색운동 진영이 대표 담론으로 채택하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 정부와 기업 측에서 이 담론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원래 (우리 공동의 미래, 리우 환경선언 등에서 나타난) 이 담론이 갖고 있었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녹색담론의 통일의 필요성 : 학문의 측면에선 다양하게 담론을 분류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운동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는 복잡 다양한 이론의 분화는 대중들의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대안 담론으로써의 힘을 갖기도 어렵기 때문에 운동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잘 들여다보면 각각의 담론들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점들이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분리되어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격을 동시에 보이면서 활동하게 된다. 예를 들면, 녹색연합의 경우 문순홍 박사의 분류에

따르면 근본생태주의 성격도 있고 사회생태주의 성격도 있으며, 구도완 박사의 분류에 따르면 녹색낭만주의와 녹색합리주의 모습을 동시에 또는 각 각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역시 이번 토론의 발제를 맡은 조희연 교수가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생태평화 사회민주주의’도 시민주의와 생태주의의 결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토론회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 보아야 할 대목이자 담론 논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녹색담론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담론들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의 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담론을 정하고 이를 적극 알려내는 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새롭게 녹색담론을 이야기하고 확산하려는 것은 단순히 환경운동을 위한 논거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사실 환경운동에 필요한 논리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 전체 사회를 관통하는 새로운 사조,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작업이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가는 일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대한 역사의 도전인 것이다.

· 녹색주의를 천명하자 : 새로운 비전, 가능성, 희망의 선언

이러한 의미에서 담론은 좀 넓고 그 안에서 다양성이 포용될 수 있는 범위에서 개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념은 하나의 상징이자 깃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녹색주의>라는 다소 포괄성이 강한 언어로 담론을 규정하고 그 속어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갖는 방향으로 각종 이론을 재정립할 필요가 강하게 요구된다.

o <녹색주의>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 비전과 희망 : 큰 그림 그리기, 부문간 역할 분담

우리 사회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는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도 희망도 제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문에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녹색운동 진영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의 큰 비전, 큰 밑그림을 같이 그려 나갈 것을 제안한다. 진보진영이 하나의 생각과 논리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전체 사회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진영이 모여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을 논의하고 이에 맞는 밑그림을 그린 다음 각 부문이 어떻게 이를 실행해 나갈지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쉽게 퍼즐에 비유해서 설명해보자. 각 진영이 각각의 조각 퍼즐을 갖고 전체 그림을 맞추어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전체 퍼즐의 그림을 먼저 완성(제시)하고 각 운동진영이 각각의 조각에 해당하는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면서 전체 사회 모습을 변화,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이 쉽지 않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우리 당대에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난 이 일을

시작하고자 한다.

- 우리가 새롭게 그리는 세상은 누누이 강조했듯이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인간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고 생태계의 순환이 보장되는 사회여야 한다. 그렇다고 인간과 자연이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보아서도 안 되며, 산업주의를 무조건 비난하거나 경제발전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즉, 인간과 자연이 균형을 이루면서 공존, 번영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근본생태주의나 생태낭만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오류를 벗어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론이나 녹색합리주의가 갖는 한계인 철학과 비전의 부족도 극복 할 수 있다.

- 경제, 사회, 정치 구조의 변화

녹색주의를 이야기 할 경우 당연히 사회, 경제, 정치 구조를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모든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 시기에서 생태계의 순환이 보장될 수 있는 경제 체계를 어떻게 꾸려갈 것이며, 시장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 속에서 인류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행복을 보장할 것인지, 우리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정치구조와 국가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에서는 경제를 중심으로 녹색주의 담론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 즉, 녹색경제를 주제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며, 녹색정치, 녹색국가에 대한 논의도 녹색운동 진영과 함께 차분하게 풀어갈 계획이다.

- 어느 사회, 어느 담론이나 마찬가지로 의사결정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 나는 구도완 박사가 발제문에서 다룬 생태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간을 제외한 못 생명들과 직접 소통할 수 없기에 합리성을 갖춘 토론과 숙의를 통해 현재 생태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생물 종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중심의 사회, 정치구조가 합리성을 갖춘 생태민주주의로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녹색주의의 길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나는 생태민주주의라는 또 다른 용어로 녹색운동을 설명하는 것은 대중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녹색주의라는 큰 틀 속에서 의사결정 방식으로 숙의 민주주의를 설정하는 수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 국가와 지역의 변화 : 발제자가 위로부터의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변화, 국가와 시장 안에서의 변화와 시장 밖의 변화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아래로부터의 녹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녹색주의 담론, 녹색사회의 모습을 그리면서 위와 아래, 국가와 지역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역의 실천이 중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변화시켜 내고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녹색운동의 확산, 녹색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면에서는 문당리, 성미산, 한살림, 생협운동과

같은 형식뿐만 아니라 행정단위 중심의 녹색화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녹색연합 사무실이 있는 성북구나 성미산 마을이 있는 마포구, 문당리 생태공동체가 있는 홍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화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 조승현 박사는 생태공동체 운동과 같은 방식의 운동을 ‘2% 운동’ 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2%에게만 영향을 주는 운동으로서는 세계 전체가 하나의 시장으로 되어 있는 현 사회를 근본으로부터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한다. 더디고 영향이 작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98%와 함께 녹색의 길을 가려는 운동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녹색운동은 우리만의 고민으로 끝나고 또 다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을 우려한 내용이다. 이 지적이 함의하는 내용이 많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녹색운동 진영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해답을 마련하여야 한다.

o 녹색주의로 가는 길

- 녹색담론의 주류화와 일상화

우리가 가야할 방향성으로써 녹색주의를 수면위로 등장시키고 이것이 소수만의 외로운 주장이 아닌 우리 사회의 주류 담론으로 만들어 가는 활동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일상 속에서의 녹색주의의 실천, 즉 녹색의 일상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기존 질서에 대한 배척과 고립이 아닌 포용할 수 있는 대안 담론 및 세력화

녹색주의 운동은 현재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하나 이는 산업주의와 경제성장을 포함한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는 방식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내용의 발전을 하지 못했던 것도 과거에 대한 부정은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그림을 정확히 그려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녹색주의는 현재까지의 인류 역사를 냉철하게 분석하되 이를 포용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세력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담론과 현장의 만남, 다양한 세력과의 연대(녹색연대)

녹색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담론과 현장이 철저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담론을 바탕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현장이 강화되어야 하며, 현장에서의 실천을 바탕으로 담론이 다시 강고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문당리, 성미산, 함평군(나비) 등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범 사례들을 잘 정리하여 이를 확산해 나가는 활동이 적극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모범들을 많이 발굴해 나가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력의 확산 속도에 비해 녹색 세력들의 행보는 너무 느린 감이 있다. 이러한 모범 사례의 발굴과 더불어 전체 민주세력, 진보세력과의 연대, 즉 녹색연대를 강하게 진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